<6411지표> 개발 연구

2026. 5.

<6411지표> 개발 연구

2026. 5.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는 노회찬재단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노회찬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1장. 서론 --- 1

2장. 기존 지표 현황 --- 3

1. 고용 --- 4
2. 임금 --- 11
3. 소득 및 지출 --- 14
4. 자산 및 부채 --- 20

3장. <6411지표> 제안 --- 25

1. 소득 --- 25
2. 자산 --- 48
3. 고용 및 임금 --- 60

4장. 결론 --- 67

참고문헌 --- 70

1장. 서론

한국 사회에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그중에서도 노인은 얼마나 가난할까? 남성과 여성의 소득·빈곤 격차는 얼마나 클까? 한국 사회의 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자원, 특히 소득의 분배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약 이만 가구의 표본에 대해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소득 및 자산 실태, 소득분배지표 등을 집계한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공표한다. 예를 들어, 2024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전체 인구 15.3%, 노인 35.9%, 여성 17.1%였다(국가데이터처, 2025i, 2025j, 2025k). 또한 2011~2024년 동안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8.5%에서 15.3%로, 노인 빈곤율은 46.5%에서 35.9%로, 여성 빈곤율은 20.3%에서 17.1%로 줄어들었다(국가데이터처, 2025i, 2025j, 2025k). 소득분배지표 외에도 임금, 고용, 자산 등 여러 영역에서 순자산 지니계수, 고용률 및 실업률, 저임금 근로자 비율 등의 다양한 지표가 집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위임금 2/3 미만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대체로 감소하였고(OECD, n.d.b), 임금 5분위배율 역시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임금 분배의 개선 추세가 중단되었다(국가데이터처, n.d.b.).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증가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5r).

이처럼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여 공표하는 소득분배지표 및 각종 소득·자산·고용·임금 통계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단면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통계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소득분배지표 통계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나 노인이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기존 통계에서 전체 인구와 성별·연령별 빈곤율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빈곤율의 격차는 확인할 수 없다. 지역 간 빈곤율의 격차 역시 집계되지 않는다.

기존 통계의 한계는 개념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조사 데이터의 항목과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교육수준을 초/중/고/대학/대학원의 범주로 조사하기 때문에 학벌이나 전공에 따른 소득·빈곤 격차를 분석할 수 없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집단의 평균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복횡단 성격의 조사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개인의 소득·빈곤 지위 이동을 분석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표본의 규모가 약 이만 가구이기 때문에, 시도 단위 집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시군구 단위의 자세한 통계를 산출하기도 어렵다. 물론, 성소수자, 청소년 한부모, 100세 이상 초고령 노인 등 규모가 매우 작은 집단을 분석하기도 어렵다.

둘째, 현재 조사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통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배지표 통계는 OECD의 지침에 따라 성별·연령별 통계 작성에 집중하고 있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으

로 노동시장 지위나 지역별 소득·빈곤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내에서 개별 가구원의 소득을 개인 단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가구 단위의 합산된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내에서 합산하지 않은 개인 단위의 소득을 활용한 분석도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6411지표>를 몇 가지 제안하고 시산한다.

<6411지표>를 검토할 때는 지표로서의 안정성 및 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데이터가 수집한 수많은 정보를 가공하여 집계할 수 있는 모든 통계치를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한국 사회의 빈곤율이 증감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심층분석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제의 분석 결과를 지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간단한 성별 소득·빈곤 격차 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젠더 현상의 한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그 추이를 모니터링할 만한 사회적·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몇 가지 제안하고 분석한다.

2장. 기존 지표 현황

2장에서는 기존 지표의 현황을 살펴본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영역은 다양하다. 2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용, 임금, 소득 및 지출, 자산의 네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대표적인 지표, 혹은 주목할 만한 지표들을 2~4개씩 살펴보겠다. 각각 지표들의 개념과 특징, 의미, 자료원을 살펴본 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겠다. 지표 추이는 원칙적으로 1990년 이후 최근까지의 기간을 점검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대부분 2000년대 이후 통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료가 가용한 수준에서 가장 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표를 분석했다. 지표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기존 지표 현황

구분	지표	정의	산식	출처
I. 고용	1)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a)	고용률 = (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100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2)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6a).	실업률 = (만15세이상 실업자수÷만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100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3) 비정규직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b).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비정규직근로자수÷전체 임금근로자수)×100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4) 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국가데이터처, 2025c).	임금근로자 월간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 일자리 만족도	취업인구 중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d).	일자리만족도는 취업 중인 사람들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II. 임금	1)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f)	저임금근로자비율 =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수÷전체 임금근로자수)×100.	OECD, 「Benefits, earnings and wages」
	2) 월평균 임금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국가데이터처, 2025g)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직전 연도 연간특별급여)÷12개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III. 소득 및 지출	1)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i)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 미만 인구÷전체 인구)×100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2)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0은 완전균등, 1은 완전불균등)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표 2-1> 계속

구분	지표	정의	산식	출처
III. 소득 및 지출	3) 소득만족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l)	소득만족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4) 소비생활 만족도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o)	소비생활만족도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IV. 자산 및 부채	1) 가계부채비율	가계부채총액의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q)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 (가구부채총액÷가구순가처분소득)×100	OECD, 「National Accounts」
	2) 순자산 지니계수	자산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	순자산을 기준으로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0은 완전균등, 1은 완전불균등)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3)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전체 순자산 총액에서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태직, 2021, p. 75)	해당 분위의 순자산 총액÷전체 분위의 순자산 총액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4) 가구 순자산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가구의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국가데이터처, 2025t)	가구순자산 = 가구자산-가구부채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출처: 이번 장의 모든 그림과 표의 내용 종합해서 연구진이 작성함.

1. 고용

1) 고용률

고용률은 가장 흔히 쓰이는 고용 관련 지표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a)이다. 만 15세는 통상적으로 중등 의무교육이 종료되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잠재적으로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1973년 ILO의 '최저연령 협약(No. 138)'은 청소년의 완전한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최저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근로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ILO, 2018). 만 15세는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최소 연령으로 간주된다. 참고로, 국내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OECD 기준 고용률에서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인구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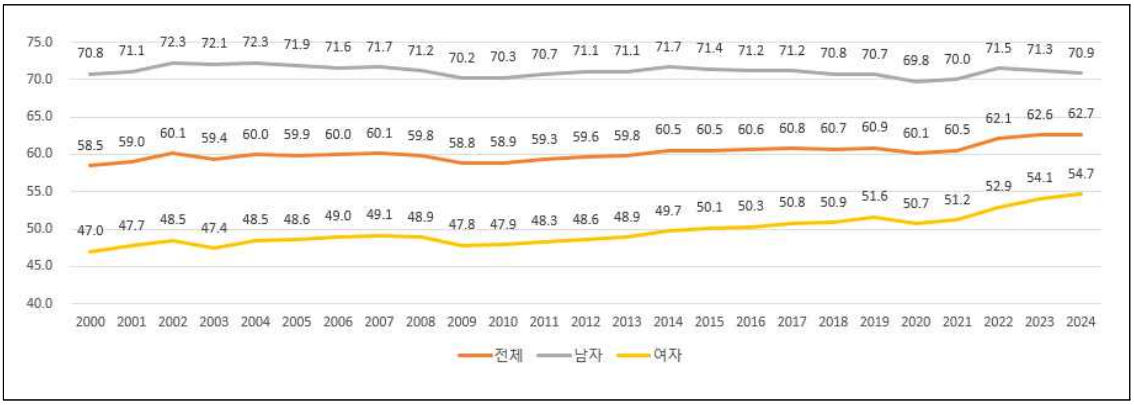
고용률 지표의 의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국가데이터처, 2025a)는 점이다. 과거에는 고용 지표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많이 사용했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한계 때문에 고용률 지표가 더 자주 활용된다(국가데이터처, n.d.a).

고용률 추이를 보겠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58.5%에서 2024년 62.7%로 10%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그림 2-1> 참고).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여성 고용률의 증가가 있었다.

남성 고용률이 70% 초반 수준에서 횡보하는 동안, 여성 고용률은 24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해서 47.0%(2000년)에서 54.7%(2024년)으로 7.7% 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표 2-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5~19세 인구의 고용률은 6.4%로 낮았다. 다른 근로연령대 집단(30~59세)의 고용률은 80%를 전후한 수준을 유지했다.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45.9%였다. 노인 고용률이 2000년 37.6%였던 점을 고려하면, 노인 집단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그림 2-1> 고용률 (2000~2024년)

(단위: %)



출처: "고용률", 지표누리 국민 삶의 질 지표, 2025a, 국가데이터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08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표 2-2> 성별 및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전체	58.5	60.1	60.0	60.0	59.8	58.9	59.6	60.5	60.6	60.7	60.1	62.1	62.7
남자	70.8	72.3	72.3	71.6	71.2	70.3	71.1	71.7	71.2	70.8	69.8	71.5	70.9
여자	47.0	48.5	48.5	49.0	48.9	47.9	48.6	49.7	50.3	50.9	50.7	52.9	54.7
15~19세	10.3	9.3	8.4	6.7	5.9	6.1	7.0	7.7	8.0	7.4	6.6	8.0	6.4
20~29세	60.2	61.4	61.2	60.2	59.4	58.4	58.2	57.4	58.2	57.9	55.7	60.4	61.0
30~39세	72.5	73.0	72.7	73.3	73.0	72.0	72.8	74.1	74.7	75.7	75.3	77.3	80.1
40~49세	76.5	77.5	77.4	77.8	78.4	77.9	78.3	79.1	79.3	79.0	77.1	78.1	79.1
50~59세	66.5	68.2	68.0	68.6	70.5	70.9	72.3	74.2	74.3	75.2	74.3	77.1	77.5
60세이상	37.6	38.7	37.3	37.5	37.3	36.2	37.7	39.0	39.5	40.1	42.4	44.5	45.9

출처: "고용률", 지표누리 국민 삶의 질 지표, 2025a, 국가데이터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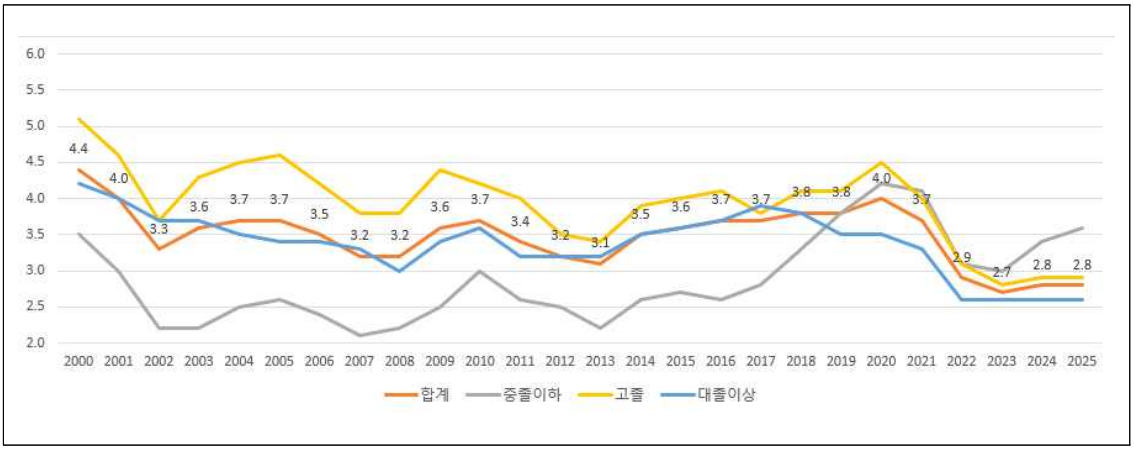
2) 실업률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국가데이터처, 2026a)이다. 여기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즉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국가데이터처, 2026a)이다. 이러한 실업률 지표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수입 있는 일"의 기준이 느슨해 보이기 때문이다. 즉, 1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통계는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집계 방식 때문에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생도 취업 인구로 포함된다. 실질적인 실업 인구를 포괄하지 않는 지표라는 지적이 생길 수 있다.

<그림 2-2> 학력별 실업률 (2000~2025년)

(단위: %)



출처: "성/교육정도별 실업률", KOSIS, 2026a,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MT_ZTITLE%26list_id%3DB15%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A7103S%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101%26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주: 그림의 수치는 전체 인구 합계 기준임.

<표 2-3> 성별 및 학력별 실업률

(단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전체	전체	4.0	3.6	3.7	3.2	3.6	3.4	3.1	3.6	3.7	3.8	3.7	2.7	2.8
	중졸이하	3.0	2.2	2.6	2.1	2.5	2.6	2.2	2.7	2.8	3.8	4.1	3.0	3.6
	고졸	4.6	4.3	4.6	3.8	4.4	4.0	3.4	4.0	3.8	4.1	4.0	2.8	2.9
	대졸이상	4.0	3.7	3.4	3.3	3.4	3.2	3.2	3.6	3.9	3.5	3.3	2.6	2.6
남성	전체	4.5	3.8	4.0	3.7	4.1	3.6	3.3	3.6	3.8	3.9	3.6	2.6	2.8
	중졸이하	4.3	2.8	3.7	2.9	3.5	3.4	3.1	3.6	3.2	4.6	4.3	3.5	3.9
	고졸	4.8	4.5	4.7	4.3	5.0	4.3	3.6	4.1	4.1	4.4	4.0	2.8	3.1
	대졸이상	4.1	3.4	3.2	3.3	3.4	3.0	3.1	3.3	3.7	3.3	3.1	2.4	2.4
여성	전체	3.3	3.3	3.4	2.7	3.0	3.1	2.8	3.5	3.5	3.6	3.8	2.8	2.8
	중졸이하	2.0	1.7	1.7	1.4	1.6	2.0	1.5	1.9	2.3	3.0	3.8	2.7	3.3
	고졸	4.3	4.1	4.4	3.1	3.5	3.5	3.1	3.9	3.3	3.6	3.9	2.7	2.6
	대졸이상	3.9	4.2	3.8	3.2	3.5	3.5	3.4	4.0	4.3	3.8	3.7	2.8	2.7

출처: "성/교육정도별 실업률", KOSIS, 2026a,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MT_ZTITLE%26list_id%3DB15%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A7103S%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101%26

주: 지면의 한계 때문에 홀수년도만 제시함.

정부의 실업 기준은 ILO의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보는 것은 한 나라의 총 생산에 기여한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총 노동투입량을 파악하기 위함"

(고용노동부, 2021.6.24.)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도 공식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로 '확장실업률'을 매월 고용동향에서 함께 공표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장실업률은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이 가능한 자'(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해서 새롭게 산출한 지표다. 확장실업률은 실업률보다 대체로 높다. 이를테면, 2025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6.1%지만, 확장실업률은 16.0%다(국가데이터처, 2026b).

한국의 실업률은 2024년 기준으로 2.8%다(OECD. 2026). OECD 회원국의 2024년 평균이 4.9%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안정적이다(OECD. 2026). 물론, 한국에서도 집단에 따라 실업률 수준은 다르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졸 이하 학력 집단의 실업률이 3.6%로 평균을 상회했다(<표 2-3> 참고).

3)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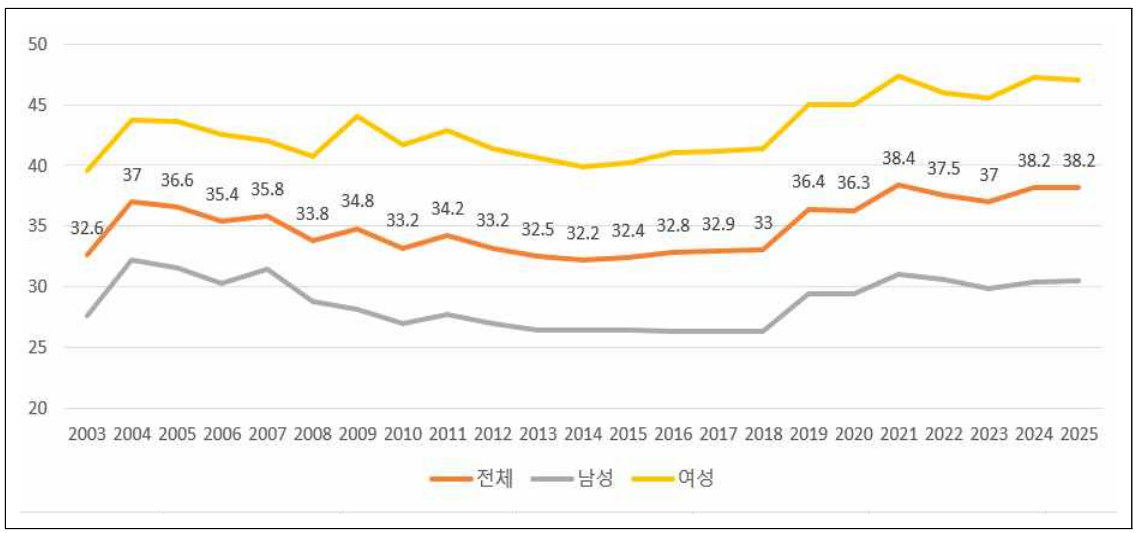
<표 2-4> 비정규직 유형별 정의

비정규직 유형	정의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함.

출처: "비정규직근로자비율", 국가데이터처, 2025b,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

<그림 2-3> 성별 비정규직 비율 (2003~2025년)

(단위: %)



출처: "비정규직근로자비율", 국가데이터처, 2025b,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주: 2019년 통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돼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짐, 그림의 수치는 전체 인구 합계 기준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b)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한다. 각각의 정의는 <표 2-4>와 같다. 세 가지 범주의 비정규직 유형이 상호배타적이지는 않다(국가데이터처, 2025b).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3년이다. 국가데이터처(2025b)는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부터는 이전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규모가 추가된 결과, 2018년과 2019년 통계에는 일정한 단절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4~2018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9년 이후로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녀 집단 사이의 격차도 컸다(<그림 2-3> 참고).

<표 2-5>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2003~2025년)

(단위: %)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전체		32.6	36.6	35.8	34.8	34.2	32.5	32.4	32.9	36.4	38.4	37.0	38.2
남성		27.6	31.5	31.4	28.1	27.7	26.4	26.4	26.3	29.4	31.0	29.8	30.5
여성		39.6	43.6	42.0	44.0	42.9	40.6	40.2	41.2	45.0	47.4	45.5	47.0
연령대	15~19세	62.5	70.3	71.0	75.0	69.6	74.8	74.3	73.4	77.8	85.1	89.0	87.0
	20~29세	29.6	33.0	31.4	31.6	31.6	31.1	32.1	33.1	38.3	40.0	40.3	43.9
	30~39세	26.3	30.3	29.8	25.2	24.4	22.2	21.2	20.6	23.7	23.0	21.6	23.5
	40~49세	31.2	36.3	34.0	32.3	30.5	27.2	26.0	26.0	27.0	28.6	26.3	24.7
	50~59세	40.0	43.0	42.8	40.6	39.7	37.1	34.6	33.9	35.5	35.9	33.2	33.0
	60세이상	65.8	66.7	66.0	72.6	70.6	67.3	67.2	67.3	71.6	73.7	68.7	69.9

출처: “비정규직근로자비율”, 국가데이터처, 2025b,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
주: 지면의 제약으로 홀수년도만 제시함.

4)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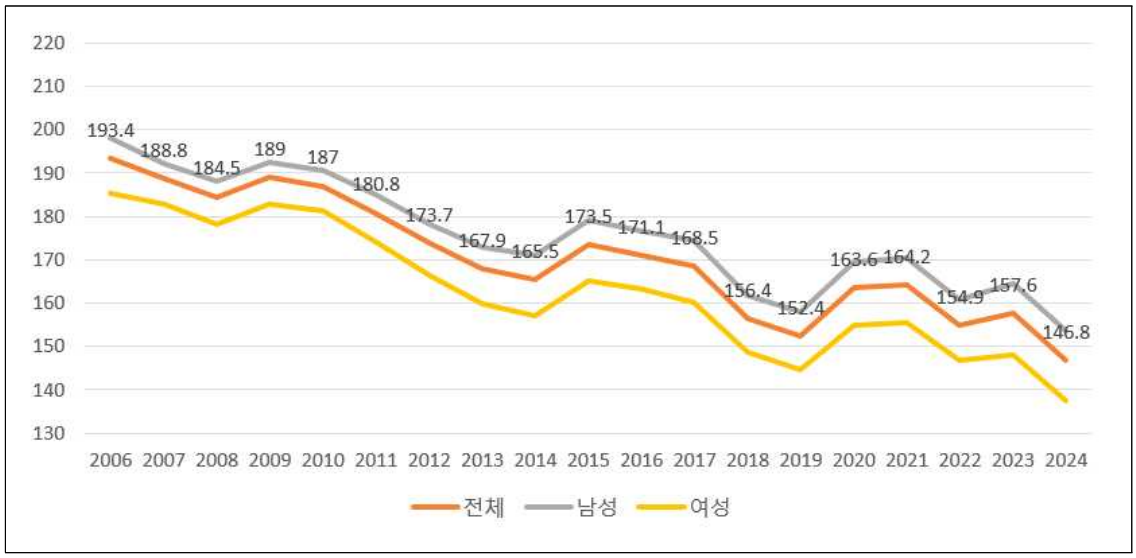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국가데이터처, 2025c)이 활용된다.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국가데이터처, 2025c)를 의미한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낮추고,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축에 속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지난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다음 일곱 번째로 높다(OECD, n.d.a). OECD 평균 1,740시간을 상회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 2025c). 2006년 193.4시간에서 2024년 146.8시간으로 대략 47시간이 줄었다. 한국의 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뒤늦은 감이 많지만, 정책적인 노력도 배경에 있었다.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일제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2009년, 2015년, 2020년에는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그림 2-4> 참고). 당시 증가분은 월 8~11시간 정도다. 앞선 해 대비 평일의 수, 그

리고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2-4> 성별 근로시간 (2006~2024년)

(단위: 시간)



출처: "근로시간", 국가데이터처, 2025c,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17&upCd=3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주: 그림에서 수치는 전체 평균의 수치임.

<표 2-6> 성별/연령별 근로시간 (2006~2024년)

(단위: 시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전체		193.4	184.5	187.0	173.7	165.5	171.1	156.4	163.6	154.9	146.8
남성		198.0	188.2	190.6	178.3	171.0	176.5	161.8	169.5	160.8	153.8
여성		185.3	178.3	181.2	166.4	157.1	163.2	148.6	155.0	146.7	137.4
연령대	15~19세	186.9	178.6	180.3	166.6	158.3	163.1	149.1	155.7	147.8	139.3
	20~29세	192.3	183.1	187.6	176.5	170.0	177.8	162.5	173.4	163.2	155.9
	30~39세	195.5	186.8	189.2	175.9	167.6	174.7	159.2	168.8	160.0	152.9
	40~49세	198.9	189.3	190.5	175.4	165.8	170.4	157.1	162.0	155.1	148.6
	50~59세	219.1	203.1	192.8	169.8	158.6	159.6	146.1	148.4	141.6	131.0

출처: "근로시간", 국가데이터처, 2025c,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17&upCd=3
주: 지면의 제약으로 짝수년도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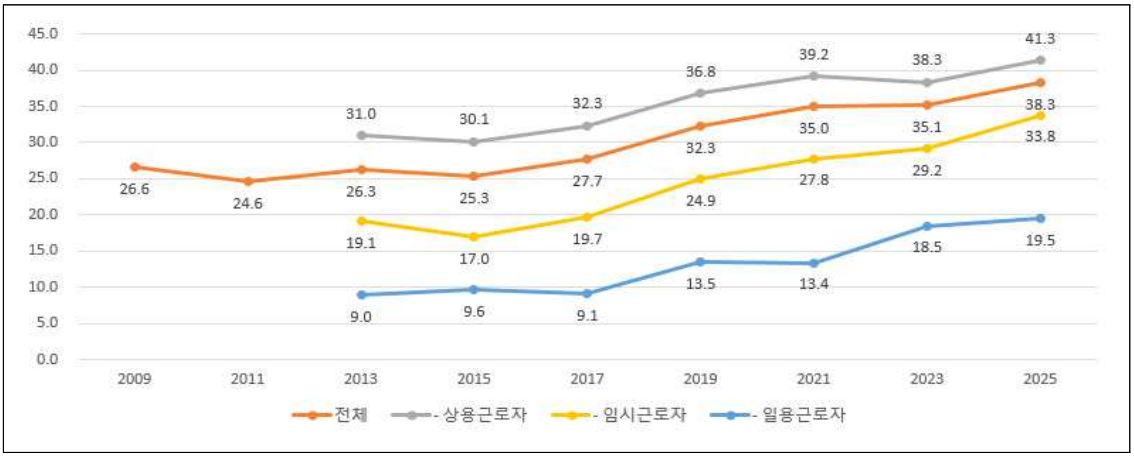
5)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는 "취업인구 중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d)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에서 "취업 중인 사람들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d)로 계산된다. 앞서 다른 고용 관련 지표와 달리, 응답자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한다. 2009년에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했고,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국가데이터처, 2025d).

사회조사에서는 근로여건을 임금, 복리후생 등 11개 영역에서 만족도를 설문한 뒤,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묻는다. 여기에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⑥ 모르겠다, ⑦ 해당 없다의 선택지 가운데, ①~②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로 일자리 만족도가 산출된다.

<그림 2-5>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만족도 (2009~2025년)

(단위: %)



출처: "근로여건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2025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D213_2009%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SSLA0812R%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주: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만족도는 kosis에서 2013년 이후 자료만 확인됨.

<표 2-7> 종사상 지위별/연령별 일자리 만족도 (2009~2025년)

(단위: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전체		26.6	24.6	26.3	25.3	27.7	32.3	35.0	35.1	38.3
성별	상용근로자	-	-	31.0	30.1	32.3	36.8	39.2	38.3	41.3
	임시근로자	-	-	19.1	17.0	19.7	24.9	27.8	29.2	33.8
	일용근로자	-	-	9.0	9.6	9.1	13.5	13.4	18.5	19.5
연령	20세미만	15.2	23.1	24.3	17.4	28.2	33.3	42.3	35.4	41.0
	20~29세	27.9	26.2	27.1	25.2	27.3	32.9	35.8	37.5	41.0
	30~39세	28.4	24.8	28.2	27.7	31.1	34.3	36.2	34.7	39.0
	40~49세	26.9	25.3	27.5	27.1	29.7	33.8	39.2	36.9	40.0
	50~59세	24.1	23.9	23.4	23.1	24.8	31.1	34.7	34.3	38.4
	60세이상	19.6	18.0	20.5	19.7	20.9	26.5	25.1	31.4	32.8

출처1: "근로여건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2025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D213_2009%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SSLA0812R%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출처2: "일자리만족도", 국가데이터처, 2025d,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19 출처1과 출처2의 자료를 합해서 제시함.

주: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만족도는 kosis에서 2013년 이후 자료만 확인됨.

일자리 만족도는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6.6%이던 평균 만족도 비율은 2025년에는 38.3%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유사하게 관찰된다. 증가폭은 임시근로자가 14.7% 포인트로 가장 컸고, 일용근로자(10.5% 포인트)와 상용근로자(10.3% 포인트)는 증가폭이 비슷했다. 물론, 일자리 만족도에서 집단간 격차는 꾸준하게 유지됐다. 상용근로자의 2025년 만족 비율은 41.3%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층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다. 20세 미만과 20대의 만족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세 미만 집단의 경우, 만족 비율이 2009년 15.2%에서 2025년 41.0%로 비율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60세 이상 집단에서 일자리 만족 비율이 32.8%로 가장 낮았다.

2.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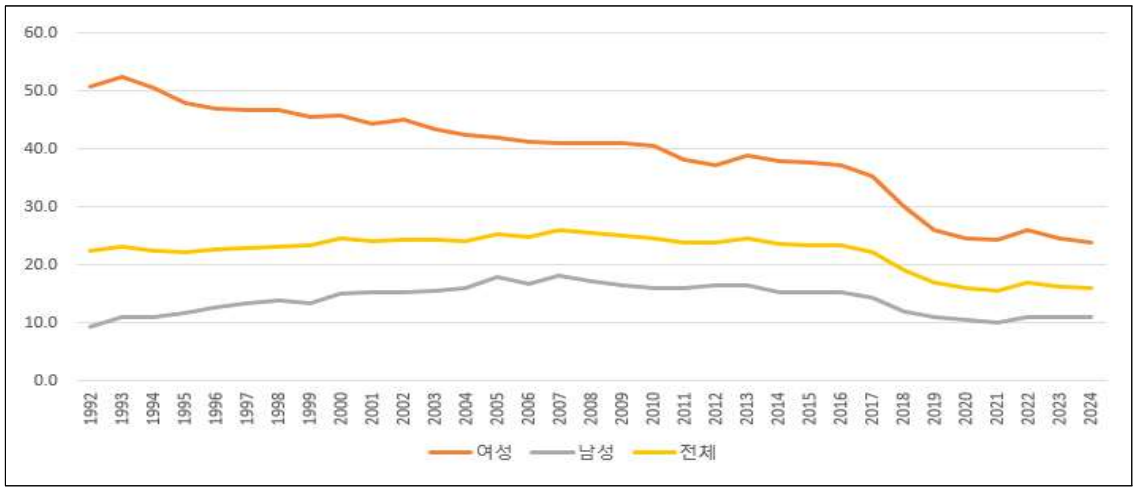
1)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f)이다. 저임금근로자비율은 임금 소득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국가데이터처, 2025f)으로 이해된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국가데이터처(2025f)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독특하게도 OECD(n.d.b)를 인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저임노동자비율이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제시하는 지표누리에서도 공식 지표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그림 2-6> 저임금근로자 비율 (1992~2024년)

(단위: %)



출처: “Incidence of low and high pay”, OECD, n.d.b,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PAY_INCIDENCE&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ARNINGS%40PAY_INCIDENCE&df[ag]=OECD.ELS.SAE&df[vs]=&pd=1985%2C&dq=KOR%2BOECD.LP_I....._T&ly[rw]=REF_AREA&ly[cl]=TIME_PERIOD&to[TIME_PERIOD]=false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00년에는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4.2%로 OECD 회원국 평균(16.0%)를 크게 상회했다(OECD, n.d.b). 한국의 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지난 2017년 이후 눈에 띄게 하락했다. 특히 2017~2019년 사이에 비율이 22.3%에서 17.0%로 5% 포인트 넘게 하락했다(<그림 2-6> 참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율은 16.2%로 여전히 OECD 평균(12.7%)보다는 높다.

1990년대 이후의 추이를 보면, 한국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의 감소세가 크게 부각된다. OECD(n.d.b)에서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통계가 1985년 수치이고, 이후 1992년부터는 해마다 통계가 제시된다. 1992년에 여성 저임근로자 비율은 50.8%로 절반을 넘었지만, 2024년에 비율은 23.8%까지 떨어졌다(<그림 2-6> 참고).

<표 2-8> 성별 저임노동자비율

(단위: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여성	50.8	52.5	50.6	47.9	46.9	46.6	46.7	45.4	45.8	44.4	45.1
남성	9.4	11.1	11.0	11.7	12.7	13.3	14.0	13.4	15.1	15.3	15.4
전체	22.4	23.1	22.5	22.3	22.6	22.9	23.1	23.4	24.6	24.2	24.5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성	43.3	42.3	41.9	41.1	41.0	41.1	41.0	40.4	38.2	37.3	38.9
남성	15.7	16.0	17.9	16.8	18.1	17.1	16.5	16.1	16.0	16.5	16.6
전체	24.3	24.2	25.4	24.9	26.0	25.5	25.0	24.7	23.8	23.9	24.7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성	37.8	37.6	37.2	35.3	30.0	26.1	24.7	24.3	26.1	24.5	23.8
남성	15.4	15.2	15.3	14.3	12.1	11.1	10.5	10.2	11.2	10.9	11.1
전체	23.7	23.5	23.5	22.3	19.0	17.0	16.0	15.6	16.9	16.2	16.1

출처: “Incidence of low and high pay”, OECD, n.d.b,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PAY_INCIDENCE&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ARNINGS%40PAY_INCIDENCE&df[ag]=OECD.ELS.SAE&df[vs]=&pd=1985%2C&dq=KOR%2BOECD.LP_I....._T&ly[rw]=REF_AREA&ly[cl]=TIME_PERIOD&to[TIME_PERIOD]=fa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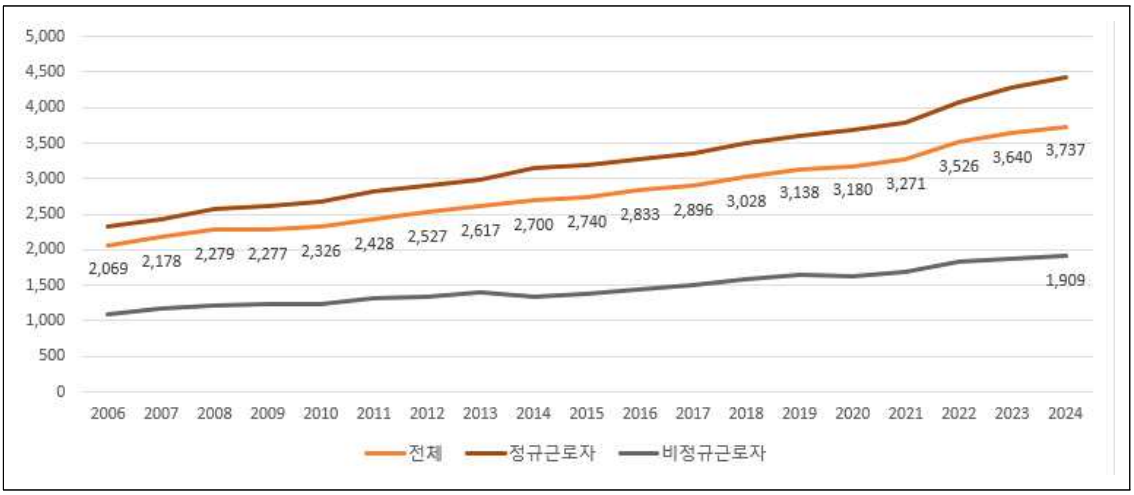
2) 월평균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물론, 일자리의 질은 근로시간, 근로여건, 노동에 따르는 위험 등의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임금 추이는 노동시장 안에서 개인과 집단의 불평등과 격차를 판단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가 된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월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국가데이터처, 2025g)이다. 이를 계산하는 식은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직전 연도 연간특별급여) ÷ 12개월”(국가데이터처, 2025g)이다. 여기에서 괄호 안의 세 가지 급여는 암묵적으로 연간 급여 총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급여 가운데 직전 연도 연간특별급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해 연도 기준 특별 급여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연간특별급여란 “급여지급 관계규정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하며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으로 구성”(국가데이터처, 2025g)된다. 통계는 임

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했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연도별 월평균 임금 통계에서,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을 제시한다.

<그림 2-7>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2006~2024년)

(단위: 천원)



출처: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국가데이터처, 2025h,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101_ATITLE_10_A001_B001%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18N_LCEA001%26vw_cd%3DMT_ZTITLE%26orgId%3D118%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주: 월임금총액(실질)은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

<표 2-9> 사업장 규모별/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2006~2024년)

(단위: 천원)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전체		2,069	2,279	2,326	2,527	2,700	2,833	3,028	3,180	3,526	3,737
규모	5인미만	1,180	1,332	1,364	1,505	1,566	1,696	1,848	1,993	2,192	2,291
	5~29인	1,891	2,133	2,168	2,311	2,425	2,546	2,798	2,989	3,201	3,367
	30~299인	2,300	2,622	2,666	2,834	2,998	3,125	3,400	3,455	3,766	3,991
	300인미만	1,818	2,042	2,077	2,253	2,372	2,510	2,706	2,840	3,133	3,291
	300인이상	3,520	3,732	3,775	4,154	4,750	4,954	4,964	5,371	5,823	6,258
고용형태	정규근로자	2,330	2,569	2,677	2,903	3,151	3,283	3,510	3,693	4,078	4,427
	비정규근로자	1,089	1,220	1,244	1,342	1,333	1,445	1,588	1,620	1,826	1,909

출처: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국가데이터처, 2025h,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101_ATITLE_10_A001_B001%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18N_LCEA001%26vw_cd%3DMT_ZTITLE%26orgId%3D118%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주1: 지면의 제약으로 짝수년도만 제시함.

주2: 월임금총액(실질)은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임금은 통계가 처음 제시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국가데이터처, 2025h). 2006년 206.9만원에서 2024년 373.7만원으로 80.6% 증가했다(<그림 2-7> 참고, 실질가격 기준). 연평균 3.3% 증가했다는 의미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교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각각 90.0%와 75.3%가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임금이 해당 기간 동안 94.2% 늘어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증가폭인 77.8%를 상회했다(<표 2-9> 참고). 대기업과 소기업 종사자 사이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3. 소득 및 지출

1) 상대적 빈곤율

<그림 2-8> 시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2011~2024년)

(단위: %)

출처: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국가데이터처, 2025j,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6%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표 2-10> 시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2011~2024년)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시장소득	19.7	19.2	19.3	19.9	19.7	20.0	19.9	20.2	21.0	21.7	21.1	20.2	19.9	20.9
	처분가능소득	18.5	18.1	18.2	18.1	17.4	17.4	17.0	16.5	16.1	15.1	14.8	14.9	14.9	15.3
노인	시장소득	57.0	55.6	55.8	56.2	56.9	57.7	57.0	58.9	59.2	59.0	57.9	57.1	55.5	54.9
	처분가능소득	46.5	45.2	46.2	44.4	43.1	43.5	42.1	42.0	41.4	39.1	37.6	38.1	38.2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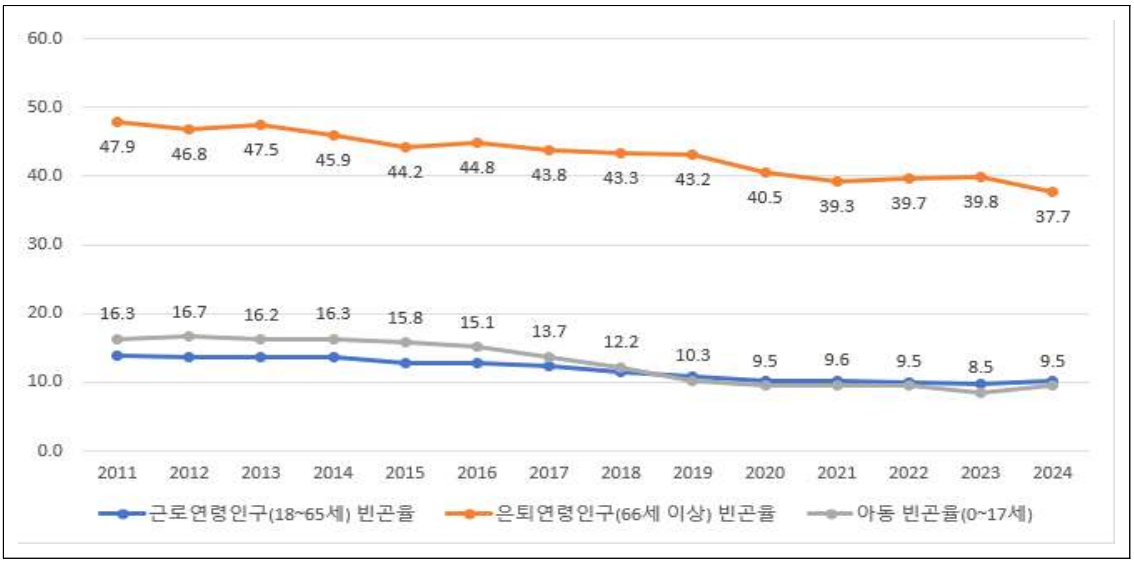
출처: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국가데이터처, 2025j,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6%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i)이다. 여기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마다 가구원수의 차이가 나는 특성을 고려해서 소득 수준을 조정한 값이다. 흔히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조정한 값이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와 5인 가구의 다른 규모를 조정해서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꾸준히, 완만하게나마 개선됐다. 먼저 전체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지난 2011년 18.5%에서 2024년에는 15.3%로 3.2% 포인트 감소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9.7%에서 20.9%로 1.3% 포인트 증가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증가는 시장에서 소득 분배의 악화 요인보다는, 고령 노인 증가 등과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이원진 외, 2022).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 감소폭도 줄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림 2-9> 연령대별 빈곤율 (2011~2024년)

(단위: %)



출처: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국가데이터처, 2025j,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6%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도 완화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4년에는 35.9%까지 떨어졌다. 13년 사이에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에스토니아(41.3%)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39.3%였다(OECD, n.d.c).

한국에서 연령대별 빈곤율을 보면, ‘빈곤의 고령화’ 경향은 분명하다. 특히, 2011~2024년 동안 66~75세 집단에서 빈곤율이 빠르게 완화하는 한편, 76세 이상 집단의 빈곤율은 55.5%에서 53.8%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표 2-11> 참고). 소득분배 개선의 온기가 후기 고령집단에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

<표 2-11>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2011~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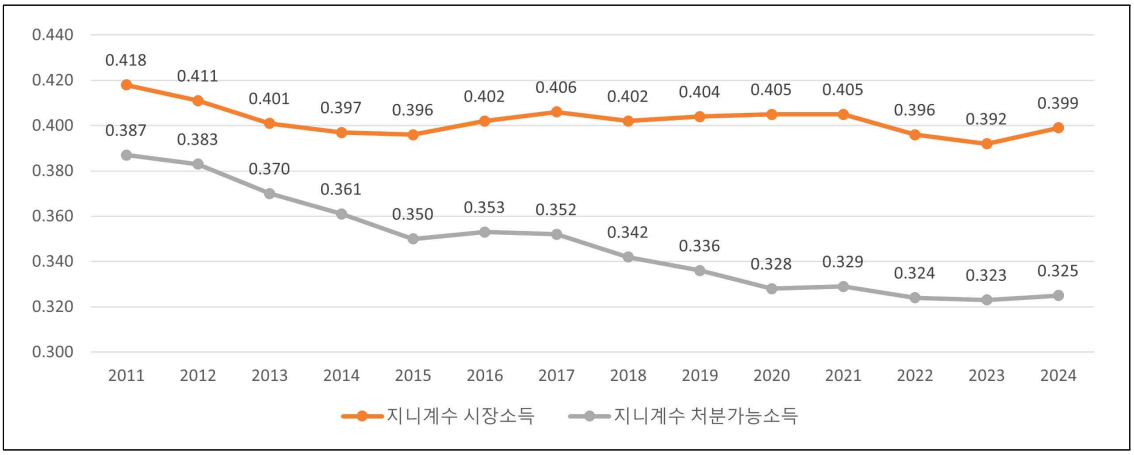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0~17세	16.3	16.7	16.2	16.3	15.8	15.1	13.7	12.2	10.3	9.5	9.6	9.5	8.5	9.5
18~25세	12.9	12.8	13.0	13.2	11.0	11.8	11.2	11.1	10.0	9.0	8.4	8.7	9.3	9.3
26~40세	12.0	12.2	11.5	11.8	11.4	11.0	10.9	9.3	8.6	7.9	8.5	7.6	7.0	8.0
41~50세	14.6	14.5	14.7	14.0	12.8	13.1	11.7	11.5	10.3	10.2	9.6	9.4	9.4	9.3
51~65세	16.1	15.0	15.3	15.4	14.9	14.4	14.4	13.4	13.3	12.7	12.3	12.6	12.6	13.1
66~75세	43.6	41.9	42.3	39.9	37.1	36.4	35.2	34.6	33.5	31.4	30.1	29.8	29.4	26.6
76세이상	55.5	55.0	55.7	55.2	54.9	57.2	56.2	55.0	55.9	52.5	51.9	54.0	54.6	53.8

출처: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국가데이터처, 2025j,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6%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2)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그림 2-10>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 (2011~2024년)

(단위: 포인트)



출처: “소득분배지표”, 국가데이터처, 2025k,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7%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다. 한 사회에서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경우, 즉 극단적인 불평등의 경우 지표는 ‘1’이 되고, 모든 사람이 소득을 동등하게 가져가는 극단적인 평등의 경우 지표는 ‘0’이 되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한 사회의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지니계수는 낮게 나타난다. 한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는 다양하다. 상대적 빈곤율도 소득분배지표 가운데 하나다. 다만, 빈곤율은 전체 성원 가운데 특정 빈곤 집단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불평등 지표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인구를 포괄하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는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있다. 그밖에 10분위 배율, 팔마 비율, 타일 지수 등이 있다. 각자 사회 성원

사이 소득분배 양상의 한 단면을 비춰준다는 점에서 각각의 의미와 한계가 있다.

지니계수가 소득 분배 지표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활용된다(Haughton & Khandker, 2009).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지난 2011년 이후 일부 등락이 있었지만, 길게 보면 완만하게 증가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기간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감소했던 추세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가 없었다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더욱 뚜렷하게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원진 외, 202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눈에 띄게 줄었다.

<표 2-12>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 (2011~2024년)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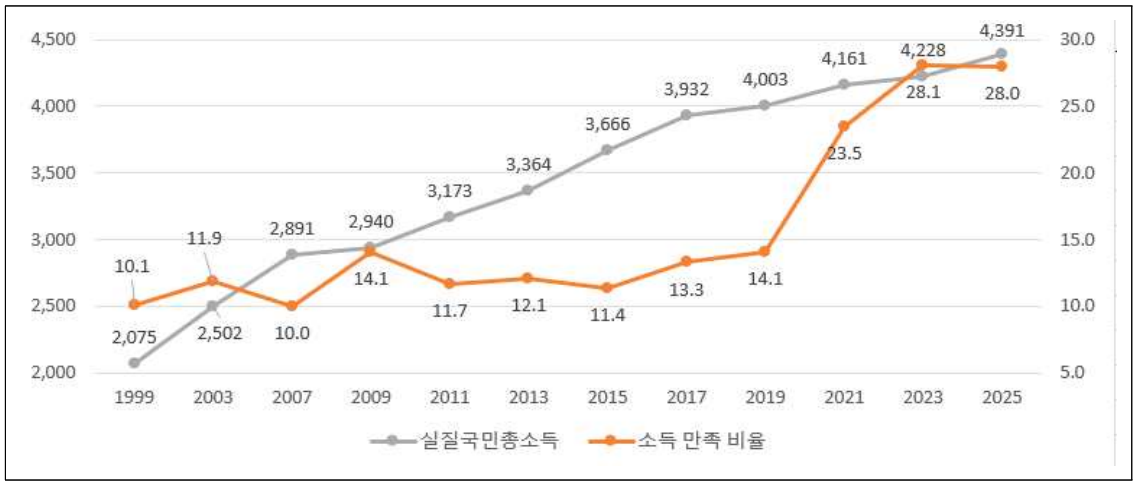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소득	0.418	0.411	0.401	0.397	0.396	0.402	0.406	0.402	0.404	0.405	0.405	0.396	0.392	0.399
처분가능소득	0.387	0.383	0.370	0.361	0.350	0.353	0.352	0.342	0.336	0.328	0.329	0.324	0.323	0.325

출처: “소득분배지표”, 국가데이터처, 2025k,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7%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3) 소득만족도

<그림 2-11> 실질 소득 증가 추이와 소득만족 비율

(단위: 만원, %)



출처1: “소득만족도”, 국가데이터처, 2025l,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8&idxCd=8006

출처2: “1인당 국민총소득”, 국가데이터처, 2025n.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8&idxCd=8086 두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진이 그림

주1: 왼쪽 Y축이 실질소득액이고, 오른쪽 Y 축이 소득만족비율임. 2025년에 표기된 실질소득액은 2024년 수치임.

주2: 소득 만족 비율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소득만족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국가데이터처, 2025l).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한번씩 설문한다. 1999년부터 통계가 집계된다. <표 2-13>에서는 KOSIS에서 한묶음으로 제시하는 2009

년 이후 통계만을 제시했다(국가데이터처, 2025m). 참고로,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국가데이터처, 2025l).

<표 2-13> 종사상 지위 및 가구소득에 따른 소득만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전체		14.1	11.7	12.1	11.4	13.3	14.1	23.5	28.1	28.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5.0	12.5	13.4	12.9	15.5	16.5	27.8	29.7	31.5
	고용주	26.3	23.6	20.7	20.5	21.3	22.6	29.8	38.7	41.4
	자영자	10.8	8.6	9.6	9.4	10.1	11.5	23.3	25.6	25.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	4.2	3.3	3.2	2.7	4.1	7.8	11.4	7.8
	100~200만원 미만	7.7	5.7	5.8	5.6	5.7	6.4	13.4	16.4	13.3
	200~300만원 미만	11.9	9.2	8.7	8.0	9.2	9.3	18.7	21.3	19.0
	300~400만원 미만	16.0	13.7	12.5	10.9	11.8	12.2	23.1	25.9	25.3
	400~500만원 미만	20.7	17.4	17.7	14.5	15.6	17.1	27.5	28.1	28.2
	500~600만원 미만	29.5	20.9	25.2	20.8	21.2	22.9	33.1	30.7	34.0
	600만원 이상	36.9	35.8	37.1	30.5	35.5	30.8	42.8	42.2	43.9

출처: "소득만족도(19세 이상 인구)", 국가데이터처, 2025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D212_2009%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SSIC050R%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주1: 표에서는 kosis에서 한묶음으로 제시하는 2009년 이후 통계만을 제시. 2009년에만 100만원 미만 집단으로 두 그룹 나누어서 제시해서 표에서는 빈칸으로 제시함. 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

주2: 국가데이터처(2025m)의 KOSIS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전체 인구들의 비율을 합한 값과 국가데이터처(2025l)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전체 인구의 소득 만족 비율이 0.1 자리에서 조금씩 다름. 두 가지 비율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반올림값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의 첫 번째 줄의 전체 비율만은 국민 삶의 질 지표(2025l) 수치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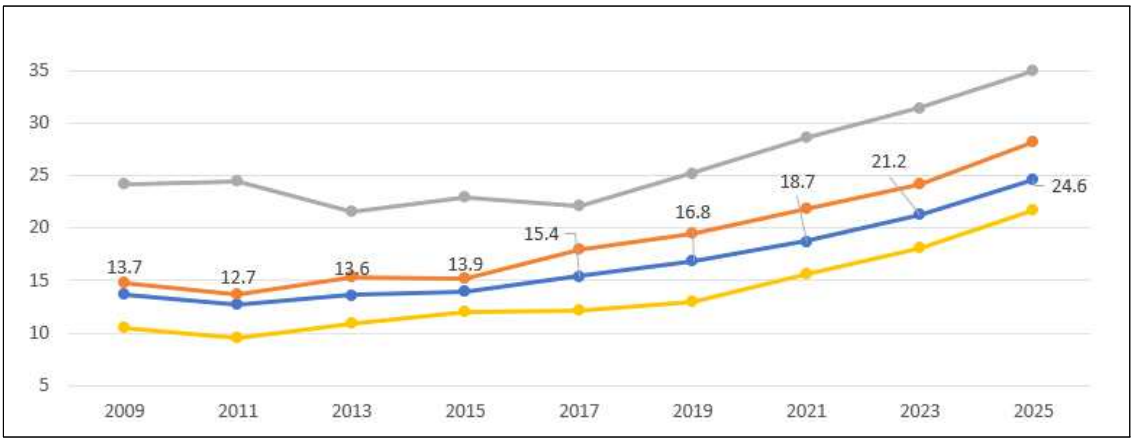
한국에서 소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소득 만족도는 2010년대 중반까지 오랜 기간 정체했다. 이를테면, 1999년 소득만족 비율은 10.1%에서 2015년 11.4%로 1.3%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이 1999년 2,075만원에서 2015년 3,666만원으로 대략 77%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5~2025년에는 반대로 나타난다. 즉, 실제 소득 증가는 상대적으로 정체했는데, 소득 만족도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수치를 보면,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2015년 3,666만원에서 2024년 4,391만원으로 19.8% 증가해서, 실질 소득 증가세는 둔화했다. 반면, 2015~2025년 소득 만족도는 11.4%에서 28.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2-11>에서 확인된다.

2015년 이후 소득만족도의 독특한 경향을 집단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표 2-13> 참고). 우선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집단별 차이는 크지만, 모든 집단에서 만족도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만족도를 보아도, 100만원 미만 저소득집단에서도 2015년 3.2%에서 2023년 11.4%까지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소득 증가가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소비생활 만족도

<그림 2-12> 소비 생활 만족 비율

(단위: %)



출처: "소비생활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2025p,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D212_2009%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SSIC060R%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주1: 전체 평균 비율에만 수치를 넣음.

주2: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표 2-14> 종사상 지위 및 가구소득에 따른 소비생활만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전체		13.7	12.7	13.6	13.9	15.4	16.8	18.7	21.2	24.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4.8	13.7	15.3	15.2	17.9	19.5	21.8	24.1	28.1
	고용주	24.2	24.4	21.6	22.9	22.1	25.2	28.6	31.4	34.9
	자영자	10.5	9.6	10.9	12.0	12.1	13.0	15.6	18.1	21.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	5.2	5.2	5.5	5.1	7.3	6.2	7.3	8.8
	100~200만원 미만	7.8	7.1	7.3	7.4	8.4	8.7	9.8	10.3	11.5
	200~300만원 미만	11.5	9.5	10.0	10.4	10.5	11.3	12.9	14.7	16.5
	300~400만원 미만	16.8	14.6	14.3	13.1	13.3	14.7	16.4	18.2	21.2
	400~500만원 미만	20.2	18.4	19.4	16.4	17.6	20.1	20.1	21.2	23.2
	500~600만원 미만	27.0	23.9	28.4	24.3	24.7	26.8	26.0	25.2	27.8
	600만원 이상	32.7	38.5	38.3	35.1	36.8	33.2	39.4	36.2	41.2

출처: "소비생활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2025p,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D212_2009%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SSIC060R%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주1: 표에서는 kosis에서 한묶음으로 제시하는 2009년 이후 통계만을 제시. 2009년에는 100만원 미만 집단으로 두 그룹 나누어서 제시해서 표에서는 빈칸으로 제시함.

주2: 국가데이터처(2025p)의 KOSIS에서 본인의 소비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혹은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전체 인구들의 비율을 합한 값과 국가데이터처(2025o)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전체 인구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이 0.1 자리에서 조금씩 다름. 두가지 비율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반올림값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의 첫 번째 줄의 전체 비율만은 국민 삶의 질 지표 수치를 따름.

소비생활 만족도는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o)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는 사회조사에서 1999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한다.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생활 만족도도 소득만족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2-12>에는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생활만족 비율는 10.6%에서 13.9%로 3.3% 포인트 상승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만족 비율이 24.6%까지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소비생활 불만족 비율도 더불어 살펴봤다. 중간의 '보통' 비율이 줄고, 만족과 불만족으로 만족도가 양극화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전체 인구 가운데 불만족의 비율은 2009년 40.2%에서 2025년 26.0%로 감소했다. 즉, 소비생활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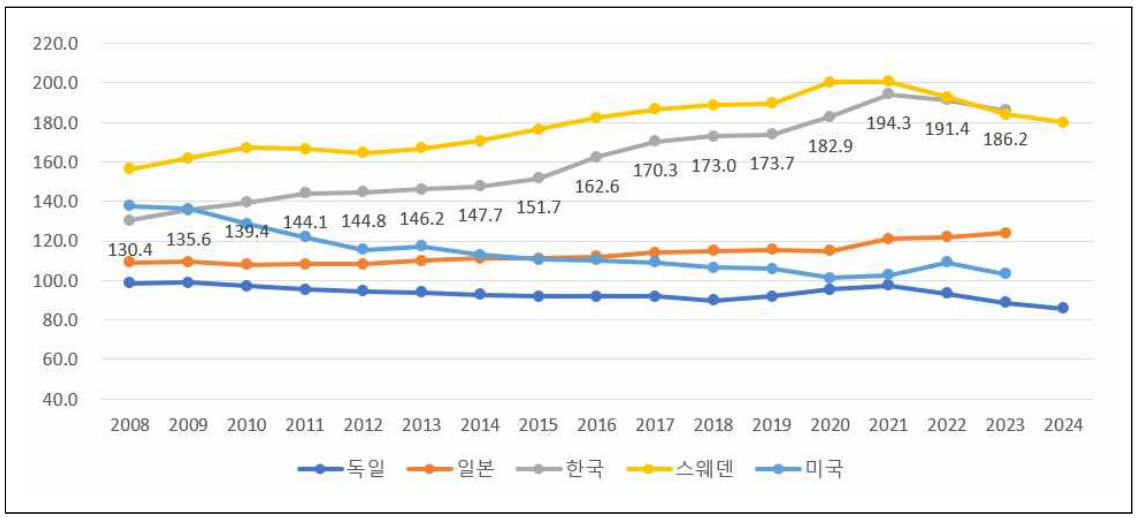
집단별로 나눠서 봐도, 종사상지위별로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자영자 모두에서 집단 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만족 비율이 모두 늘었다. 가구 소득별로 집단을 나누어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 비율은 높았다. 2009~2015년 사이 만족도 비율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증가했다.

4. 자산 및 부채

1) 가계부채비율

<그림 2-13> 가계부채비율

(단위: %)



출처: "Debt of Household", OECD, n.d.d,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NAAG%40DF_NAAG&df[ag]=OECD.SDD.NAD&df[vs]=&pd=1995%2C2024&dq=A.DEU%2BJPN%2BKOR%2BSWE%2BUSA.LES1M_FD4..&to[TIME_PERIOD]=false&vw=tb&lb=bt&lc=en&pg=0

주1: 한국의 통계에만 수치를 그림에 넣음.

주2: OECD 통계에서 다른 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90년대까지 자료가 공개돼 있지만, 한국의 통계는 2008년 이후에만 제시돼 있음. 일본, 한국, 미국의 2024년 통계치도 제시되지 않음.

가계부채비율은 "가계부채총액의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국가데이터처, 2025q)이다. 국가데이터처(2025q)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 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일정 수준'의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다.

가계부채비율은 세부 집단별로 분석할 수는 없다. OECD(n.d.d)가 제공하는 가계부채비율은 각

국의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총량 기준 자료밖에 없다. 한국 가계의 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다. OECD(n.d.d)에서 2023년 통계가 가용한 33개국 가운데 한국은 186.2%로, 스위스(224.5%), 네덜란드(219.3%), 호주(213.8%), 덴마크(206.1%), 캐나다(187.7%) 다음 여섯번째로 높다. 물론, 가계부채의 내용 및 소득 계층별 분산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김수현, 황설웅(2023)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에서 신규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의 목적으로 발생됐고, 주로 고소득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건수 및 가계부채 잔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안정적인 지표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표 2-15> 한국과 주요국의 가계부채비율 (2008~2024년)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독일	98.54	97.21	94.37	92.72	91.91	89.83	95.45	93.38	85.80
일본	109.01	107.82	108.31	110.98	112.12	115.01	115.00	121.80	-
한국	130.38	139.43	144.79	147.71	162.59	172.98	182.86	191.35	-
스웨덴	156.30	167.22	164.40	170.49	182.26	188.78	200.33	192.85	179.91
미국	137.62	128.71	115.40	112.96	110.35	106.47	101.23	109.04	-

출처: "Debt of Household", OECD, n.d.d,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NAAG%40DF_NAAG&df[ag]=OECD.SDD.NAD&df[vs]=&pd=1995%2C2024&dq=A.DEU%2BJPN%2BKOR%2BSWE%2BUSA.LES1M_FD4..&to[TIME_PERIOD]=false&vw=tb&lb=bt&lc=en&pg=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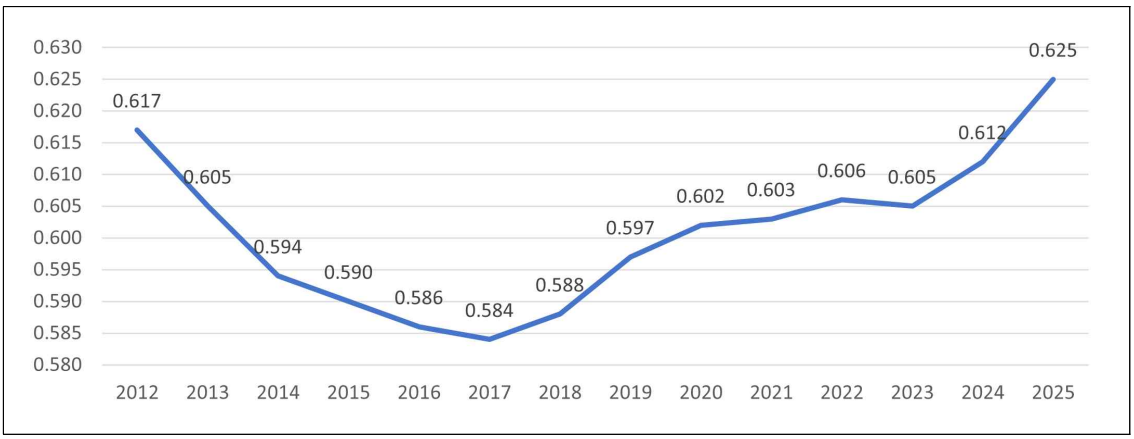
주1: 지면 제약으로 2008년 이후 짝수년도만 통계 제시함.

주2: OECD 통계에서 다른 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90년대까지 자료가 공개돼 있지만, 한국의 통계는 2008년 이후에만 제시돼 있음. 일본, 한국, 미국의 2024년 통계치도 제시되지 않음.

2) 순자산 지니계수

<그림 2-14> 순자산 지니계수

(단위: 포인트)



출처: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국가데이터처, 2025r,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1_004%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AD04%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한국에서 소득불평등 관련 지표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대체로 개선된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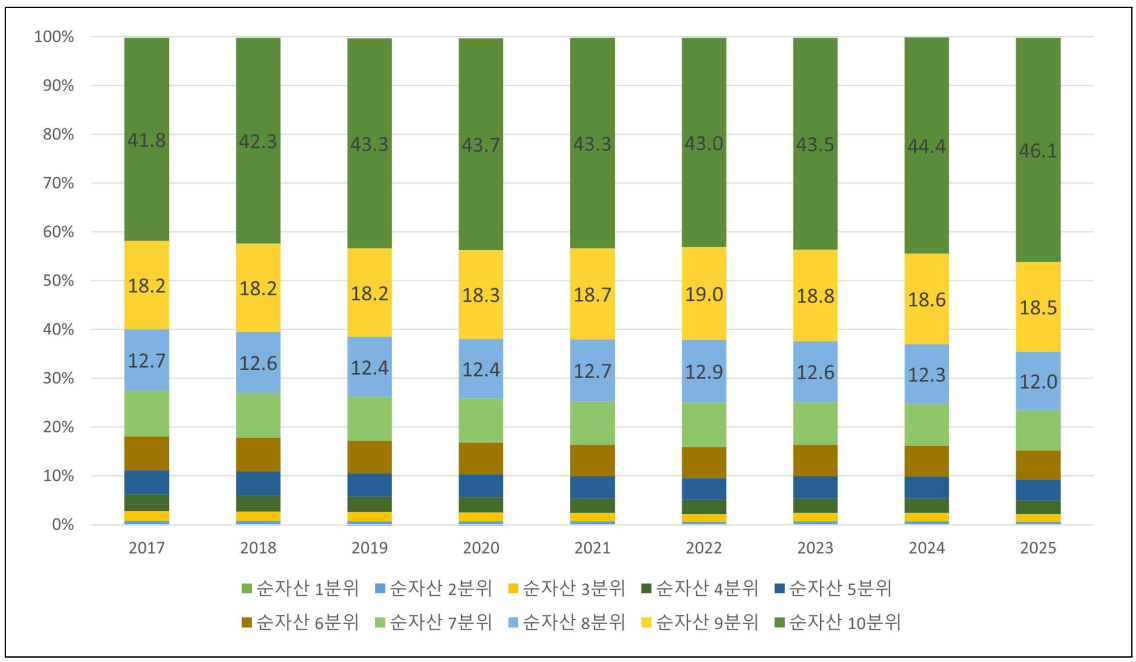
산 지니계수나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KOSIS에서도 순자산 지니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12~2017년에는 순자산 지니계수가 0.617에서 0.584로 감소하였지만, 2017~2025년에는 0.584에서 0.625로 증가했다(국가데이터처, 2025r). 소득 불평등 수준이 완화하는 추세와 다른 흐름이다.

2)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순자산의 불평등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이후 불평등 증가기의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을 확인한다(국가데이터처, 2025s).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은 "전체 순자산 총액에서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태직, 2021, p. 75)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 1분위 점유율은 '순자산 1분위의 순자산 총액÷전체 순자산 총액'으로 계산된다. <그림 2-15>를 보면, 순자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순자산 상위 10%, 즉 10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7년 41.8%에서 2025년 46.1%로 4.3% 포인트 증가하고, 9분위가 18.2%에서 18.5%로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점유율 변화 없었던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점유율이 하락했다.

<그림 2-15> 분위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단위: %)



출처: "순자산 10분위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국가데이터처, 2025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HDAAD03%26orgId%3D101%26

주: 그림의 공간 제약으로 8~10분위의 수치만 표기함.

참고로, 1분위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순자산 기준 1분위는 보유한 순자산이 평균 -771만원이었다(국가데이터처, 2025s). 그러니, 전체 순자산 가운데 점유율도 음수인 -0.2%였다. 반면, 순자산 10분위는 보유한 순자산이 평균 21억 7,122만원이었다. 점유율은

앞서 확인한 대로, 46.1%였다. 물론, 지표의 성격상 하나의 통계 수치를 쓴다면 10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을 활용할 수 있다.

<표 2-16> 분위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2017~20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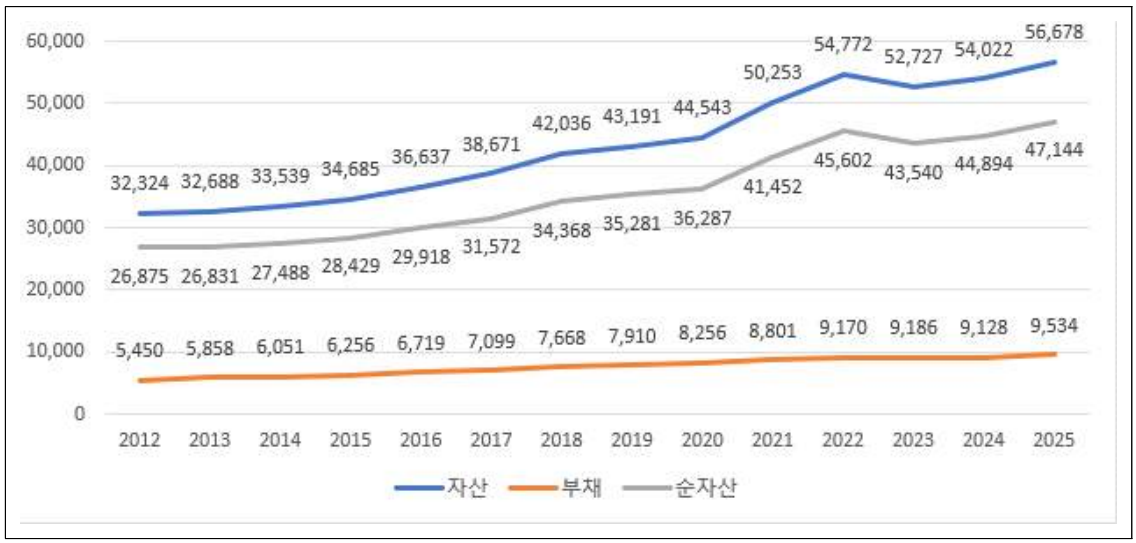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순자산 1분위	-0.2	-0.2	-0.3	-0.3	-0.2	-0.2	-0.2	-0.1	-0.2
순자산 2분위	0.8	0.8	0.7	0.7	0.7	0.6	0.7	0.7	0.6
순자산 3분위	2.0	1.9	1.9	1.8	1.7	1.6	1.7	1.7	1.6
순자산 4분위	3.4	3.3	3.2	3.2	3.0	2.9	3.0	3.0	2.8
순자산 5분위	5.0	5.0	4.8	4.7	4.6	4.5	4.6	4.5	4.3
순자산 6분위	7.0	6.9	6.7	6.6	6.4	6.4	6.4	6.3	6.0
순자산 7분위	9.4	9.2	9.0	9.0	9.0	9.1	8.8	8.6	8.3
순자산 8분위	12.7	12.6	12.4	12.4	12.7	12.9	12.6	12.3	12.0
순자산 9분위	18.2	18.2	18.2	18.3	18.7	19.0	18.8	18.6	18.5
순자산 10분위	41.8	42.3	43.3	43.7	43.3	43.0	43.5	44.4	46.1

출처: “순자산 10분위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국가데이터처, 2025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HDAAD03%26orgId%3D101%26

3) 가구 순자산

<그림 2-16> 가구 자산, 부채, 순자산

(단위: 만원)



출처: “소득분위별 자산, 부채, 순자산 점유율.”, 국가데이터처, 2025u,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1_004%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AD04%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가구의 순자산은 “가구 자산에서 가구 부채를 뺀 금액”이다(국가데이터처, 2025t). 국가데이터처(2025t)의 지표누리에서는 2012년부터 순자산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가구 순자산의 정의나

산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5t)에서 “전체 가구 평균임”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달았다. 참고로,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자산 관련 지표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가구순자산 두 가지다. 가구순자산은 지난 2012년 2억 6,875만원에서 2025년 4억 7,144만원으로 증가했다. 75.4%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같은 기간 자산(75.3%)과 부채(74.9%)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그러한 추이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순자산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2012년 순자산이 1억 3,179만원에서 2025년 2억 8,52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남성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74.6% 수준이었다. 그만큼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풀인된다. 가구원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가구주가 있는 가구에서 증가율이 9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가구주 가구(76.2%)의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30대 가구주 가구에서 증가율은 36.6%로 가장 낮았다.

<표 2-17> 가구주 성별/연령별 가구순자산

(단위: 만원)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5
전체		26,875	27,488	29,918	34,368	36,287	45,602	44,894	47,144
성별	남성	30,799	31,475	34,115	38,921	41,454	52,409	51,175	53,777
	여성	13,179	13,313	15,631	18,357	19,373	25,389	26,767	28,522
가구주 연령대	30세미만	7,671	7,296	6,956	7,301	7,241	8,483	10,386	10,796
	30~39세	18,342	17,970	20,109	23,415	25,385	29,938	25,402	25,060
	40~49세	27,460	26,156	29,125	34,667	37,359	46,913	45,064	48,389
	50~59세	35,116	35,393	36,113	39,621	40,987	53,473	51,131	55,161
	60세이상	27,640	29,463	32,218	36,358	37,422	48,327	51,922	53,591

출처: “가구 순자산”, 국가데이터처, 2025t,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39

3장. <6411지표> 제안

1. 소득

소득분배지표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포를 대표하고 노동시장제도 및 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고 OECD에 보고하는 기존 소득분배지표는 기본적으로 가구 내에서 합산한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여 '개인 단위'로 분석한다. 다소 기술적이고 어려운 표현이지만, 소득분배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을 위해, 남편이 500만원, 아내가 300만원을 벌고 소득이 없는 아동이 1명 있는 3인 가구를 설정하자. 기본적으로 소득분배를 분석할 때는 가구 내에서 소득이 공유된다고 가정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 전업주부, 아동이라 하더라도 같이 사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의존하여 가구 내에서 일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 내 소득 공유를 가정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나 전업주부의 빈곤율을 100%로 집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가구의 경우, 3명의 가구원이 800만원의 가구소득을 공유한다고 가정하고 소득분배를 분석해야 한다.

단, 이때 가구 규모가 상이한 가구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가구소득이 800만원으로 동일한 1인 가구와 3인 가구가 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부유하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구 규모가 2배라고 해서 2배의 생활비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상이한 규모의 가구를 비교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고, 이를 균등화 소득이라 부른다. 위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800만원이고 가구원 수가 3명이므로, 800만원을 3의 제곱근으로 나눈 약 462만원을 균등화 소득으로 계산한다.

균등화 소득을 계산한 다음, 위의 3인 가구를 1개의 가구 분석단위로 간주하여 집계할 수도 있고, 3명의 개인 분석단위로 간주하여 집계할 수도 있다. 전자는 약 2천만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 단위 소득 분포를 분석하는 셈이고, 후자는 약 5천만 명을 대표하는 개인 단위 소득 분포를 분석하는 셈이다. 정답은 없지만, 공식 통계에서는 3명의 개인 분석단위로 간주하여 소득분배지표를 집계한다. 즉, 위 가구의 경우 남편, 아내, 아동을 각각 약 462만원의 소득을 갖는 3명의 개인으로 가정하고 개인 단위의 소득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 단위로 분석해야 아동이나 노인의 빈곤율도 계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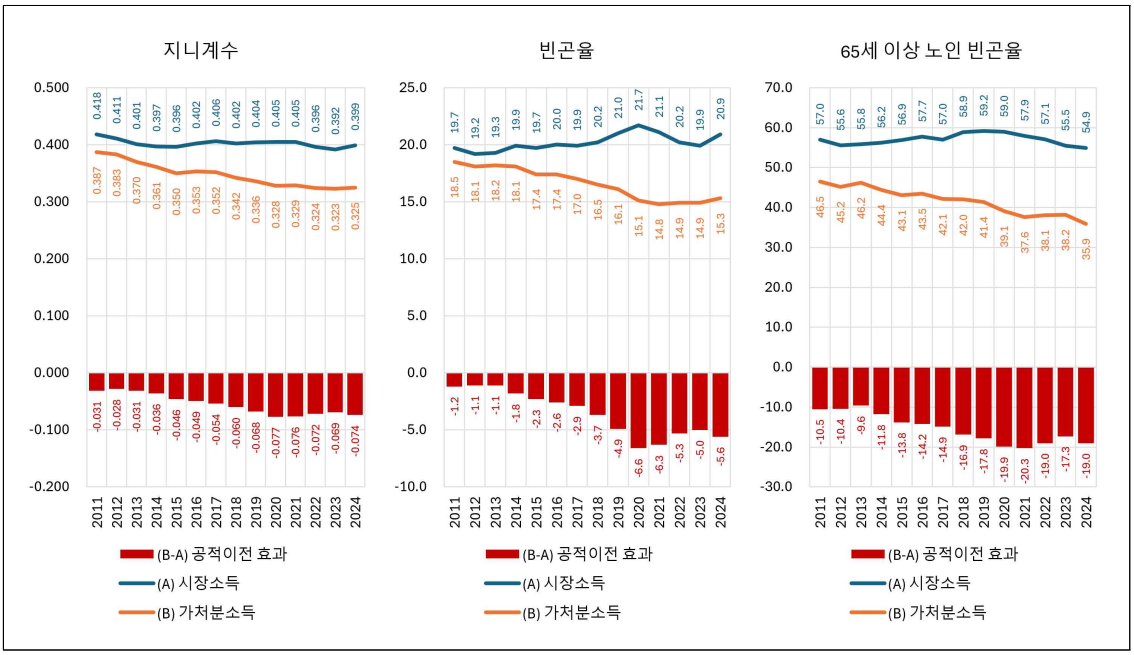
소득분배지표 통계는 불평등지표와 빈곤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지니계수 등의 불평등지표를 활용하여 전체 사회의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빈곤율 등의 빈곤지표를 활용하여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빈곤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선이 필요한데, 이를 빈곤선이라 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전체

인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 또는 6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50% 기준 빈곤선이 자주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24년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윗값이 3,932만원/년이었으므로, 2024년의 빈곤선은 1,966만원/년, 12개월로 나누어 월간화하면 약 164만원/월이 된다. 즉, 2024년에 월 164만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빈곤층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분배지표 통계에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분포를 분석한다. 시장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고용주·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재산소득, 다른 가구나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가구나 비영리단체에게 준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값이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각종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값이다. 즉, 시장소득 분배지표와 가처분소득 분배지표는 각각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를 포함한 공적이전의 영향이 반영되기 전과 후의 소득분배를 보여준다. 따라서 시장소득 분배지표와 가처분소득 분배지표의 차이를 국가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및 빈곤율

(단위: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



출처: "소득분배지표",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KOSIS, 2025, 국가데이터처.
주: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집계한 공식 소득분배지표 통계의 일부를 <그림 3-1>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대체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 역시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대체로 2010년대에는 공적이전 효과가 강화하여 가처분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공적이전 효과가 약화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특히,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20년 이후 감소세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의 성숙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추세가 2020년대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낙

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국가데이터처는 5분위/10분위 배율, 팔마비율, 빈곤갭, 소득 항목별 평균, 성별·연령별 지표 등의 다양한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6411지표>가 기존 소득분배지표 통계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구 내에서 합산하지 않은 개인 단위의 소득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통계는 가구 내에서 합산한 소득을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구직 청년, 동거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 노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포착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기존 통계에서는 성별·연령별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종사상지위, 지역 등 좀 더 다양한 하위집단의 소득 및 빈곤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빈곤 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소수집단의 빈곤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표 3-1> 소득 <6411지표> 제안

구분	내용
개인소득/가구소득 구분	- 개인소득: 가구 내에서 합산하지 않은 개인 단위 소득 - 가구소득: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 단위 소득 - 가구소득 통계치-개인소득 통계치=가구 효과
시장소득/가처분소득 구분	-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 가처분소득 통계치-시장소득 통계치=공적이전 효과
평균/빈곤율	- 평균: 소득 평균 - 빈곤율: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비율 - 빈곤선: 전체 인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
하위집단 구분	- 개인 및 가구주 특성: 성, 연령, 장애, 종사상지위, 지역 등 - 하위집단별 통계치 / 전체 통계치 대비 하위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표 3-1>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 <6411지표>를 설계하였다. 소득 <6411지표> 통계에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구분하여 전체 인구와 다양한 하위집단에 대해 소득의 평균 및 빈곤율을 집계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의 질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 결혼, 맞벌이, 출산, 성인 자녀-부모 동거 등과 같은 다양한 가구구성 요인, 각종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에 따른 공적이전 요인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개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 통계치에서 개인소득 통계치를 차감한 값은 가구의 효과를 나타내고, 가처분소득 통계치에서 시장소득 통계치를 차감한 값은 공적이전의 효과를 나타낸다. 참고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윗값의 50%인 빈곤선은 2016년 107만원/월에서 2024년 164만원/월로 증가하였다.[1)]

<표 3-2> 빈곤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빈곤선(만원/년)	1,286	1,334	1,392	1,453	1,519	1,604	1,727	1,879	1,966
빈곤선(만원/년)÷12	107	111	116	121	127	134	144	157	164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윗값의 50%이다.

1) 이하의 모든 분석에서 소득의 음수를 그대로 분석하였다. 시점은 소득 연도로 표시하였다.

1) 개인 성별 분석

이하에서는 소득 <6411지표>를 시산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개인의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을 구분한 분석 결과로부터 소득 <6411지표> 설계의 의미를 확인한다. <표 3-3>에서는 2024년 개인 성별 소득 평균을 제시하였다. 전체 인구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2,840만원/년,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은 4,720만원/년이었고, 그 차이는 1,880만원/년이었다. 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구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의 소득 평균을 100이라 할 때 남성과 여성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131%, 69%로 차이가 상당히 컸지만, 남성과 여성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103%, 9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가구 효과가 성별 격차를 크게 감소시킨 것이다. 이는 주로 부부 가구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개인시장소득이 통합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시장소득이 없거나 적은 여성 배우자가 가구 내에서 남성 배우자의 개인시장소득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공적이전까지 추가적으로 반영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대비 남성과 여성의 평균이 각각 102%, 98%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가구시장소득 격차보다 가구가처분소득 격차가 조금 더 작았으므로, 이는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가 성별 소득격차를 소폭 축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3> 2024년 개인 성별 소득 평균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소득 평균 (만원/년)	전체	2,840	4,720	4,473	1,880	-247
	개인_남성	3,731	4,851	4,570	1,120	-281
	개인_여성	1,951	4,589	4,376	2,638	-213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개인_남성	131	103	102	60	114
	개인_여성	69	97	98	140	86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표 3-4> 2024년 개인 성별 빈곤율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빈곤율 (%)	전체	53.7	20.9	15.3	-32.9	-5.5
	개인_남성	43.7	18.7	13.6	-25.0	-5.1
	개인_여성	63.7	23.0	17.1	-40.7	-5.9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개인_남성	81	90	89	76	93
	개인_여성	119	110	111	124	107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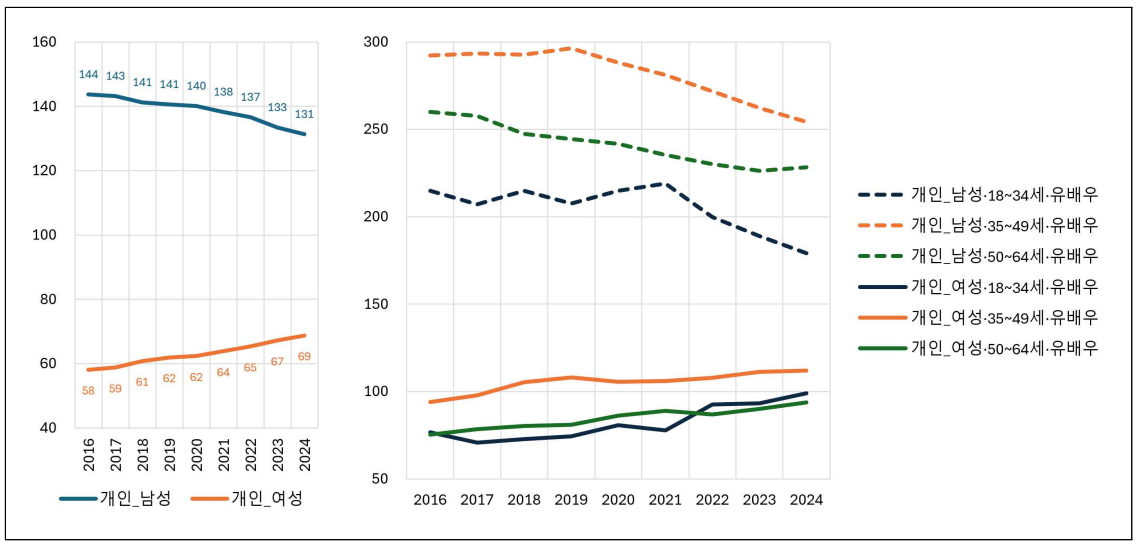
<표 3-4>에서는 성별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전체 인구의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은 53.7%였고,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은 20.9%였다. 즉, 개인이 직접 벌어들인 시장소득이 빈곤선인 1,966만원/년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은 53.7%였지만, 다른 가구원이 벌어들인 시장소득까

지 고려하면 빈곤율이 20.9%로 32.9%p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구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크게 나타났다. 개인이 직접 벌어들인 시장소득이 빈곤선을 넘는 여성은 약 36%에 불과하였지만, 남편을 포함한 다른 가구원의 시장소득까지 고려하면 약 77%의 여성이 빈곤선을 넘는 시장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여성의 빈곤율은 17.1%로 줄어들었다.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역시 남성보다 여성에게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별 소득격차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어떨까? <그림 3-2>를 살펴보면, 2016~2024년 동안 개인시장소득의 성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여성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58%였지만, 2024년에는 69%까지 높아졌다. 이는 여성 고용률 증가,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개인이 벌어들인 시장소득의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개인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를 조합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18~64세 근로연령대 유배우 집단의 성별 격차가 특히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증가에 따라 가구 내에서 여성이 육아·가사를, 남성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3-2> 2016~2024년 개인 성별 개인시장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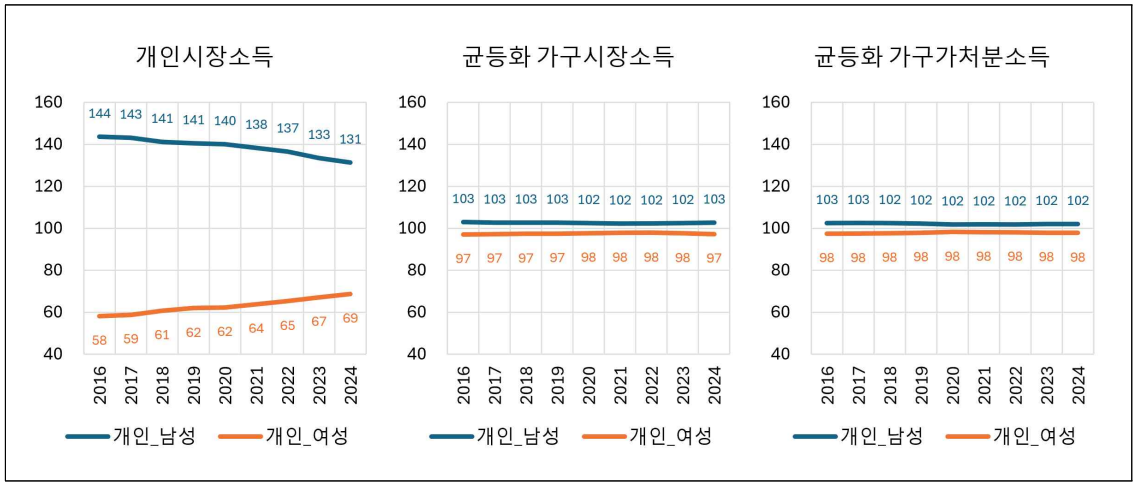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단, <그림 3-3>을 살펴보면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및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의 성별 격차는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 노동시장 격차 축소, 맞벌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개인소득 격차를 축소하지만 가구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3-4>의 빈곤율 분석 결과에서도,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및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성별 격차의 시간에 따른 감소는 뚜렷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의 가구소득 격차에는 성별 수

명 격차와 사별 여성 노인의 극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구소득의 성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같이 사별 여성 노인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2016~2024년 개인 성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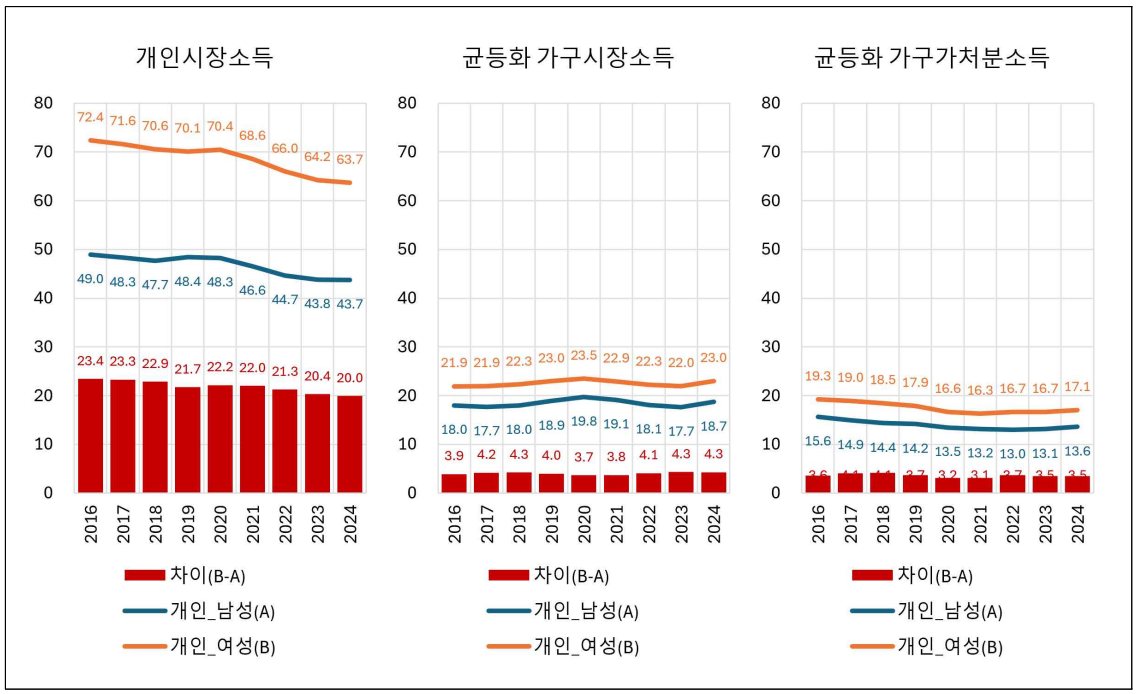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림 3-4> 2016~2024년 개인 성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2) 개인 연령대별 분석

다음으로는 개인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3-5>를 살펴보면,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에서 개인시장소득 평균을 차감한 가구 효과가 가장 큰 집단은 0~17세 아동이었다. 아동은 사실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개인시장소득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가구 내에서 부모의 소득을 공유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천만원/년이 넘는 균등화 가구시장소득을 갖는다. 18~34세 청년 역시 취업·독립으로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개인의 소득이 부족한 시기에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소득을 공유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다음으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에서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을 차감한 공적이전 효과를 살펴보면, 아동, 청년, 장년, 중년은 음의 값이었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64세 이하 근로연령층은 공적이전소득보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크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보다 공적이전소득이 크다.

<표 3-5> 2024년 개인 연령대별 소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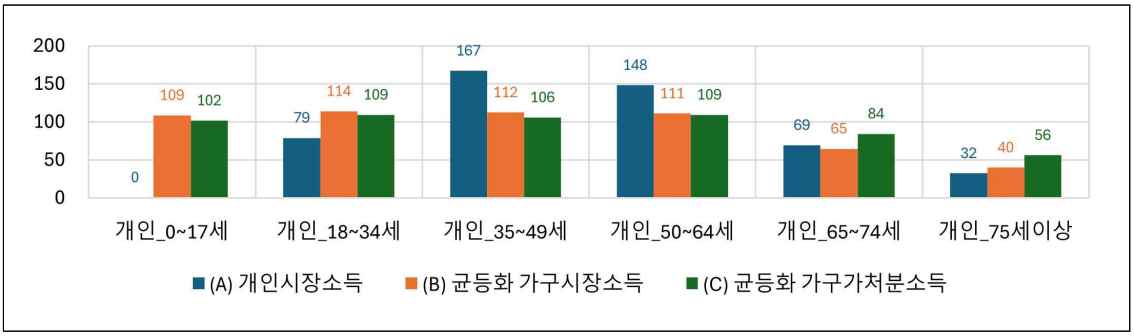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소득 평균 (만원/년)	전체	2,840	4,720	4,473	1,880	-247
	개인_0~17세	14	5,128	4,545	5,114	-583
	개인_18~34세	2,241	5,382	4,885	3,141	-497
	개인_35~49세	4,748	5,300	4,730	552	-570
	개인_50~64세	4,209	5,234	4,888	1,024	-345
	개인_65~74세	1,969	3,053	3,772	1,084	718
	개인_75세이상	917	1,882	2,509	965	627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개인_0~17세	0	109	102	272	236
	개인_18~34세	79	114	109	167	201
	개인_35~49세	167	112	106	29	231
	개인_50~64세	148	111	109	54	140
	개인_65~74세	69	65	84	58	-291
	개인_75세이상	32	40	56	51	-254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전체 인구의 소득 평균을 100%라 할 때, 0~17세, 18~34세, 35~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0%, 79%, 167%, 148%, 69%, 32%였으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109%, 114%, 112%, 111%, 65%, 40%였고,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은 각각 102%, 109%, 106%, 109%, 84%, 56%였다. 즉,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개인시장소득의 연령집단 간 격차가 크고, 가구 효과로 인해 아동, 청년, 장년, 중년의 가구시장소득은 거의 유사해지지만 노인의 가구시장소득 수준은 여전히 낮다. 즉, 노인과 근로연령대 자녀의 동거가 노인의 가구시장소득을 근로연령층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편, 공적이전까지 추가로 반영하면 연령-소득 프로파일이 조금 더 평탄해진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은퇴연령층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이전되는 세대 간 재분배 기제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공적이전이 반영된 후에도 노인, 특히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다.

<그림 3-5> 2024년 개인 연령대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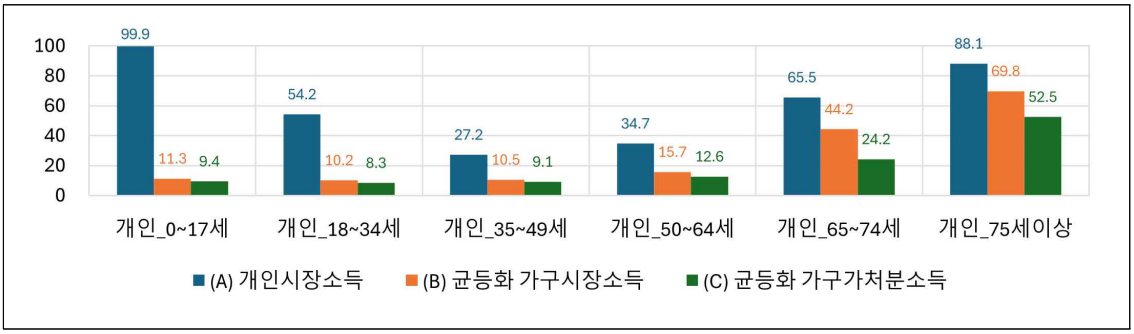
<표 3-6> 2024년 개인 연령대별 빈곤율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빈곤율 (%)	전체	53.7	20.9	15.3	-32.9	-5.5
	개인_0~17세	99.9	11.3	9.4	-88.7	-1.9
	개인_18~34세	54.2	10.2	8.3	-44.0	-1.8
	개인_35~49세	27.2	10.5	9.1	-16.7	-1.4
	개인_50~64세	34.7	15.7	12.6	-19.0	-3.1
	개인_65~74세	65.5	44.2	24.2	-21.3	-20.0
	개인_75세이상	88.1	69.8	52.5	-18.3	-17.3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개인_0~17세	186	54	61	270	34
	개인_18~34세	101	49	54	134	33
	개인_35~49세	51	50	59	51	26
	개인_50~64세	65	75	82	58	55
	개인_65~74세	122	212	158	65	362
	개인_75세이상	164	334	342	56	313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그림 3-6> 2024년 개인 연령대별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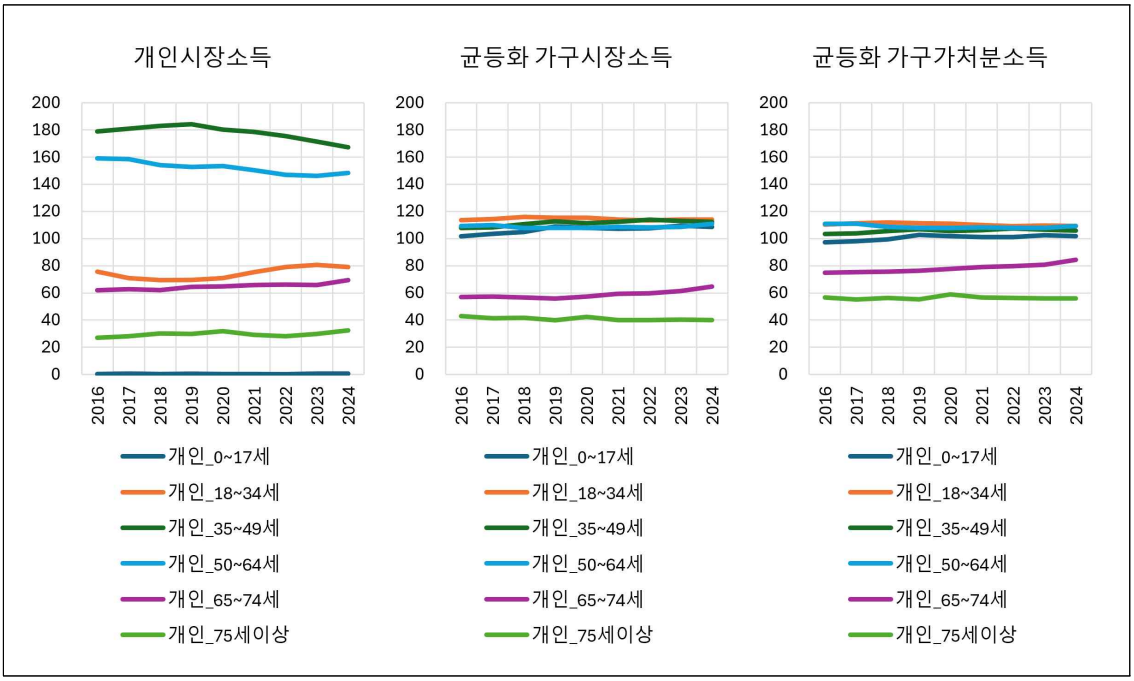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표 3-6>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된다. 아동과 청년은 개인의 시장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지만, 가구 내 소득 공유를 가정하면 아동, 청년, 장년, 중년의 균등

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이 유사해진다. 하지만 가구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공적이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더라도 근로연령층과 노인의 빈곤율 격차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 3-7> 2016~2024년 개인 연령대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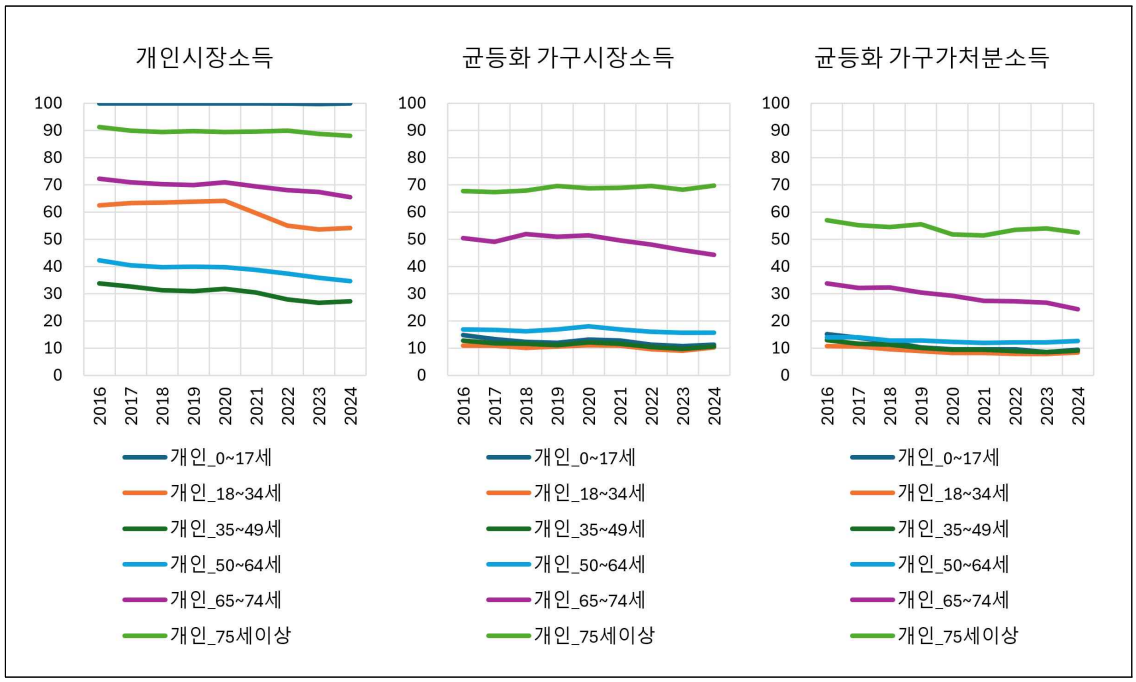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다음으로는 연령대별 소득과 빈곤 실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3-7>을 살펴보면, 대체로 65~74세 노인, 18~34세 청년의 개인시장소득 수준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가구 효과를 반영한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공적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65~74세 노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는 노인 경제활동 참여 증대, 노후소득보장제도 강화 등에 따라 저령 노인의 상대적 소득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상대적 소득지위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다. <그림 3-8>의 빈곤율 분석 결과에서도 65~74세 저령 노인의 빈곤율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지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에서는 노인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65~74세 저령 노인과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율을 재구성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2016~2024년 동안 개인이 직접 벌어들인 시장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인의 경제활동 증가, 부분적으로 노인의 재산소득 증가에 따라 노인의 개인시장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74세 저령 노인의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그림 3-8> 2016~2024년 개인 연령대별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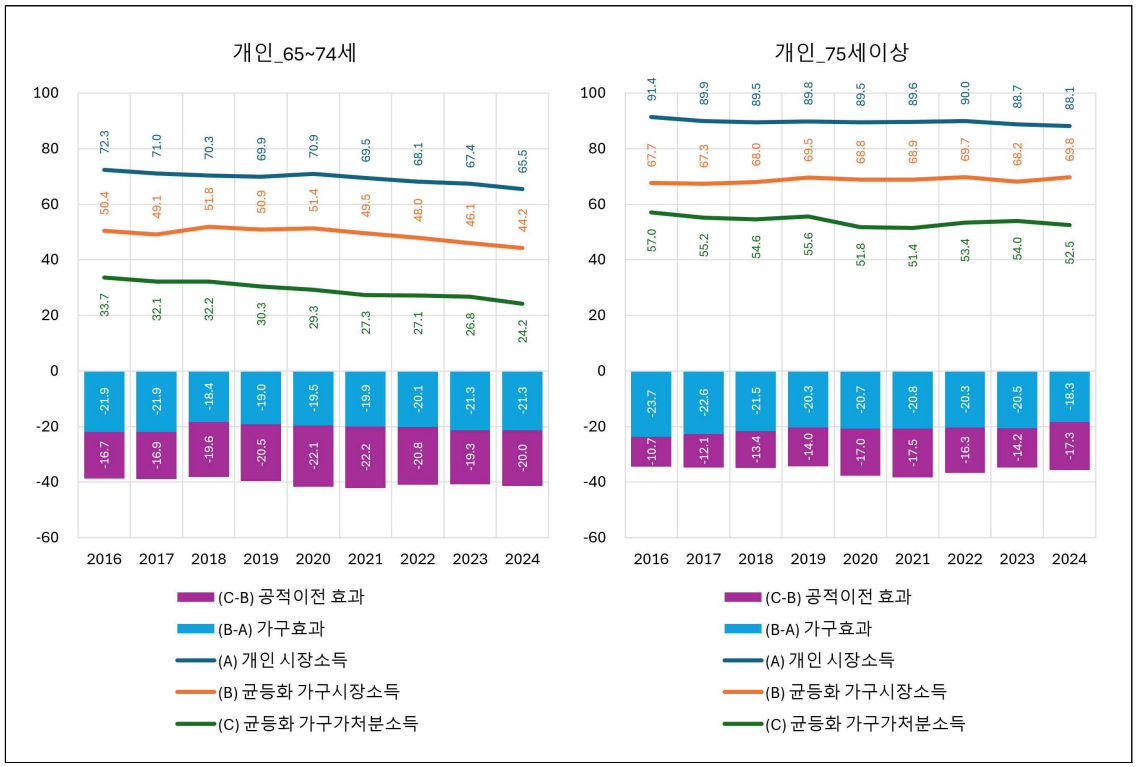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그림 3-9> 2016~2024년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 연령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한편, 노인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은 대체로 개인시장소득 빈곤율보다 약 20%p 낮았다. 즉, 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의 시장소득이 노인의 빈곤율을 약 20%p 낮춘 것이다. 흥미롭게도,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경우 이와 같은 가구 효과가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양 규범의 약화에 따라 노인과 성인 자녀의 동거가 감소하는 사회적 변화가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을 악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성숙,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면서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이 2016년 57.0%에서 2024년 52.5%로 감소하였다. 공적이전의 확대는 65~74세 저령 노인의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이 2016년 33.7%에서 2024년 24.2%로 감소한 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6411지표>는 노후소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국가-시장-가족의 역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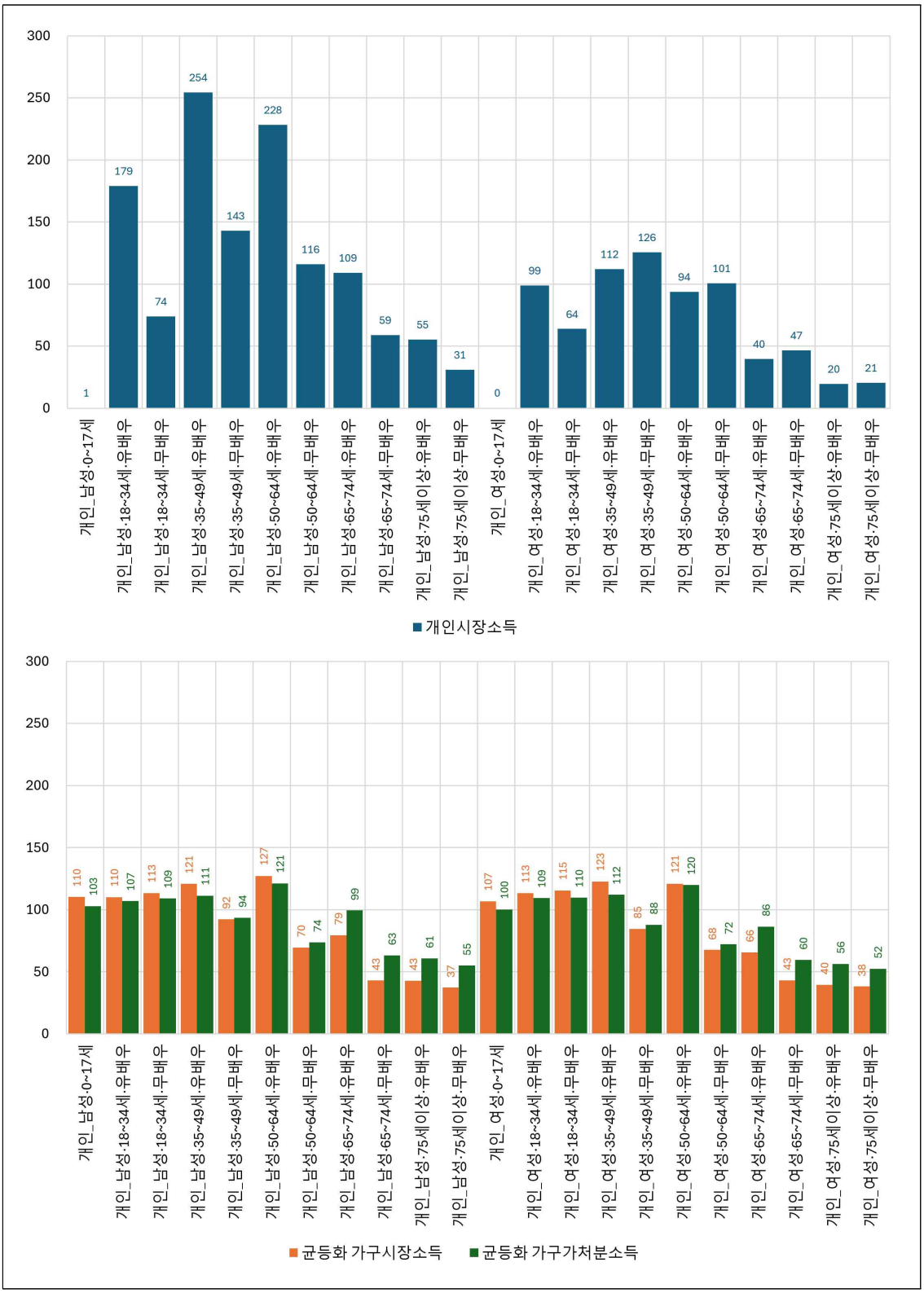
3) 개인 성·연령·결혼상태별 분석

지금까지는 성별, 연령대별 소득·빈곤 실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청년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소득에 차이가 있는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소득이 더 높은지, 유배우 노인과 사별한 노인의 빈곤율에 차이가 있는지 등과 같은 좀 더 정교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개인의 성, 연령, 결혼상태를 교차하여 구성한 22개 하위집단별 소득 및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우선 <그림 3-10>에는 성·연령·결혼상태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평균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보고하였다. 그림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아동기에서 중장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개인시장소득이 증가하고, 노년기로 이행할 때 퇴직하면서 개인시장소득이 감소한다. 하지만 청장년 집단 내부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른 개인시장소득 격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노동시장 지위가 높은 집단이 결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혼의 계층화 현상은 특히 남성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8~34세 남성 중에서 유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의 179%로 상당히 높았지만, 무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의 74%에 불과하였다. 35~49세 남성 중에서 유배우 집단과 무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격차도 상당히 컸다. 여성의 경우, 18~34세 청년은 무배우보다 유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수준이 높았지만, 35~49세 장년의 경우 유배우보다 무배우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기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은 여성의 결혼 가능성이 높지만, 장년기에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유배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동을 제외하고 개인시장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75세 이상 여성으로, 이들의 개인시장소득은 전체 평균의 20~21%에 불과하였다. 75세 이상 무배우 남성의 개인시장소득 역시 전체 평균의 31%로 상당히 낮았다.

<그림 3-10> 2024년 개인 성·연령·결혼상태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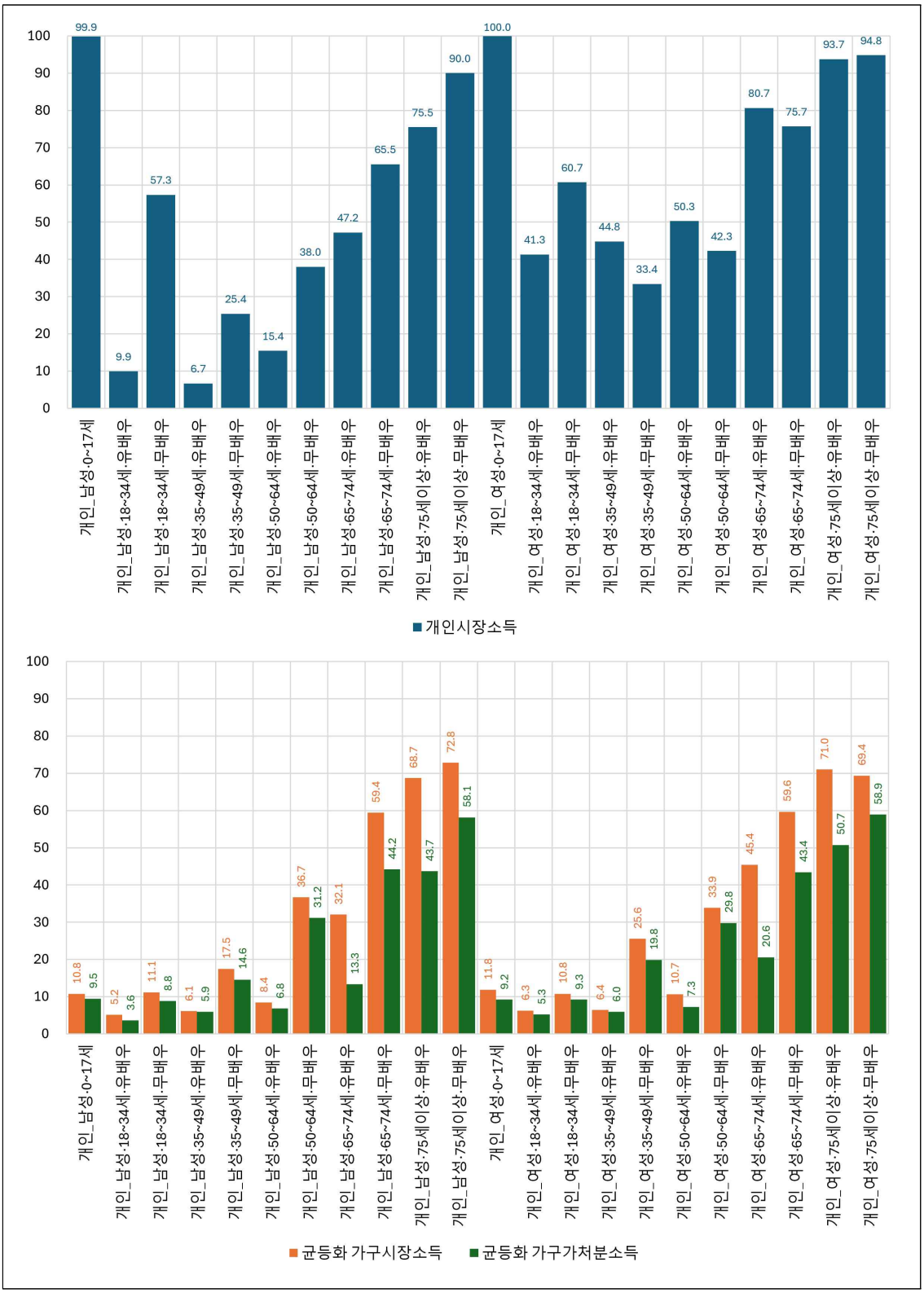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림 3-11> 2024년 개인 성·연령·결혼상태별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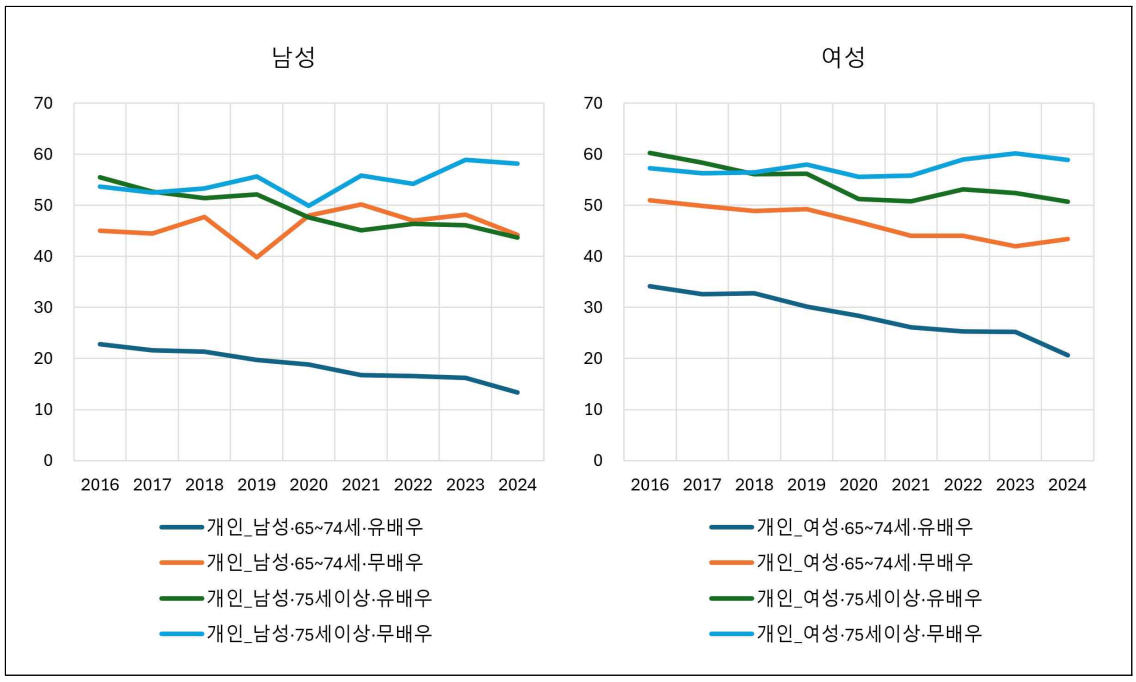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개인시장소득이 아니라 균등화 가구시장소득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과 여성이 부부 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특히 청년기에는 유배우 집단과 무배우 집단의 소득 격차도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기에는 무배우보다 유배우 집단의 가구시장소득 수준이 훨씬 높았는데, 이는 가구 내 소득의 공유가 가구소득 수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공적이전은 전반적으로 근로연령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노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구가처분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은 75세 이상 무배우 여성으로 전체 평균의 52% 수준이었지만, 75세 이상 무배우 남성의 가구가처분소득 수준 역시 전체 평균의 55%로 상당히 낮았다. <그림 3-11>의 분석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75세 이상 무배우 남성이었지만,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75세 이상 무배우 여성이었다. 대체로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중에서도 저령 노인보다 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유배우보다 무배우 집단의 빈곤율이 훨씬 높았는데, 이는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노인이 가장 빈곤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3-12> 2016~2024년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 성·연령·결혼상태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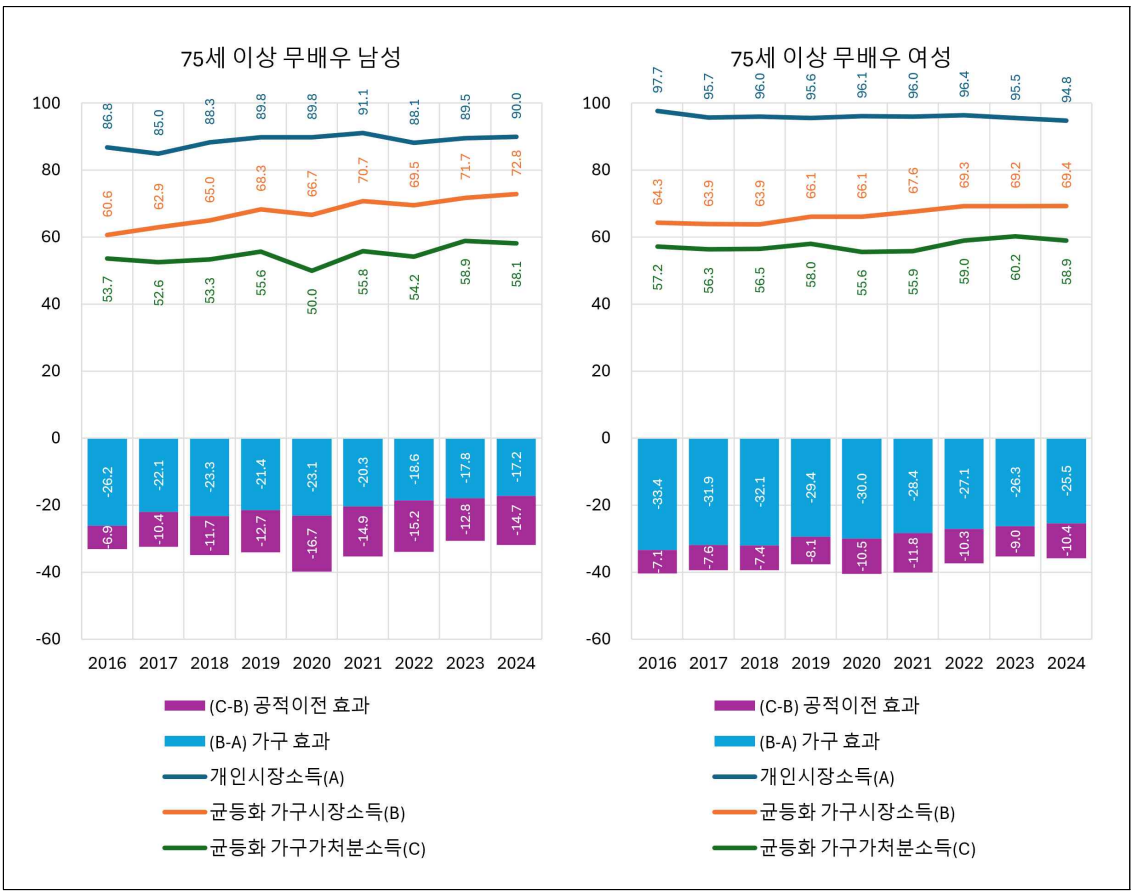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인 성·연령·결혼상태별 소득·빈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그림 3-12>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개인 성·연령·결혼상태별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을 2016~2024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감소해왔지만 노인 집단 내부에서 빈곤율 증감 추이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6~2024년 빈곤율 감소폭이

가장 큰 집단은 65~74세 유배우 여성(-13.5%p)과 75세 이상 유배우 남성(-11.8%p)이었는데, 이는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가구 내에서 공유한 부부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5~74세 유배우 남성(-9.5%p), 75세 이상 유배우 여성(-9.5%p), 65~74세 무배우 여성(-7.6%p)의 빈곤율 감소폭도 비교적 컸다. 반면, 65~74세 무배우 남성의 빈곤율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0.9%p), 75세 이상 무배우 남성(+4.4%p), 75세 이상 무배우 여성(+1.7%p)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소득분배지표 통계를 통해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저령 노인의 빈곤율은 감소하였지만 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소득 <6411지표> 통계에서 결혼상태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결과, 고령 노인 중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빈곤율은 감소하였지만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빈곤율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림 3-13> 2016~2024년 75세 이상 무배우 노인의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무배우 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사별 노인과 성인 자녀의 동거가 감소하는 가구 구조 변화가 고령 노인의 빈곤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3-13>에서는 75세 이상 무배우 노인의 개

인시장소득,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을 보고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과 개인시장소득 빈곤율의 차이로 측정한 가구 효과가 시간에 따라 상당히 약해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별 노인과 성인 자녀의 동거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약해졌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4) 개인 장애상태별 분석

다음으로는 개인 장애상태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3-7>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전체 평균의 30%, 73%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중증장애인은 동거 가구원의 시장소득을 공유하면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50%로 증가하였지만, 경증장애인은 이와 같은 가구 효과도 크지 않아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63%로 오히려 낮아졌다. 공적이전을 반영한 후에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은 각각 전체 평균의 68%, 75%에 머물렀다.

<표 3-7> 2024년 개인 장애상태별 소득 평균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소득 평균 (만원/년)	전체	2,840	4,720	4,473	1,880	-247
	개인_중증장애인	854	2,377	3,022	1,523	645
	개인_경증장애인	2,064	2,962	3,371	898	408
	개인_비장애인	2,905	4,826	4,539	1,921	-287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개인_중증장애인	30	50	68	81	-261
	개인_경증장애인	73	63	75	48	-165
	개인_비장애인	102	102	101	102	116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표 3-8> 2024년 개인 장애상태별 빈곤율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빈곤율 (%)	전체	53.7	20.9	15.3	-32.9	-5.5
	개인_중증장애인	85.9	53.9	35.6	-32.1	-18.3
	개인_경증장애인	66.5	47.6	35.5	-19.0	-12.1
	개인_비장애인	52.7	19.3	14.2	-33.4	-5.1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개인_중증장애인	160	258	232	98	331
	개인_경증장애인	124	228	231	58	218
	개인_비장애인	98	92	93	10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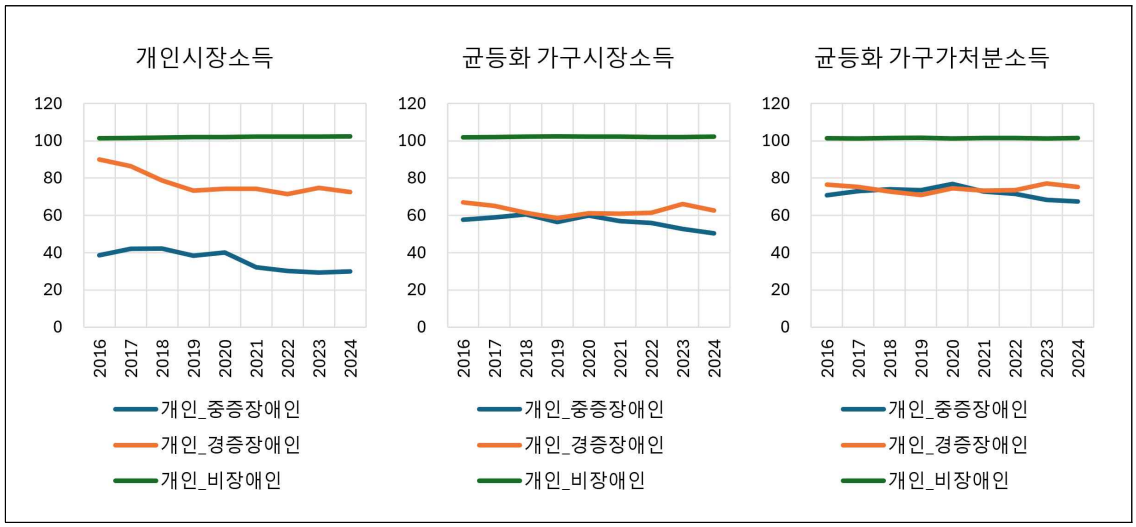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표 3-8>을 살펴보면,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은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이 높았지만,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각각 35.6%, 35.5%로 거의 유사하였다. 경증장애인과 비교할 때 중증장애인은 개인의 시장소득 수준이 매우 낮지만 가구

효과와 공적이전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갖게 된다. 물론,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소득보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그림 3-14>과 <그림 3-15>과 같이, 2016~2024년 장애인 소득 및 빈곤율 분석 결과에서 뚜렷한 구조적 증감 추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율이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 빈곤율은 그다지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림 3-14> 2016~2024년 개인 장애상태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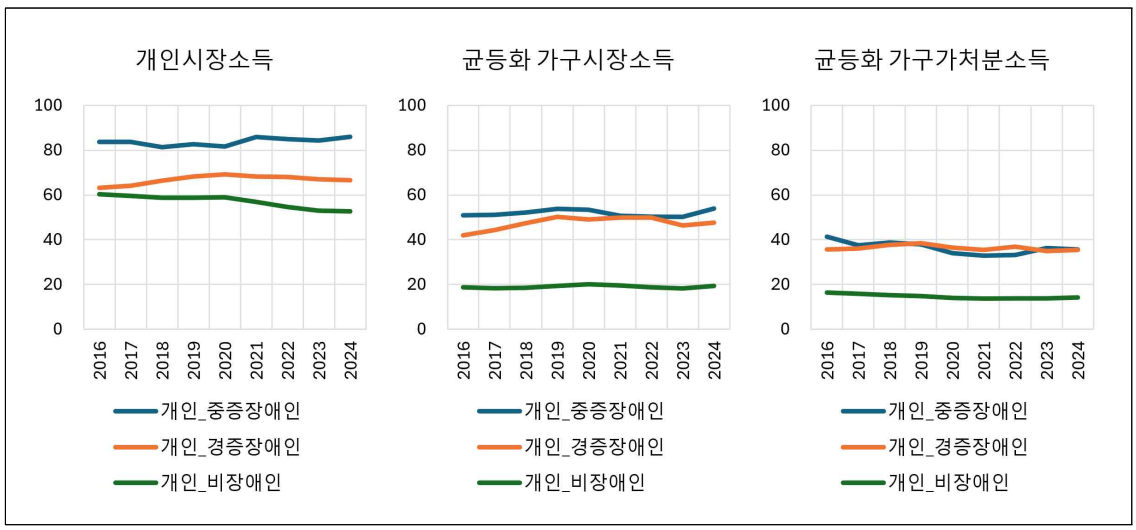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림 3-15> 2016~2024년 개인 장애상태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5)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분석

노동시장 지위별 소득·빈곤 실태는 기존 소득분배지표 통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이하에서는 가구주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때, 앞선 분석과 달리, 하위집단을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가구주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주 상용근로자 집단은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에 속한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가구 내에 서로 다른 종사상지위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대체로 가구주가 생계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가구 전체의 노동시장 지위를 대리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3-9> 2024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소득 평균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소득 평균 (만원/년)	전체	2,840	4,720	4,473	1,880	-247
	가구주_상용근로자	3,466	5,840	5,136	2,373	-703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1,838	2,866	3,200	1,029	334
	가구주_고용원있는자영업자	3,973	6,863	6,070	2,890	-792
	가구주_고용원없는자영업자	2,525	4,140	4,225	1,614	85
	가구주_기타종사자	2,743	4,233	4,198	1,490	-35
	가구주_무직·비경활	1,483	2,335	2,967	852	632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가구주_상용근로자	122	124	115	126	285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65	61	72	55	-135
	가구주_고용원있는자영업자	140	145	136	154	321
	가구주_고용원없는자영업자	89	88	94	86	-34
	가구주_기타종사자	97	90	94	79	14
	가구주_무직·비경활	52	49	66	45	-256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기타 종사자는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의미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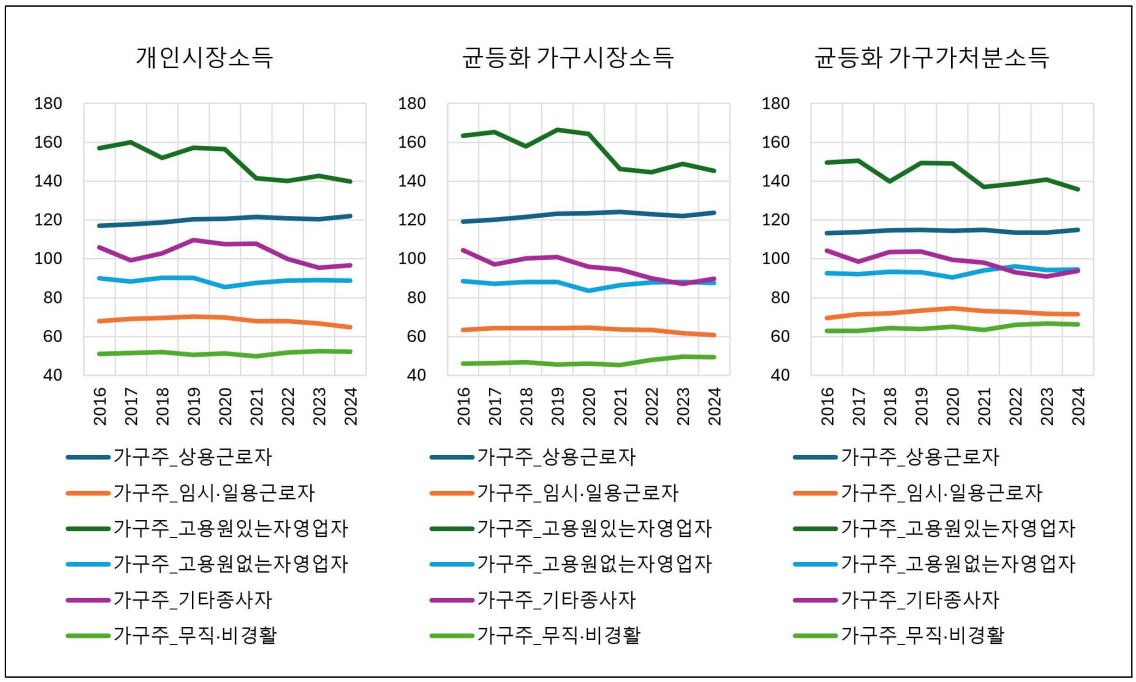
<표 3-10> 2024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빈곤율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빈곤율 (%)	전체	53.7	20.9	15.3	-32.9	-5.5
	가구주_상용근로자	46.5	6.7	5.9	-39.9	-0.8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62.0	39.7	28.1	-22.3	-11.6
	가구주_고용원있는자영업자	46.5	5.3	5.8	-41.2	0.6
	가구주_고용원없는자영업자	52.7	20.0	11.7	-32.7	-8.4
	가구주_기타종사자	42.1	11.4	9.4	-30.7	-2.0
	가구주_무직·비경활	74.7	59.1	43.3	-15.6	-15.8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가구주_상용근로자	87	32	38	121	15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115	190	183	68	210
	가구주_고용원있는자영업자	86	25	38	125	-10
	가구주_고용원없는자영업자	98	96	76	99	151
	가구주_기타종사자	78	55	61	94	36
	가구주_무직·비경활	139	283	282	48	286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기타 종사자는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의미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그림 3-16> 2016~2024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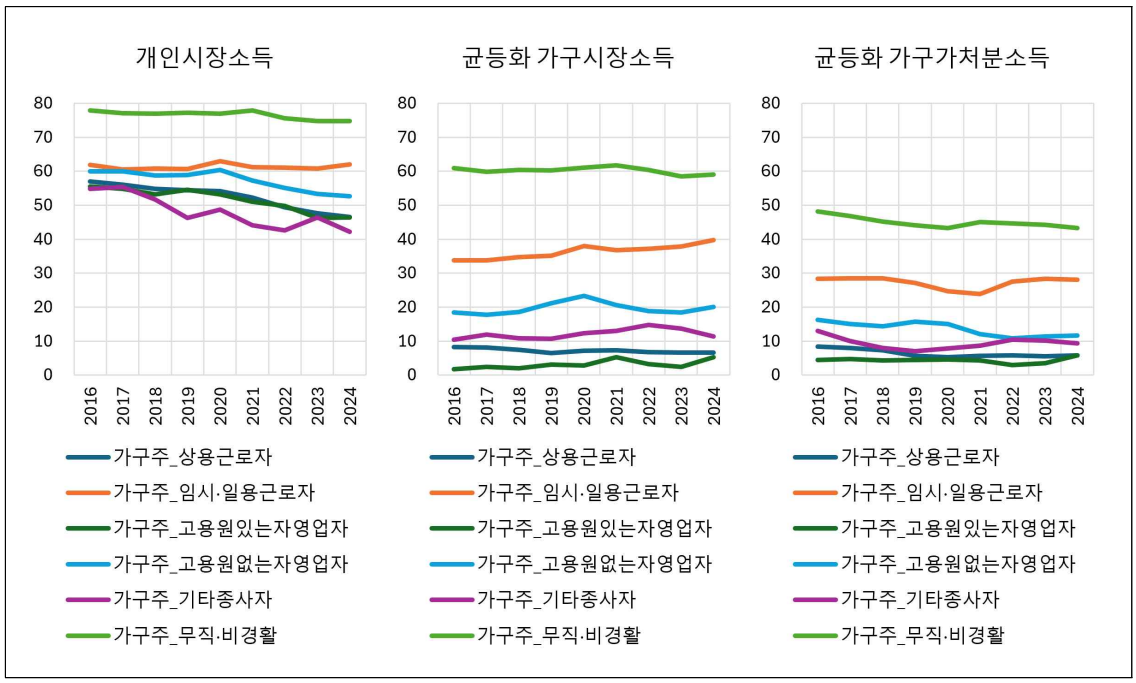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타 종사자는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의미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그림 3-17> 2016~2024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기타 종사자는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의미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표 3-9>와 <표 3-10>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거나 상용근로자인 집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고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가구주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집단의 개인시장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의 140%였고,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의 145%였으며,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의 136%였다. 이들은 공적이전소득보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크기 때문에 공적이전이 소득 수준을 낮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집단의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은 전체 평균의 115%였다. 가구주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거나 기타 종사자인 집단은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94%로 대체로 중간소득층에 해당하였다.

가구주가 임시·일용근로자인 집단, 가구주가 무직·비경활인 집단의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은 각각 전체 평균의 72%, 66%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보다 공적이전소득이 커 공적이전이 소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각각 28.1%, 43.3%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 가구주 가구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의 빈곤 위험이 매우 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빈곤 위험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구주가 무직·비경활인 집단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지만, 특히 가구주가 임시·일용근로자인 집단의 가구시장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6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림 3-17>에서는 가구주 임시·일용근로자 집단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관찰된다. 이는 노동시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진단할 때 고용이 불안정한 임금근로자의 저소득·빈곤 위험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노동시장 지위의 불안정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임시·일용근로자가 근로빈곤 문제의 핵심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과 가구가처분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가구주 종사상지위 집단 간의 소득·빈곤 순위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소득·빈곤 격차의 크기를 상당히 축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가구주가 무직·비경활,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집단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시장소득 빈곤율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고용보험 등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 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6) 지역별 분석

다음으로는 지역별 통계를 살펴본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등 지역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실태가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는 많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배지표 역시 지역별 통계치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별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 <표 3-11>과 <표 3-12>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한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6개 권역의 소득 및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서울의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1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경기가 108%로 높았다. 이는 수도권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세제도와 소득보장제도가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적이전이 수도권의 소득 수준을 낮추지만, 공적이전을 반영한 후에도 서울의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이 전체 평균의 11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가 105%로 다음으로 높았다. 대체로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전국 평균 수준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부산·울산·경남의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인천·경기가 12.8%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서울, 대전·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4.2%, 14.4%로 낮은 편이었다.

<표 3-11> 2024년 지역별 소득 평균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소득 평균 (만원/년)	전체	2,840	4,720	4,473	1,880	-247
	서울	3,382	5,538	5,005	2,156	-532
	인천·경기	3,000	5,076	4,713	2,075	-363
	대구·경북·강원	2,478	4,075	4,072	1,597	-3
	광주·전북·전남·제주	2,461	4,088	4,077	1,627	-11
	부산·울산·경남	2,485	4,133	4,024	1,649	-110
	대전·세종·충북·충남	2,779	4,537	4,384	1,757	-152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서울	119	117	112	115	216
	인천·경기	106	108	105	110	147
	대구·경북·강원	87	86	91	85	1
	광주·전북·전남·제주	87	87	91	87	5
	부산·울산·경남	87	88	90	88	44
	대전·세종·충북·충남	98	96	98	93	62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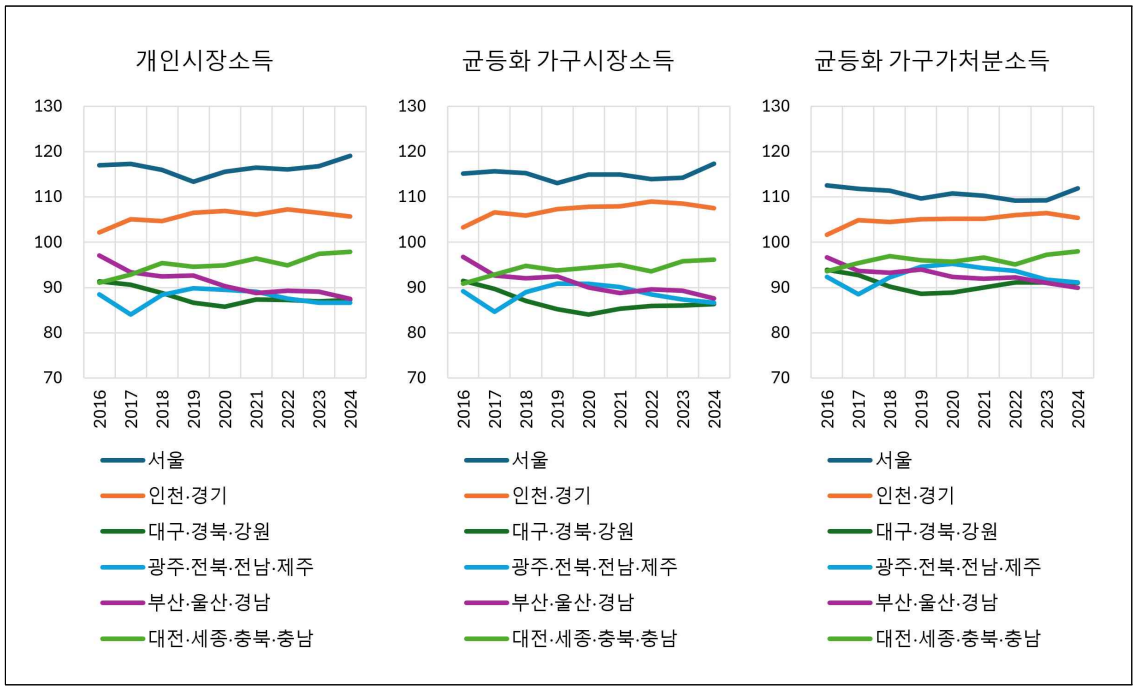
<표 3-12> 2024년 지역별 빈곤율

구분		(A) 개인시장소득	(B)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C)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B-A) 가구 효과	(C-B) 공적이전 효과
빈곤율 (%)	전체	53.7	20.9	15.3	-32.9	-5.5
	서울	48.5	18.4	14.2	-30.1	-4.2
	인천·경기	52.0	16.9	12.8	-35.1	-4.1
	대구·경북·강원	57.6	26.5	18.3	-31.1	-8.2
	광주·전북·전남·제주	58.1	25.9	18.4	-32.2	-7.5
	부산·울산·경남	56.6	23.8	18.1	-32.8	-5.8
	대전·세종·충북·충남	54.3	20.8	14.4	-33.5	-6.4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서울	90	88	93	92	77
	인천·경기	97	81	84	107	74
	대구·경북·강원	107	127	119	95	148
	광주·전북·전남·제주	108	124	120	98	136
	부산·울산·경남	105	114	118	100	105
	대전·세종·충북·충남	101	100	94	102	117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그림 3-18> 2016~2024년 지역별 소득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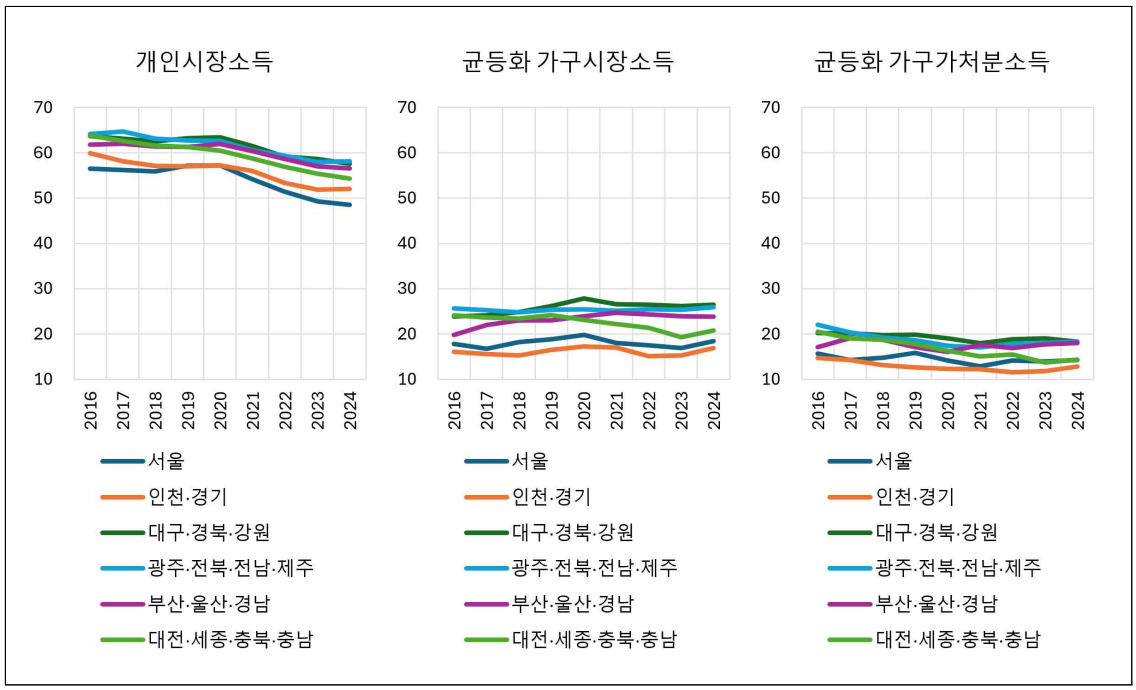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하위집단별 소득 평균을 전체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림 3-19> 2016~2024년 지역별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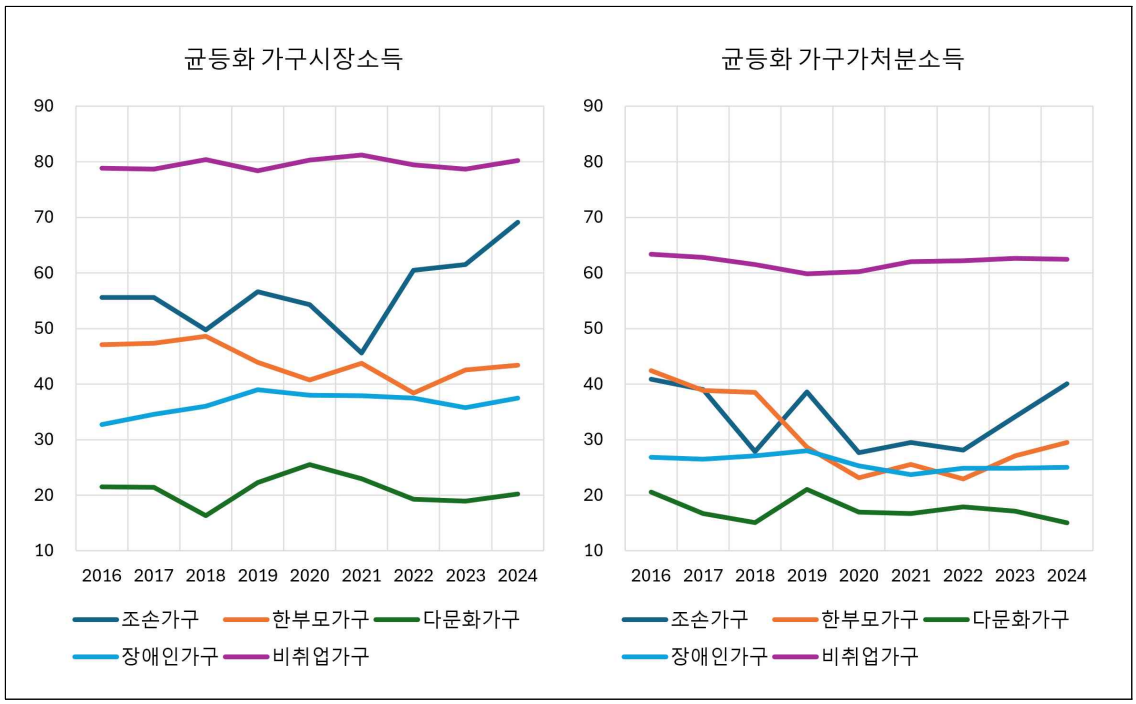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7) 가구유형별 분석

마지막으로,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비취업가구 등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잠재적인 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실태를 분석하였다.[2]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그림 3-20>에는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체로 다문화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가구시장소득 빈곤율과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율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공적이전이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의 빈곤을 크게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와의 가처분소득 빈곤율 격차가 상당히 컸다. 한편, 노인가구를 포함한 비취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도 않았다. 전반적으로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비취업가구 등은 근로능력의 제약이나 가구 내 돌봄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적이전을 통해 충분한 소득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림 3-20> 2016~2024년 가구유형별 빈곤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개인 단위 분석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이다.
- 조손가구: 조부모 가구주와 부모없이 18세 미만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 한부모가구: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 다문화가구: 귀화·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자 또는 외국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비취업가구: 가구내 취업자가 1명도 없는 가구

2) 조손가구는 연도별 사례 수가 작아 분석 결과가 다소 불안정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자산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분석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로 감소한 후 2025년 0.625로 다시 증가하였고, 순자산 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7년 41.8%에서 2025년 46.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국가데이터처의 기존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부터 기본적인 자산 불평등 추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산 불평등의 원인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유형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체로 한국의 자산 불평등에는 부동산 격차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주식 등 금융자산의 격차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표 3-13>에서 보듯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을 세분류 수준에서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를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한다. 자산 <6411지표>에서는 저축액/전월세 보증금/부동산/기타 실물자산, 금융부채/임대보증금 수준에서 자산 격차의 실태를 살펴본다. 물론, 필요하다면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개별 변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세부 항목 분석도 가능하다. 앞선 소득 <6411지표>와 달리, 자산 <6411지표>에서는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 자산을 가구 단위로 분석한다.

<표 3-13>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세부항목
자산	금융자산	저축액	적립·예치식 저축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당좌수표 포함)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저축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펀드 저축성 보험 또는 만기에 일정금액을 받는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기타저축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곗돈
		전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자동차	자동차
			기타	자영업자 설비와 재고자산, 건설용과 농어업용 장비, 동물과 식물,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중품, 고가 내구재(현재 시가 300만원 이상), 차량(오토바이, 보트 등), 권리금, 기타(지적재산권 등)
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형태: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주택, 주택 이외 부동산, 예금·적금·보험·펀드·채권, 기타(전세권, 자동차 등)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
			외상 및 할부	외상, 할부, 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 미결제 잔액(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 제외)
			기타부채	곗돈을 탄 후 낼 금액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
	임대보증금		거주주택 임대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거주주택 이외 임대	거주주택 이외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임대

출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2025v, p. 78,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40300&bid=215&act=view&list_no=439535

1) 순자산 분위별 분석

<표 3-14>는 2025년 순자산 분위별 자산 실태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7,144만원으로, 부동산이 40,2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액은 9,960만원에 그쳤다. 순자산 평균을 100%라 할 때, 전체 가구의 자산 항목별 평균은 저축액 21%, 전월세 보증금 8%, 부동산 85%, 기타 실물자산 6%, 금융부채 -14%, 임대보증금 -6%였다. 즉, 평균적인 가구는 순자산의 약 85%를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4> 2025년 순자산 분위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1분위	479	950	687	357	-3,105	-140	-771
	2분위	1,520	1,892	1,378	511	-2,129	-143	3,029
	3분위	2,973	3,226	4,297	1,036	-3,705	-221	7,606
	4분위	4,057	3,865	9,442	1,420	-5,050	-418	13,317
	5분위	5,543	3,642	15,746	1,829	-5,931	-764	20,067
	6분위	7,192	3,376	23,354	2,605	-7,176	-1,203	28,149
	7분위	8,925	3,508	32,725	2,999	-7,423	-1,655	39,080
	8분위	12,825	3,763	47,571	3,738	-8,276	-2,975	56,645
	9분위	17,468	4,883	73,921	5,140	-9,074	-5,298	87,040
	10분위	38,593	8,186	193,728	7,252	-16,071	-14,565	217,122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1분위	5	25	2	13	46	5	-2
	2분위	15	51	3	19	31	5	6
	3분위	30	86	11	39	55	8	16
	4분위	41	104	23	53	74	15	28
	5분위	56	98	39	68	87	28	43
	6분위	72	91	58	97	106	44	60
	7분위	90	94	81	112	109	60	83
	8분위	129	101	118	139	122	109	120
	9분위	175	131	183	191	134	193	185
	10분위	387	219	481	270	237	532	461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1분위	-62	-123	-89	-46	403	18	100
	2분위	50	62	46	17	-70	-5	100
	3분위	39	42	56	14	-49	-3	100
	4분위	30	29	71	11	-38	-3	100
	5분위	28	18	78	9	-30	-4	100
	6분위	26	12	83	9	-25	-4	100
	7분위	23	9	84	8	-19	-4	100
	8분위	23	7	84	7	-15	-5	100
	9분위	20	6	85	6	-10	-6	100
	10분위	18	4	89	3	-7	-7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이처럼 자산 프로파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불평등에도 부동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의 부동산 평균을 100%라 할 때 순자산 1분위의 부동산 평균은 2%에 불과한 반면 순자산 10분위의 부동산 평균은 481%로 매우 컸다. 즉, 순자산 1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순자산 10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거의 5배에 달하였다. 물론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기타 실물자산 항목에

서도 저분위-고분위 격차가 관찰되었지만, 그 격차의 크기는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패턴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순자산 2분위는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였지만, 순자산 10분위는 89%였다. 즉, 고자산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순자산 1분위는 부동산이 687만원에 불과하였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 평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3-15> 2017년 순자산 분위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7,208	2,514	26,835	2,115	-5,041	-2,058	31,572
	1분위	501	545	974	270	-2,725	-232	-666
	2분위	1,124	1,439	1,078	397	-1,400	-73	2,565
	3분위	2,072	2,342	3,968	728	-2,690	-235	6,187
	4분위	2,904	2,183	9,532	1,095	-4,336	-756	10,622
	5분위	3,957	2,392	13,161	1,480	-4,563	-515	15,912
	6분위	5,297	2,462	17,978	1,954	-4,590	-1,052	22,050
	7분위	6,601	2,668	24,825	2,099	-5,184	-1,474	29,536
	8분위	9,023	2,488	34,119	2,683	-5,530	-2,652	40,131
	9분위	12,851	3,561	48,278	3,567	-6,694	-4,171	57,393
	10분위	27,732	5,056	114,367	6,871	-12,692	-9,418	131,916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1분위	7	22	4	13	54	11	-2
	2분위	16	57	4	19	28	4	8
	3분위	29	93	15	34	53	11	20
	4분위	40	87	36	52	86	37	34
	5분위	55	95	49	70	91	25	50
	6분위	73	98	67	92	91	51	70
	7분위	92	106	93	99	103	72	94
	8분위	125	99	127	127	110	129	127
	9분위	178	142	180	169	133	203	182
	10분위	385	201	426	325	252	458	418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3	8	85	7	-16	-7	100
	1분위	-75	-82	-146	-41	409	35	100
	2분위	44	56	42	15	-55	-3	100
	3분위	33	38	64	12	-43	-4	100
	4분위	27	21	90	10	-41	-7	100
	5분위	25	15	83	9	-29	-3	100
	6분위	24	11	82	9	-21	-5	100
	7분위	22	9	84	7	-18	-5	100
	8분위	22	6	85	7	-14	-7	100
	9분위	22	6	84	6	-12	-7	100
	10분위	21	4	87	5	-10	-7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순자산 분위별 자산 실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어떠할까? <표 3-15>에는 자산 불평등이 가장 작았던 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25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전체 가구의 부동산 평균을 100%라 할 때, 순자산 1분위/10분위 부동산 평균은 2017년에 4%/426%였으나 2025년에 2%/481%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반면, 저축액의 분위 간 격차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고자산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

중이 높아지는 패턴도 2017년보다 2025년에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표 3-16> 2025년 개별 자산 항목이 순자산 분위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해당 항목 차감 순자산 평균 (만원)	전체	37,183	43,414	6,845	44,454	53,938	49,883
	1분위	-1,250	-1,721	-1,458	-1,128	2,334	-631
	2분위	1,508	1,137	1,651	2,518	5,158	3,172
	3분위	4,633	4,381	3,309	6,570	11,311	7,828
	4분위	9,260	9,452	3,875	11,897	18,367	13,735
	5분위	14,523	16,425	4,320	18,237	25,997	20,830
	6분위	20,956	24,773	4,795	25,543	35,325	29,352
	7분위	30,155	35,571	6,354	36,080	46,503	40,735
	8분위	43,820	52,882	9,074	52,907	64,921	59,620
	9분위	69,572	82,157	13,119	81,900	96,114	92,338
	10분위	178,530	208,937	23,394	209,870	233,194	231,687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1분위	-3	-4	-21	-3	4	-1
	2분위	4	3	24	6	10	6
	3분위	12	10	48	15	21	16
	4분위	25	22	57	27	34	28
	5분위	39	38	63	41	48	42
	6분위	56	57	70	57	65	59
	7분위	81	82	93	81	86	82
	8분위	118	122	133	119	120	120
	9분위	187	189	192	184	178	185
	10분위	480	481	342	472	432	464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순자산 10분위는 전체 순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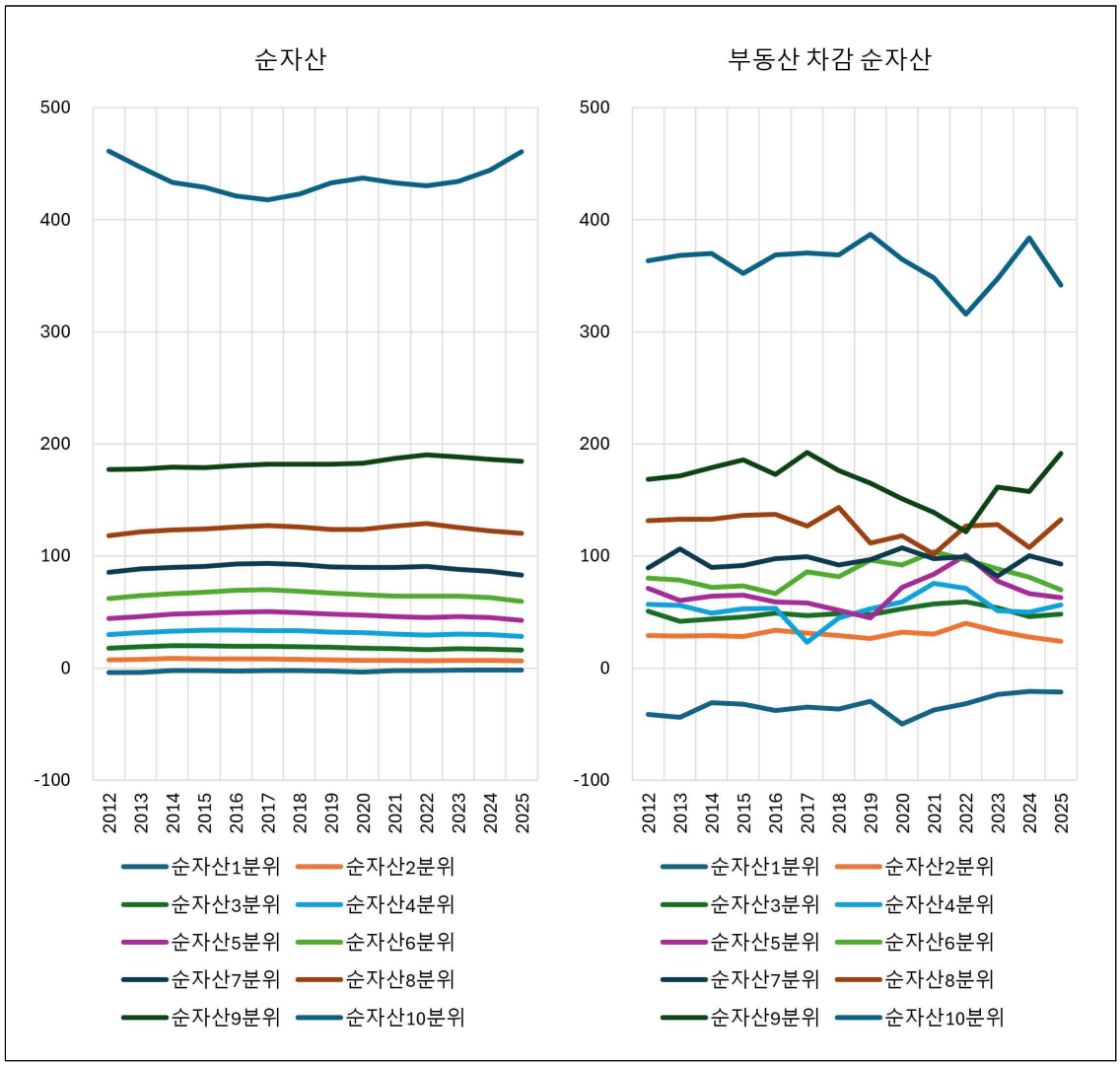
<표 3-16>에는 부동산, 저축액 등 개별 자산 항목이 순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여 시산하였다. 예를 들어, 2025년 순자산 10분위 집단의 순자산 평균은 217,122만원이었는데(<표 3-14>), 그중에서 부동산 평균이 193,728만원이었으므로(<표 3-14>), 부동산을 차감한 순자산의 평균은 23,394만원으로 계산되었다(<표 3-16>).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순자산은 10분위의 평균이 전체 평균의 481%였지만(<표 3-14>),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은 10분위의 평균이 전체 평균의 342%에 머물렀다. 즉, 10분위 집단의 순자산이 전체의 약 5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데는 부동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저축액은 순자산에서 제외하더라도 10분위의 평균이 전체 평균의 48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축액 유무가 10분위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지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차감한 순자산의 분위 간 격차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그림 3-21>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차감한 순자산은 전체 평균 대비 10분위 평균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였지만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10분위 평균의 비율이 2017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한 것과 달리, 부동산을 제외하면 순자산의 분위 간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차감한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1분위 평균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고자산층-저자산층 순자산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 2012~2025년 분위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순자산 10분위는 전체 순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 가구주 성별 분석

지금까지 순자산 분위별 자산 실태를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가구주 성, 연령, 종사상지위, 지역, 주거형태, 가구유형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자산 실태를 분석한다. 우선, <표 3-17>에는 가구주 성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평균을 100%라 할 때,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의 2025년 순자산 평균은 각각 114%, 61%로 성별 격차가 상당히 컸다. 한편 여성 가구주는 전체 순자산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는 여성 가구주의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에

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집단의 순자산 평균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이 2012년 49%에서 2025년 61%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 성별 순자산 격차가 완만하게 축소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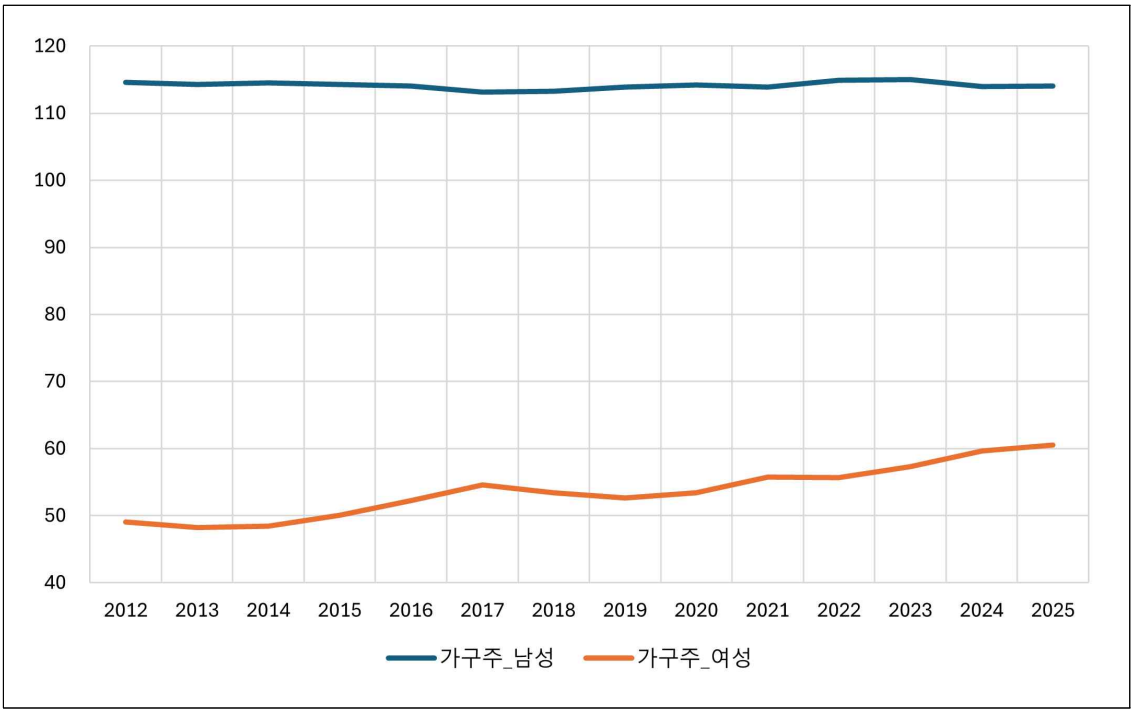
<표 3-17> 2025년 가구주 성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가구주_남성	11,389	3,823	46,166	3,252	-7,782	-3,072	53,777
	가구주_여성	5,948	3,468	23,826	1,108	-4,024	-1,804	28,522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가구주_남성	114	102	115	121	115	112	114
	가구주_여성	60	93	59	41	59	66	61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가구주_남성	21	7	86	6	-14	-6	100
	가구주_여성	21	12	84	4	-14	-6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그림 3-22> 2012~2025년 가구주 성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3) 가구주 연령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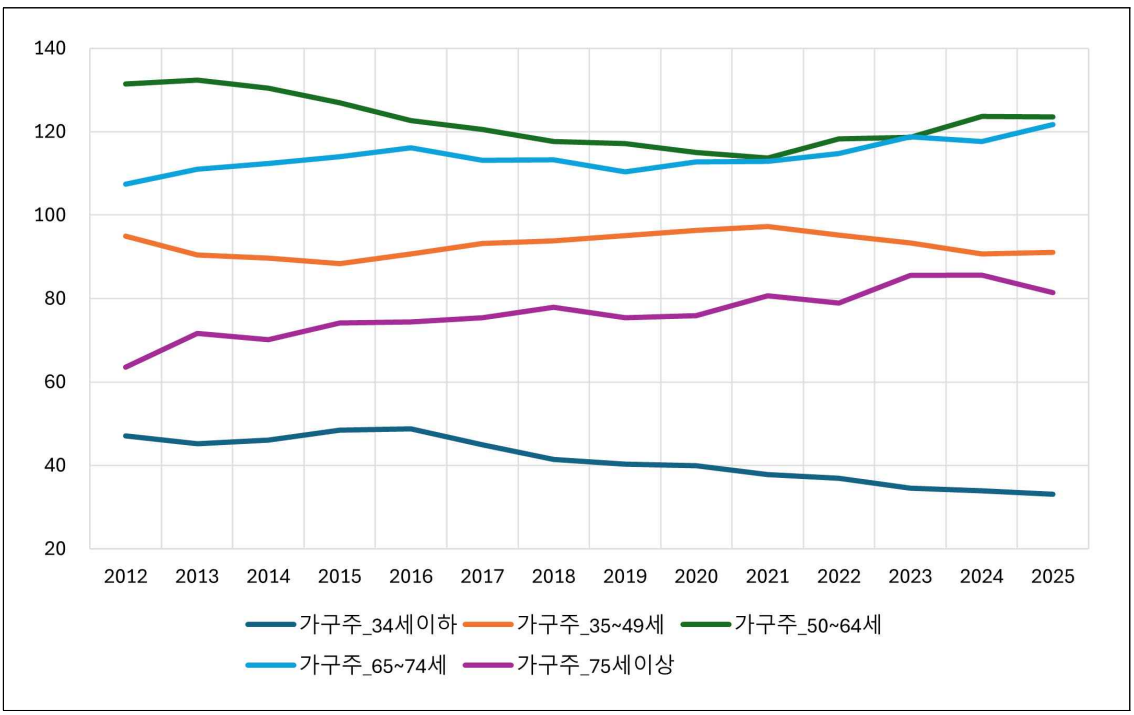
<표 3-18> 2025년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가구주_34세이하	4,791	6,273	10,559	1,484	-6,667	-827	15,612
	가구주_35~49세	10,040	6,071	37,375	3,164	-10,464	-3,235	42,951
	가구주_50~64세	13,312	3,102	49,084	3,450	-7,213	-3,510	58,225
	가구주_65~74세	9,891	1,701	49,849	2,629	-4,307	-2,371	57,392
	가구주_75세이상	4,919	954	34,635	644	-1,105	-1,632	38,415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가구주_34세이하	48	168	26	55	98	30	33
	가구주_35~49세	101	163	93	118	154	118	91
	가구주_50~64세	134	83	122	128	106	128	124
	가구주_65~74세	99	46	124	98	63	87	122
	가구주_75세이상	49	26	86	24	16	60	81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가구주_34세이하	31	40	68	10	-43	-5	100
	가구주_35~49세	23	14	87	7	-24	-8	100
	가구주_50~64세	23	5	84	6	-12	-6	100
	가구주_65~74세	17	3	87	5	-8	-4	100
	가구주_75세이상	13	2	90	2	-3	-4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그림 3-23> 2012~2025년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실태를 살펴본다. 2025년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는 순자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33%에 불과하였다. 청년 가구주 집단은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순자산 평균의 40%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가구를 형성한 청년의 임차 가

구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월세 보증금 및 저축액 비중이 감소하였고 부동산 비중이 증가하였다. 35~49세 장년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91%였고, 50~64세 중년 가구주와 65~74세 저령 노인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122~124%로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상 고령 노인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81%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에서 50~60대까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70대 이후에는 은퇴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한편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순자산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청년의 입직 및 독립 지연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자산형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분석

<표 3-19> 2025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가구주_상용근로자	11,956	5,491	42,294	2,178	-8,494	-3,510	49,915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4,673	1,773	19,840	898	-2,664	-971	23,550
	가구주_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8,390	4,493	83,327	12,400	-19,426	-4,603	94,582
	가구주_고용원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8,906	2,172	43,509	5,544	-7,453	-2,177	50,501
	가구주_기타종사자	6,430	3,988	20,950	1,764	-6,134	-1,705	25,293
	가구주_무직·비경활	7,830	1,968	37,317	843	-2,457	-2,136	43,365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가구주_상용근로자	120	147	105	81	125	128	106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47	48	49	33	39	35	50
	가구주_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85	120	207	461	286	168	201
	가구주_고용원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89	58	108	206	110	79	107
	가구주_기타종사자	65	107	52	66	90	62	54
	가구주_무직·비경활	79	53	93	31	36	78	92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가구주_상용근로자	24	11	85	4	-17	-7	100
	가구주_임시·일용근로자	20	8	84	4	-11	-4	100
	가구주_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9	5	88	13	-21	-5	100
	가구주_고용원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18	4	86	11	-15	-4	100
	가구주_기타종사자	25	16	83	7	-24	-7	100
	가구주_무직·비경활	18	5	86	2	-6	-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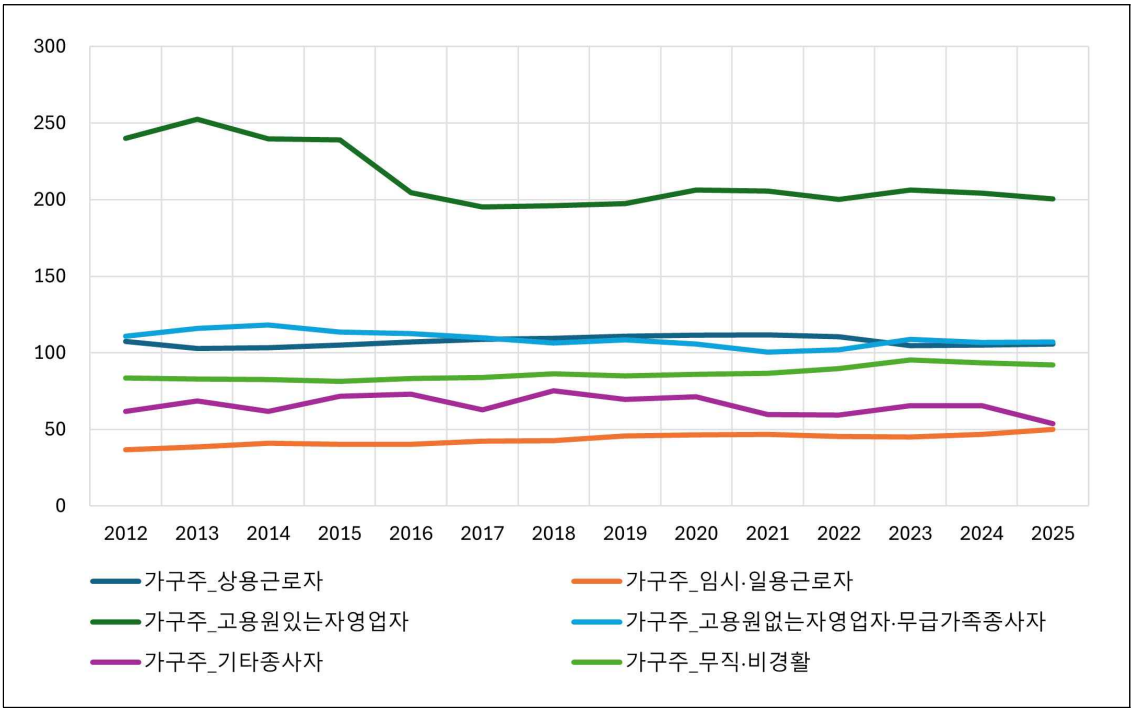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표 3-19>에는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실태를 보고하였다. 2025년 순자산이 가장 많은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주로, 이들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201%였다.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직·비경활 가구주는 대체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순자산을 가졌고,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 종사자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50~54%로 가장 작았다. 이는 노동시장 지위가 소득 지위뿐만 아니라 자산 지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등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은 근로소득 수준이 낮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자산 실태 역시 취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3-24> 2012~2025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5) 지역별 분석

<표 3-20>에는 지역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순자산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서울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151%였다. 인천·경기의 순자산 평균 역시 전체 평균의 10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 지역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75~79%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 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서울은 부동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152%로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저축액 평균 역시 전체 평균의 117%로 큰 편이었다. 이는 서울-지방 자산 격차가 부동산 격차뿐만 아니라 주식 등 금융자산의 격차를 포괄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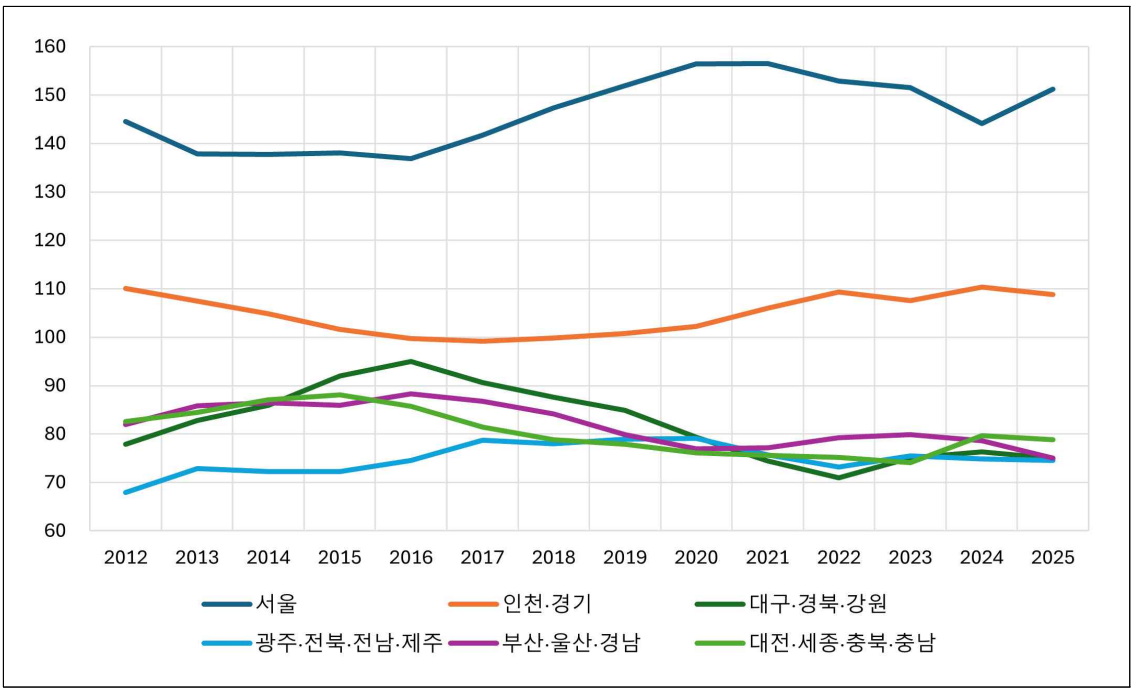
<표 3-20> 2025년 지역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서울	11,604	9,039	61,409	1,597	-7,268	-5,094	71,288
	인천·경기	10,223	3,992	46,359	2,637	-8,443	-3,489	51,280
	대구·경북·강원	9,465	1,375	27,620	3,218	-5,113	-1,218	35,348
	광주·전북·전남·제주	8,940	1,366	27,988	3,214	-5,147	-1,223	35,137
	부산·울산·경남	8,744	1,723	29,385	2,799	-5,836	-1,421	35,394
	대전·세종·충북·충남	9,730	1,980	30,302	3,359	-6,379	-1,825	37,167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서울	117	242	152	59	107	186	151
	인천·경기	103	107	115	98	124	127	109
	대구·경북·강원	95	37	69	120	75	44	75
	광주·전북·전남·제주	90	37	69	120	76	45	75
	부산·울산·경남	88	46	73	104	86	52	75
	대전·세종·충북·충남	98	53	75	125	94	67	79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서울	16	13	86	2	-10	-7	100
	인천·경기	20	8	90	5	-16	-7	100
	대구·경북·강원	27	4	78	9	-14	-3	100
	광주·전북·전남·제주	25	4	80	9	-15	-3	100
	부산·울산·경남	25	5	83	8	-16	-4	100
	대전·세종·충북·충남	26	5	82	9	-17	-5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그림 3-25> 2012~2025년 지역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그림 3-25>을 살펴보면, 서울의 상대적인 순자산 수준은 자산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2024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2025년에 다시 높아졌다. 인천·경기의 상대적인 순자산 수준 역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지방 자산 격차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6) 입주형태별 분석

<표 3-21> 2025년 입주형태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자기집	12,605	0	59,724	3,490	-8,469	-2,677	64,673
	전세	9,726	21,797	23,625	2,250	-7,557	-5,551	44,290
	월세	4,529	3,433	8,028	1,197	-3,188	-1,660	12,339
	기타입주형태	5,613	0	12,630	1,637	-2,460	-1,053	16,368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자기집	127	0	148	130	125	98	137
	전세	98	584	59	84	111	203	94
	월세	45	92	20	45	47	61	26
	기타입주형태	56	0	31	61	36	38	35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자기집	19	0	92	5	-13	-4	100
	전세	22	49	53	5	-17	-13	100
	월세	37	28	65	10	-26	-13	100
	기타입주형태	34	0	77	10	-15	-6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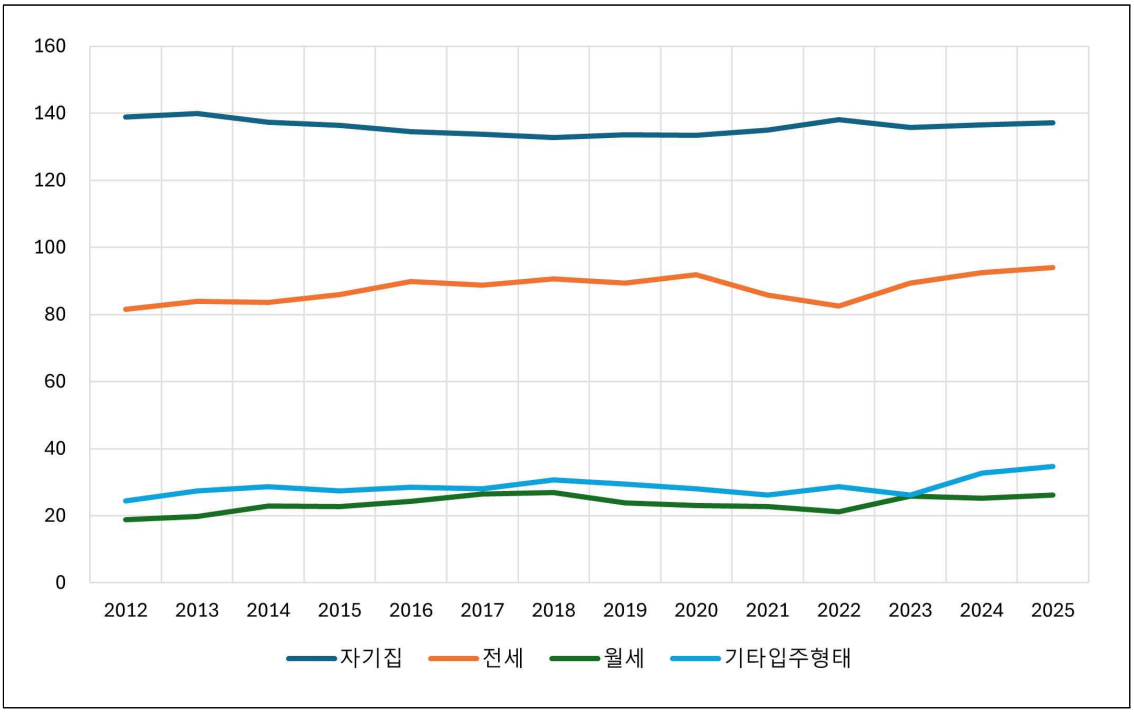
<표 3-21>에는 입주형태별 자산 실태를 보고하였다. 자가 거주 집단은 부동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148%로 컸고, 이에 따라 전체 평균의 137%에 해당하는 수준의 순자산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자가 거주 집단의 부동산 평균은 59,724만원으로, 전세 거주 집단(23,625만원), 월세 거주 집단(8,028만원)보다 훨씬 컸다. 전세 거주 집단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94%였고, 월세 거주집단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26%로 매우 작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거주 주택의 소유 형태가 순자산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기타 입주형태 집단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35%였다. <그림 3-26>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전세 거주 집단의 상대적인 순자산 수준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이는 전세가격의 상승이 전세 거주 집단의 순자산 수준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 가구유형별 분석

마지막으로, <표 3-22>에는,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비취업가구의 자산 실태를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순자산 평균은 전체 평균의 69~8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았고, 특히 한부모가구와 비취업가구의 순자산 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림 3-26> 2012~2025년 입주형태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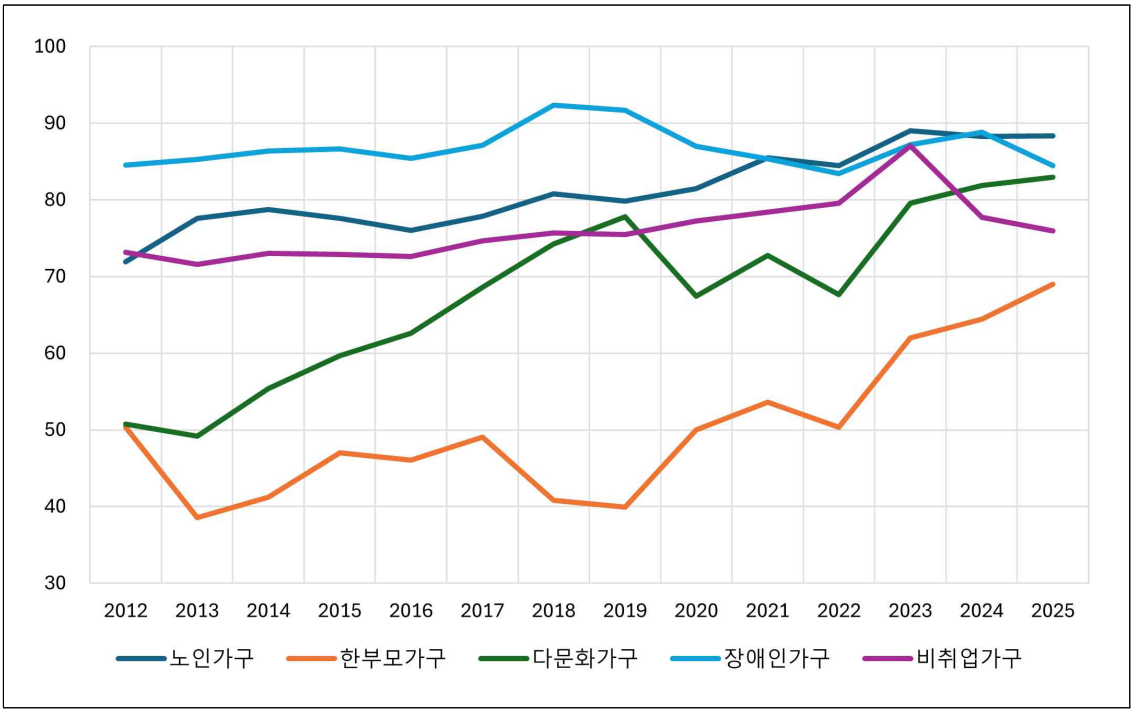
<표 3-22> 2025년 가구유형별 자산 평균

구분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자산
자산 평균 (만원)	전체	9,960	3,730	40,298	2,689	-6,795	-2,739	47,144
	노인가구	5,998	1,292	37,044	1,218	-2,219	-1,684	41,650
	한부모가구	5,750	3,545	30,952	1,791	-6,315	-3,204	32,520
	다문화가구	8,316	2,217	33,650	2,759	-6,756	-1,074	39,112
	장애인가구	8,572	1,673	33,196	2,401	-4,337	-1,686	39,820
	비취업가구	5,959	1,804	30,907	469	-1,627	-1,701	35,813
전체 통계치 대비 집단별 통계치의 비율 (%)	노인가구	60	35	92	45	33	61	88
	한부모가구	58	95	77	67	93	117	69
	다문화가구	83	59	84	103	99	39	83
	장애인가구	86	45	82	89	64	62	84
	비취업가구	60	48	77	17	24	62	76
순자산 평균 대비 통계치의 비율 (%)	전체	21	8	85	6	-14	-6	100
	노인가구	14	3	89	3	-5	-4	100
	한부모가구	18	11	95	6	-19	-10	100
	다문화가구	21	6	86	7	-17	-3	100
	장애인가구	22	4	83	6	-11	-4	100
	비취업가구	17	5	86	1	-5	-5	100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부채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 노인가구: 모든 가구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구: 부모가 한 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 다문화가구: 귀화·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자 또는 외국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비취업가구: 가구내 취업자가 1명도 없는 가구

<그림 3-27> 2012~2025년 가구유형별 순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집단별 평균의 비율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자가 분석하였다.
주: 가구 단위 분석이다.

단, <그림 3-27>에서 보듯이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노인가구, 비취업가구의 상대적인 순자산 수준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불평등 증가 추세의 핵심이 취약계층과 중간계층 간의 자산 격차 확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고자산층으로의 자산 집중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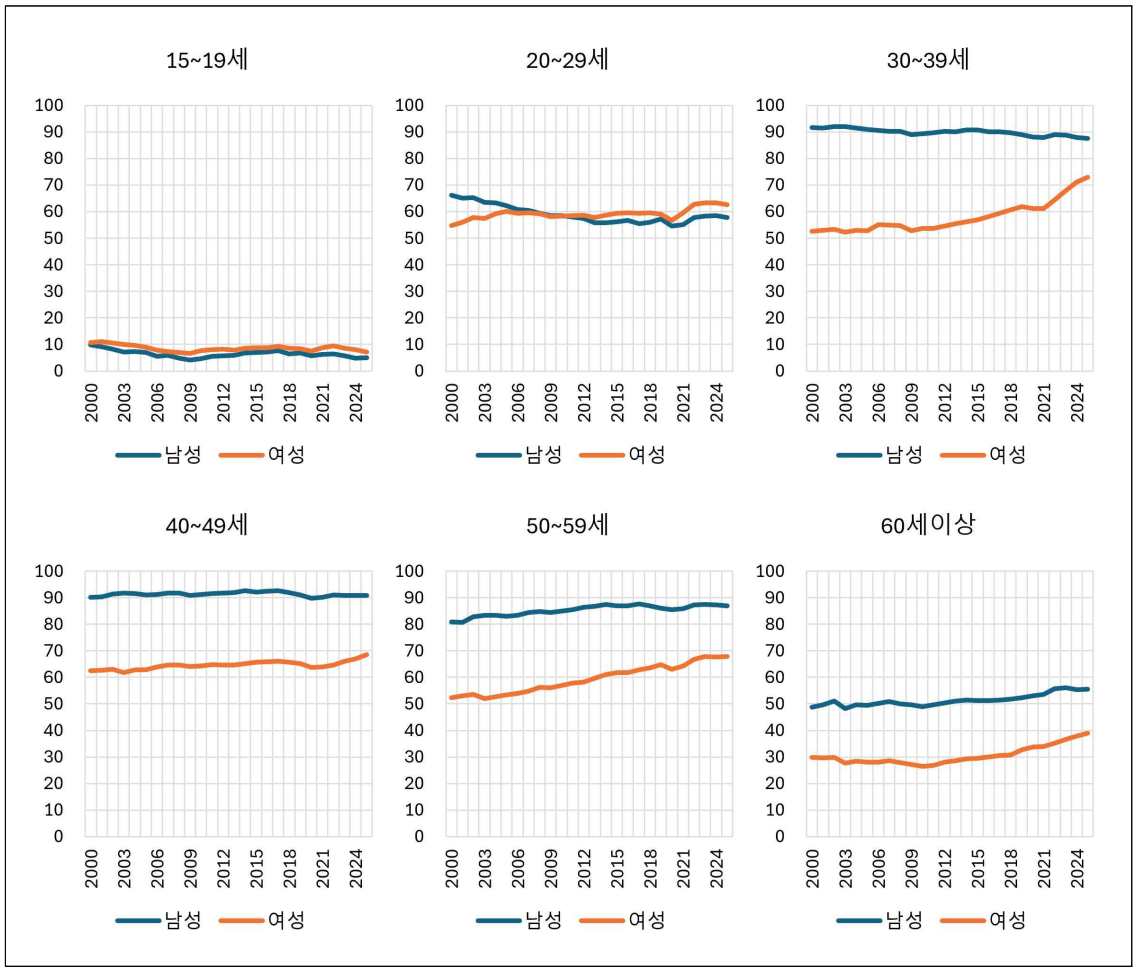
3. 고용 및 임금

고용 및 임금 영역에서는 기존 통계가 매우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되어 있다. 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규모가 집계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정보도 다양하게 집계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가 활용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임금근로자의 직종,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밖에 지역별고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행정통계 등 다양한 서베이 데이터 및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각종 통계는 성,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 등 개인 및 일자리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분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시도 수준의 집계치를 생산하고 있어 지역별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고용 및 임금 영

역에서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기보다는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는 기존 집계치를 활용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3-28> 2000~2025년 성·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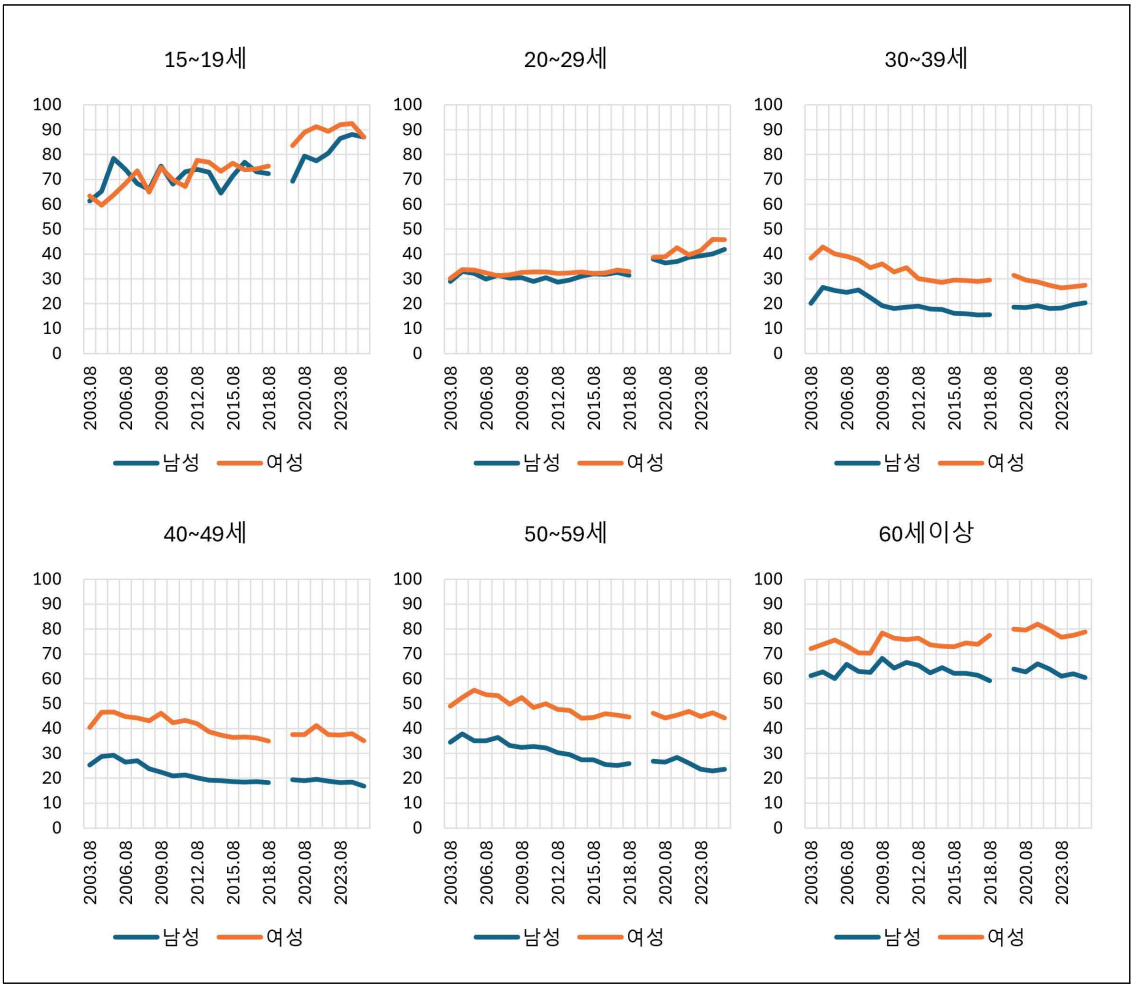
출처: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c, 국가데이터처.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고용),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의 질(임금 등)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 2장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한 성별 고용률과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았다(<그림 2-1>, <표 2-2>). <그림 3-28>에는 추가적으로 성별과 연령을 조합하여 구성한 하위집단별 고용률을 보고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중고령자와 여성의 고용률 상승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결과, 30대의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비혼·만혼 증가, 맞벌이 확산 등에 따라 청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20대 및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대학 진학률 증가, 입직 연령 상승 등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50대 이상 남성의 고용률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장년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훨씬 높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림 3-29> 2003~2025년 8월 성·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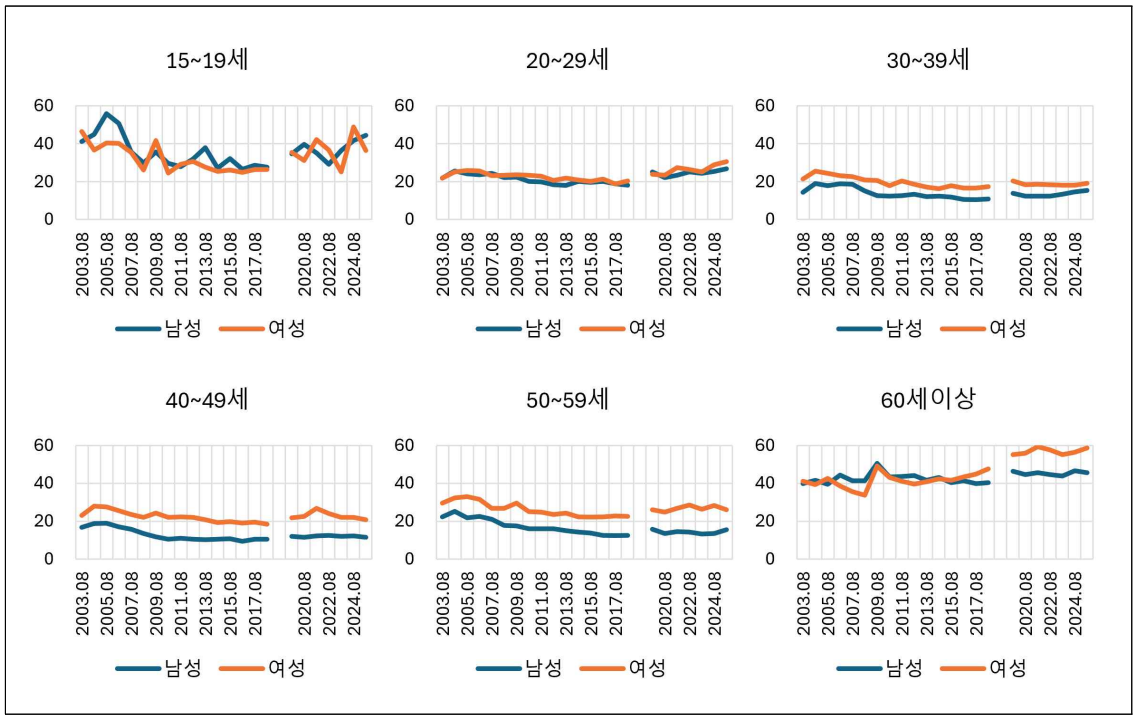


출처: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d, 국가데이터처.

그렇다면 취업한 집단의 일자리의 질은 어떨까?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근로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29>를 살펴보면, 대체로 30대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20대 이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상에서는 대체로 시간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20대 이하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에서 보듯이, 20대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주된 영향을 미쳤고,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도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림 3-32>에서 보듯이, 30대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에는 비전형 근로자 비율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0> 2003~2025년 8월 성·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한시적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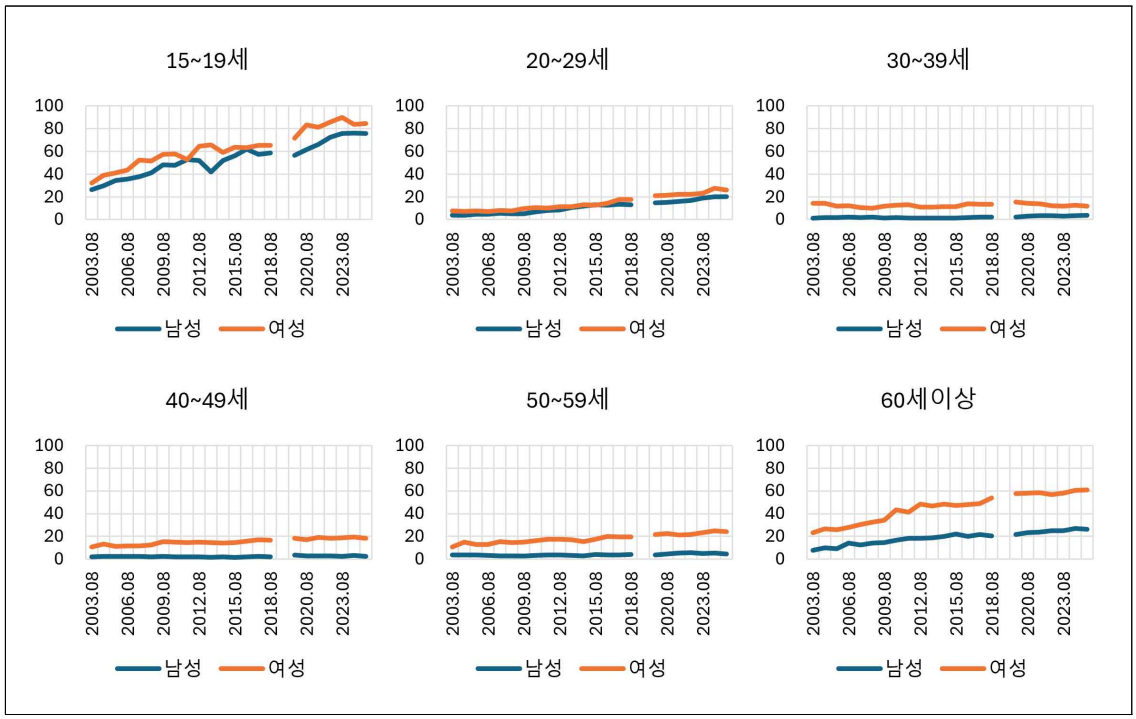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d, 국가데이터처.

<그림 3-31> 2003~2025년 8월 성·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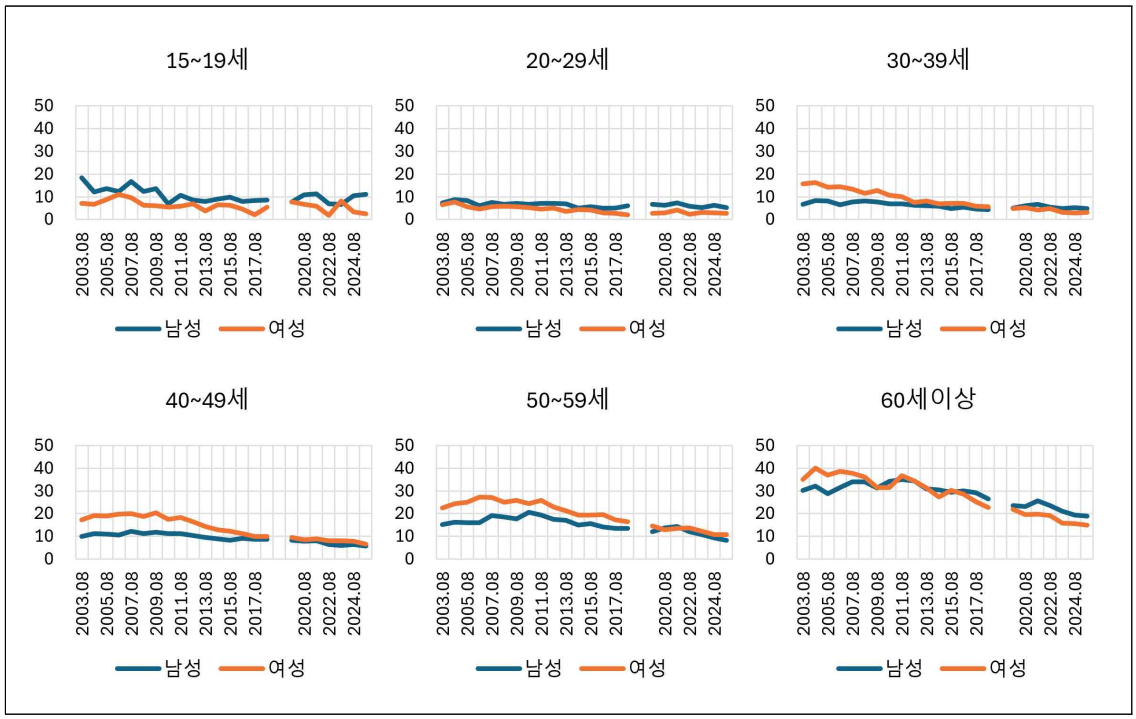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d,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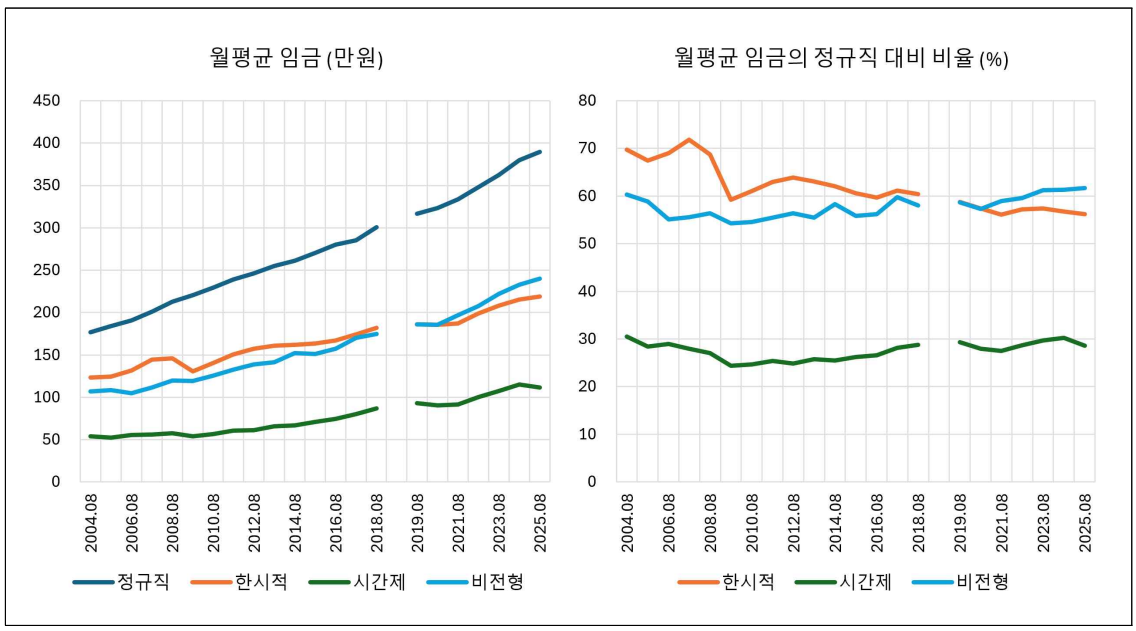
<그림 3-32> 2003~2025년 8월 성·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비전형 근로자 비율

(단위: %)



출처: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d, 국가데이터처.

<그림 3-33> 2004~2025년 8월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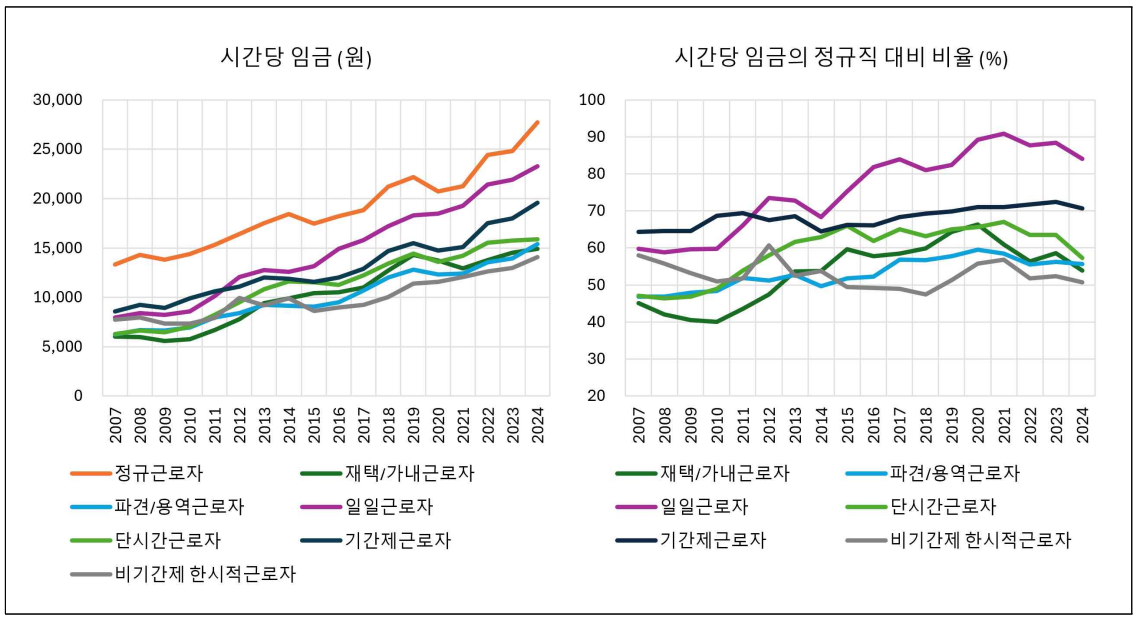


출처: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증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026e, 국가데이터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림 3-33>에서 보듯이, 2025년 8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56%, 29%, 62%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에는 짧은 근로시간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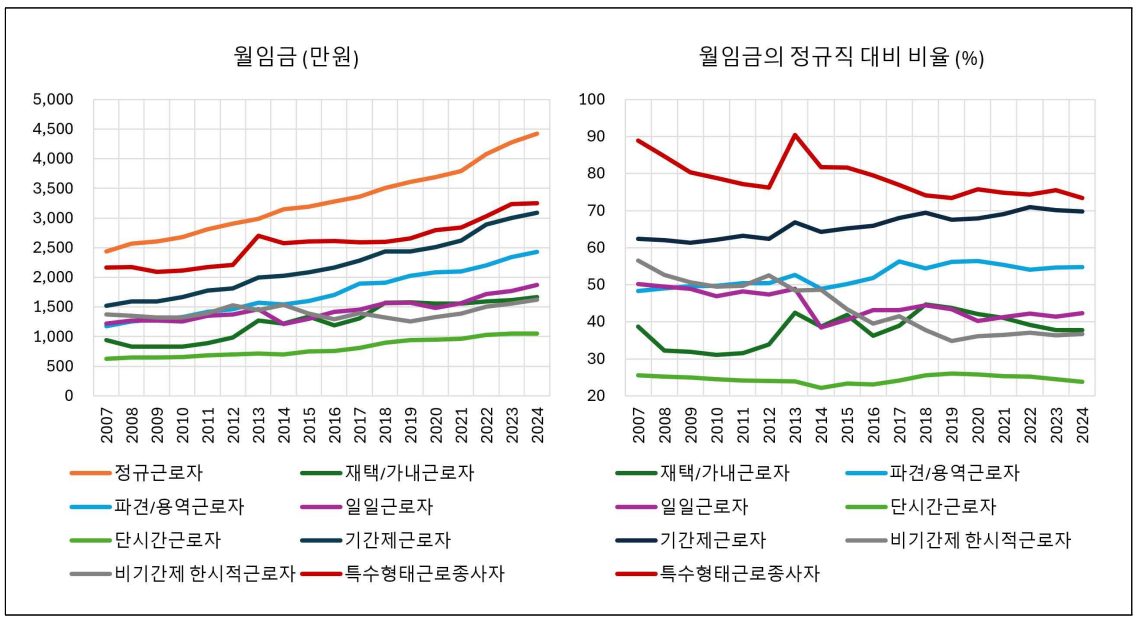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10년대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한시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수준은 하락하는 추세였다.

<그림 3-34> 2007~2024년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임금총액



출처: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 2026f, 국가데이터처.

<그림 3-35> 2007~2024년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



출처: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 2026f, 국가데이터처.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34>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보고하였다.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그림 3-35>에서 근로시간을 고려한 월임금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일근로자,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대비 월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소득 및 자산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6411지표>를 제안하고 시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기존 주요 통계들을 살펴본 결과, 고용, 임금,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의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일관된 방향으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지난 이십여년 간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어왔고, 주 52시간제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도 감소하였으며, 최근 십여년 간 일자리 만족도도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0년대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노인 빈곤율도 2011년 46.5%에서 2024년 35.9%로 크게 감소하였다.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 역시 대체로 증가하였다. 단, 여전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자산 불평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였지만 2017년부터 최근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비율은 OECD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여 가계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2010년대 이후 소득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불평등의 증가가 국민들의 체감 분배를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6411지표>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대표하는 소득분배지표를 중심으로 소득 <6411지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분석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국가가 저소득·빈곤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게 충분한 공적이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소득 <6411지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차이에서 가구 효과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에서 공적이전 효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국가-시장-가족이 어떻게 소득분배를 결정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다양한 하위집단별 분석을 통해 저소득·빈곤 위험이 높은 집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 고용률 증가,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개인시장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맞벌이 증가에 따라 가구 내에서 여성이 육아·가사를, 남성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74세 저령 노인의 빈곤율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지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노인의 고용률 증가, 재산소득 증가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 규범의 약화에 따른 노인-성인 자녀 동거 감소가 노인 빈곤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노인이 가장 빈곤하였고, 이들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의 빈곤율이 감소하는 시기에 오히려 증가하였

다. 한편, 노동시장 지위가 높은 집단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의 계층화 현상도 관찰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빈곤 위험이 상당히 컸다.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노동시장 지위의 불안정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임시·일용근로자가 근로빈곤 문제의 핵심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산 영역에서는 자산 불평등의 원인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자산 1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순자산 10분위의 부동산은 평균의 거의 5배에 달하였고,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패턴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고자산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은 자산 불평등이 증가한 2017~2025년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자산 프로파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불평등에도 부동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가구주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에서 50~60대까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70대 이후에는 은퇴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순자산 지위는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청년의 입직 및 독립 지연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자산형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분석 결과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 종사자 가구주의 순자산 평균이 전체 평균의 50~54%로 가장 작게 나타나, 노동시장 지위가 소득 지위뿐만 아니라 자산 지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역별 분석 결과, 수도권-지방 자산 격차가 뚜렷하였고 이와 같은 격차가 시간에 따라 대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불평등 증가 추세의 핵심이 취약계층과 중간계층 간의 자산 격차 확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고자산층으로의 자산 집중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및 임금 영역에서는 기존 통계가 매우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기보다는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는 기존 집계치를 활용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에 따르면, 중고령자와 여성의 고용률 상승 추세가 뚜렷하였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30대의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비혼·만혼 증가, 맞벌이 확산 등에 따라 청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20대 및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대학 진학률 증가, 입직 연령 상승 등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청장년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훨씬 높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20대 이하에서는 고용률과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3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낮았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여성의 한시적/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분석하지 못한 통계가 많다. 지역, 세부 연령집단, 가구 구성, 주거 및 재산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개인소득-가구소득,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자

산-부채, 고용, 임금 등의 실태를 더욱 자세하게 분석해볼 수 있다. 성, 연령, 종사상지위 등을 교차하여 비취업 남성 청년과 같은 구체적인 하위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분석이 복잡할수록 지표로서의 안정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및 재산 정보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지만, 경제활동 및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는 중요한 한계를 갖는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경제활동 관련 데이터는 일자리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근로소득과 가구가처분소득의 관계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임금, 근로형태, 사회보험 가입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특성에서부터 가구가처분소득에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조사 데이터 자체의 한계는 다양한 조사의 개발, 행정자료의 활용 등으로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aughton, J., & Khandker, S. R. (2009). Handbook on poverty and inequality. World Bank.

ILO. (2018). ILO Convention No. 138 At a Glance. https://www.ilo.org/sites/default/files/2024-04/C138_at_a_glance_EN.pdf

OECD. (2026). Unemployment Rat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unemployment-rate.html

OECD. (n.d.a). Hours Worked.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hours-worked.html

OECD. (n.d.b). Incidence of low and high pay.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PAY_INCIDENCE&pg=0&snb=1&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EARNINGS%40PAY_INCIDENCE&df[ag]=OECD.ELS.SAE&df[vs]=&pd=1985%2C&dq=KOR%2BOECD.LP_I....._T&ly[rw]=REF_AREA&ly[cl]=TIME_PERIOD&to[TIME_PERIOD]=false

OECD. (n.d.c). Poverty Rat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OECD. (n.d.d). Debt of Household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NAAG%40DF_NAAG&df[ag]=OECD.SDD.NAD&df[vs]=&pd=2000%2C&dq=A.AUS%2BAUT%2BBEL%2BCAN%2BCHL%2BCOL%2BCRI%2BCZE%2BDNK%2BEST%2BFIN%2BFRA%2BDEU%2BGRC%2BHUN%2BISL%2BIRL%2BISR%2BITA%2BJPN%2BKOR%2BLVA%2BLTU%2BLUX%2BMEX%2BNLD%2BNZL%2BNOR%2BPOL%2BPRT%2BSVK%2BSVN%2BESP%2BSWE%2BCHE%2BTUR%2BGBR%2BUSA.LES1M_FD4..&to[TIME_PERIOD]=false&vw=tb&lb=bt&lc=en&pg=0

고용노동부. (2021.6.24.). 고용통계, 국제기준 따라 작성…공식실업률 한계 보완위해 확장실업률 함께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9182

국가데이터처. (2025.11.27.).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2025a). 고용률.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08

국가데이터처.(2025b). 비정규직근로자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

국가데이터처.(2025c). 근로시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17&upCd=3

국가데이터처. (2025d). 일자리 만족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2&idxCd=4219

국가데이터처.(2025e). 근로여건 만족도.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D213_2009%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SSLA0812R%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f). 저임금 근로자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36

국가데이터처. (2025g). 월평균임금.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3

2

국가데이터처. (2025h).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101_ATITLE_10_A001_B001%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18N_LCEA001%26vw_cd%3DMT_ZTITLE%26orgId%3D118%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i). 소득분배지표(성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7%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j).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6%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k).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7%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l). 소득만족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8&idxCd=8006

국가데이터처. (2025m). 소득만족도(19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D212_2009%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SSIC050R%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n). 1인당 국민총소득.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8&idxCd=8086

국가데이터처. (2025o). 소비생활만족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8&idxCd=8007

국가데이터처. (2025p). 소비생활만족도(19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D212_2009%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SSIC060R%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q).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8&idxCd=8088

국가데이터처. (2025r). 순자산지니계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1_004%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AD04%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s). 순자산 10분위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HDAAD03%26orgId%3D101%26

국가데이터처. (2025t). 가구순자산.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39

국가데이터처. (2025u). 소득분위별 자산, 부채, 순자산 점유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1_004%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AD04%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5v).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40300&bid=215&act=view&list_no=439535

국가데이터처. (2026a). 성/교육 정도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MT_ZTITLE%26list_id%3DB15%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A7103S%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101%26

국가데이터처. (2026b). 청년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국가데이터처. (2026c).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B11%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A7012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6d).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101_B1A%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E7006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

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6e).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증감,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101_B1A%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E7082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6f).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101_ATITLE_10_A001_B001%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18N_LCE0001%26vw_cd%3DMT_ZTITLE%26orgId%3D118%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n.d.a). e-지방지표. 고용과 노동. 주석정보.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
국가데이터처. (n.d.b). 한국의 사회지표, 임금 5분위 배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26
김수현, 황설웅. (2023).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BOK 경제연구 제2023-23호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연구 성과와 과제. 경제와사회, 60-94.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성재민, 하은솔, 한겨레. (202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직. (2021). 가계의 자산 불평등 측정지표 알아보기. 통계포커스. 2021년 가을호. https://mods.go.kr/board.es?mid=a90102010100&bid=11918&tag=&act=view&list_no=403236&ref_bid=